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예산지급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2016. 12.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예산지급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 한국장애인개발원 [편]. -
- 서울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p. ; cm

ISBN 978-89-6921-229-0 93330 : 비매품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障礙人職業再活施設]
장애인 복지 사업 [障礙人福祉事業]

338.34-KDC6
362.4-DDC23

CIP2016030918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 구 진

연 구 책 임 : 이 혜 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1팀장)

공동연구원 : 김 민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기획팀 부연구위원)

이 수 연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1팀 연구원)

자문위원

김 용 득(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창 희(대구사이버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신 직 수(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사무국장)

최 순 영(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 중 한(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

김 지 현(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주무관)

발간사

우리나라는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지방분권화가 시행되면서 상당수의 정부 주도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그 당시 사회복지 분야사업이 주된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지방정부로 이양되며 큰 변화를 겪기 시작하였고,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에는 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며 시설의 유형이 5개 유형에서 2개로 개편되는 과정을 겪게 되면서 사실상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며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이었습니다. 복지사업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국가나 지방의 재정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사회 환경적 요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국가 및 지방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노정된 예산부족의 문제로 시설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지원받는 관리운영비는 시설의 유형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장애인이 많은 장애인근로사업장은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고 훈련장애인의 수가 많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비해 약 3배가량 높은 지원금을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지원에 대한 연구나 타당성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단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큰 차이가 없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분



류되고는 있지만, 다른 복지시설 유형과는 역할과 기능에 있어 명확한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직업재활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시도했다는 것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연구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개선에 기여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보다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본 연구의 자문위원이신 성공회대학교 김용득 교수님, 대구사이버대학교 이창희 교수님, 한국행정연구원 최순영 연구위원님,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신직수 사무국장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박종한 사무관과 김지현 주무관께도 감사드립니다.

2016년 12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황 화 성

▶ 목 차

연 구 요 약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3. 연구수행체계	6
제2장 장애인복지 예산구조 분석	7
1. 장애인복지재정 개념 및 구조	9
2. 선행연구 검토	19
3. 소결	20
제3장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예산 분석	23
1. 일반 현황 분석	25
2. 직업재활시설 예산 분석	34
3. 소결	43
제4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 현황 조사 결과	45
1. 조사개요	47
2. 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실태조사 결과	51
3. 포커스그룹인터뷰(GFI) 결과	99
4. 소결	105



제5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급 기준 제시	107
1. 예산지급 항목	109
2. 유형별 예산지원 기준	114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9
1. 결론	121
2. 정책제언	122
참고문헌	125
부록	127

표 목 차

<표 2-1> 지방자치단체 세출부문 내역	10
<표 2-2> 각 기관 및 기구에서 정의한 사회복지재정의 범위	12
<표 2-3> 사회복지 관련 세출예산 부문 및 업무	13
<표 2-4>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규모 대비 장애인복지 예산 비율	15
<표 2-5> 연도별 장애인정책국 예산 추이	16
<표 2-6> 세부항목별 장애인정책국 예산 추이	17
<표 2-7>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 현황	18
<표 2-8> 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기준 변화	21
<표 2-9> 장애정도별 고용률	21
<표 3-1> 장애인복지예산 및 직업재활시설 지원 현황	31
<표 3-2> 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 수준	36
<표 3-3> 직업재활시설 이용충족률	41
<표 4-1> 조사표 응답 기관	47
<표 4-2> 설문조사 주요내용	48
<표 4-3>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자	50
<표 4-4> 포커스그룹인터뷰 주요 내용	50
<표 4-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2
<표 4-6> 생산품목	53
<표 4-7> 2015년 중앙정부 및 시·도 지원금 평균	54
<표 4-8> 지역별 관리운영비 지원 여부	56
<표 4-9> 2015년 민간으로부터 지원받은 평균 금액	56
<표 4-10> 시설유형, 근로/훈련장애인 수별 이용장애인 보호비 지출여부	58
<표 4-11> 이용장애인 보호비 사용출처 및 비중 평균	59
<표 4-12> 시설유형, 근로/훈련장애인수 별 시설관리비 지출여부	60
<표 4-13> 시설관리비 사용출처 및 비중 평균	61
<표 4-14> 시설유형, 근로/훈련장애인수 별 직업적응훈련비 지출여부	62



<표 4-15> 직업적응훈련비 사용출처 및 비중 평균	63
<표 4-16> 시설유형, 근로/훈련장애인수 별 직업훈련비 지출여부	63
<표 4-17> 직업적응훈련비 사용출처 및 비중 평균	64
<표 4-18> 시설유형, 근로/훈련장애인수 별 직원교육훈련여비 지출여부 ..	65
<표 4-19> 직원교육훈련여비 사용출처 및 비중 평균	66
<표 4-20> 시설유형, 근로/훈련장애인수 별 생산활동지원비 지출여부	67
<표 4-21> 생산활동지원비 사용출처 및 비중평균	68
<표 4-22> 시설유형, 근로/훈련장애인수 별 기타항목 지출여부	68
<표 4-23> 시설유형, 근로/훈련장애인수 별 이용장애인 보호비 사용비율평균	70
<표 4-24> 시설유형, 근로/훈련장애인수 별 시설관리비 예산항목 사용비율 평균	71
<표 4-25> 시설유형, 근로/훈련장애인수 별 직업적응훈련비 사용비율 평균	72
<표 4-26> 시설유형, 근로/훈련장애인수 별 직업훈련비 사용비율 평균	73
<표 4-27> 시설유형, 근로/훈련장애인수 별 생산활동지원비 사용비율 평균	74
<표 4-28> 시설유형, 근로/훈련장애인수 별 직원교육훈련여비 사용비율 평균	75
<표 4-29> 시설유형, 근로/훈련장애인수 별 기타사용비율 평균	76
<표 4-30> 시설유형, 근로/훈련장애인수 별 시도예산항목 사용비율 평균	77
<표 4-31> 시설유형, 근로/훈련장애인수 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항목 사용비율 평균	78
<표 4-32> 시설유형, 근로/훈련장애인수 별 민간지원 예산항목 사용비율 평균	79
<표 4-33> 시설유형, 근로/훈련장애인수 별 자부담 예산항목 사용비율 평균	80
<표 4-34> 기본지원금 관련 의견	81
<표 4-35> 기본지원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82
<표 4-36> 인원가중 지원금액이 유형별로 지급되는 정책에 대한 의견	84
<표 4-37> 인원가중 지원금액이 유형별로 지급되는 정책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85
<표 4-38> 직업재활시설의 1인당 지원기준에 대한 의견	87
<표 4-39> 직업재활시설의 1인당 지원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89
<표 4-40> 1인당 지원기준 개선 시 적절한 방법	90
<표 4-41> 시설유형, 근로/훈련장애인수 별 장애정도에 따른 필요지원 정도	92
<표 4-42> 훈련/근로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	93
<표 4-43> 현재 지원기준 대비 훈련장애인 적정지원 기준	95
<표 4-44> 현재 지원기준 대비 근로장애인 적정지원 기준	97
<표 4-45> 적절한 기준과 지원단가	98

<표 5-1>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4	110
<표 5-2>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10 개정(안)	113
<표 5-3> 유형별 예산지원 기준 1안	116
<표 5-4> 유형별 예산지원 기준 2안	117
<표 5-5> 유형별 예산지원 기준 3안	118



ㄴ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6
[그림 2-1] 지방자치단체 세입체계	10
[그림 3-1] 시도별 장애인복지예산 및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증감율	34
[그림 3-2]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	38
[그림 3-3] 시도별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39
[그림 5-1] 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개선안	116





연 구 요 약



연구 요약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경증장애인에 비해서 특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으며, 고용에서도 장애인 평균실업률 보다 2배 이상 높고, 월임금은 절반 이하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하 ‘직업재활시설’)은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고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상생활훈련을 비롯하여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후 적응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수행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근거에 의해 예산지급 기준이 설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음.
- 이에 직업재활 현장 및 직업재활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예산확대, 관리운영비 기준 향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직업재활시설 예산지급 기준의 불합리 또는 불공정 문제를 확인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장애인복지 예산구조 분석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에 따르면, 직업재활시설의 이용장애인은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이 있음.
 - 근로장애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는 장애인을 말하며, 훈련장애



인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근로장애인 제외)을 말함.

- 따라서 근로장애인은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임금지급이 되어야 하며, 훈련장애인의 경우 소정의 훈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5).

● 직업재활시설에서 관리운영비 제공기준을 살펴보면, 시설의 종류에 따라 (장애인근로사업장 혹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예산이 지원될 뿐, 훈련장애인 및 근로장애인에 따라 차등지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 특히, 이 중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용은 장애인고용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임(김태진 외, 2014). 관련 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및 제28조」)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분석 결과,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고용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훨씬 더 낮은 고용수준을 보이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는 2005년부터 지방이양되어 관리되고 있어(보건복지부 국가복지정보포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각종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비의 예산지원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지역별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거나, 예산지원 기준의 근거가 부족하거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훈련장애인과 근로장애인에 대한 동일한 예산지원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온 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예산지급 기준이 필요한 실정임.

III. 장애인직업재활사업 분석

1. 일반현황 분석

- 직업재활시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예산은 지역별로 관리되고 있어, 총괄 예산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매년 실시하는 ‘17개 시도 장애인복지인권비교 연구’의 5년치 자료를 활용하였음. 동 자료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 18세 이상 54세 이하 등록장애인 수,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수, 직업재활시설 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장애인복지 예산 총액 및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총액을 분석함.
 - 전국의 18세 이상 54세 이하 등록장애인 수는 2015년 기준 846,595명으로 전년과 동일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은 18,073명으로 전년대비 17.43% 증가함. 또한 직업재활시설은 전년대비 9.57% 증가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역시 10.26% 증가함.
 - 장애인복지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4.84% 증가하여 3조 5,346억원이며,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총액도 44.68% 증가하여 1,891억원임.

2. 직업재활시설 예산분석

- 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8세 이상 54세 이하 등록장애인 1인당 예산지원수준은 전국 평균 223천원으로, 제주가 550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강원 445천원, 광주 353천원, 대전 349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대로 전남은 74천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세종이 109천원 순으로 등록장애인 1인당 예산지원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1인당 예산지원 수준은 제주가 19,180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이 18,287천원, 대전 17,476천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은 10,461천원으로 나타남.
- 직업재활시설 1개소당 예산지원수준은 제주가 711,794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이 604,659천원, 충남 469,809천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은 323,729천원으로 나타남.
- 장애인복지예산 대비 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수준은 강원이 15.17%로 가장 높았고, 경기 11.16%, 제주 8.45%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은 5.35%로 나타남.



- 직업재활시설 1개소당 이용장애인 수가 경기도 39.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 37.11명으로 나타남. 전국 평균은 30.95명이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1인당 이용장애인 수의 경우, 서울시가 7.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 7.15명, 대구 6.11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은 5.52명으로 나타남.

3. 소결

- 최근 5년간(2011~2015년) 장애인복지예산을 비교해보면, 매년 평균 10%이상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18세 이상 54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직업재활시설 수와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은 증가하였으며, 직업재활시설 예산 역시 증가함.
- 그러나 장애인복지예산총액 증가율에 비해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은 증가율은 낮으며, 복지예산총액의 증가에도 감소하는 등 불규칙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복지예산총액의 증가에 따라 직업재활시설의 예산도 꾸준히 증가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함.

IV.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 현황 조사 결과

- 본 연구에서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예산지급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 대상으로는 직업재활시설 대상이었으며, 총 48개소에서 설문조사에 응하였음.
 - 설문 주 내용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수입 및 지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금 관련 의견이었음.
- 예산 수입의 경우, 주로 민간보다는 중앙 및 시도로부터 받은 기관이 많았으며, 특히 인건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

- 예산 지출의 경우, 이용장애인 보호비에서 시설 이용장애인 영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관리비로는 공공요금의 비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직업훈련비의 경우, 직업적응훈련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직업훈련비의 경우, 직업훈련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직원교육훈련비로는 여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생산활동지원비의 경우 제품개발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이 외의 항목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으로는 회의비, 사회교육행사비, 회의참석비 등 회의와 관련된 항목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 설문응답 대상자들은 직업재활시설의 기본지원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으며, 인원가중 지원금 단가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음.
 - 또한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으로 구분하되, 근로사업장 지원단가 하향조정 및 보호작업장 지원단가 상향조정에 대해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고, 훈련장애인과 근로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다소 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음.
- FGI는 설문조사에서 다루지 못한 지원금 관련 의견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심층인터뷰 결과, 전반적으로 관리운영비에 대하여 금액적으로나 체계적인 면에서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었음. 먼저, 금액적인 면에서는 관리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체계적인 면에서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해 각 지자체별 기준이 달라 지원 기준의 편차가 크다는 의견이 많았음.
 - 또한 훈련 및 근로장애인의 구분 혹은 경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의 구분은 차별을 나타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임금에 있어서 차등 지급은 반대하는 입장이었음.
-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론과 FGI 조사에서 나타난 결론은 전반적으로 동일하였으나,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 지원단가와 훈련장애인과 근로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상이함을 알 수 있었음.



V.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급 기준 제시

-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질적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직업재활시설의 관리운영비 항목은 구분이 적절하지 않고, 세부항목 역시 구체적이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마다 집행 승인 범주가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직업재활시설 회계업무 기준인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제시하는 범주와도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현재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서 제시하는 관리운영비 기준을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준하여 새롭게 제시하거나 기존의 기준의 폐기하고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10을 신설하여 이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관리운영비 중 1인당 지원금액이 근로사업장의 이용장애인에게 보호작업장의 이용장애인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하는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해외사례에서도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보다 직업훈련에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장기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은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질적조사에서도 제시되었음.
- 따라서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개선방안을 3가지로 제시함
 - 1안 :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의 기본지원금은 현재와 동일, 1인당 지원금액은 근로사업장 기준(660천원)으로 조정
 - 2안 :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 기본지원금은 유형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원, 1인당 지원금액은 근로사업장 660천원, 보호작업장 330천원으로 조정
 - 3안 : 직업재활시설 기본지원금은 현재와 동일, 1인당 지원금액은 근로사업장 동일(660천원), 보호작업장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직업재활시설 기준을 토대로 1인당 지원금액 상향(231천원)

VI. 결론 및 정책제언

- 본 연구는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직업재활시설의 관리운영비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여 새로운 관리운영비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됨.
 - 직업재활시설이 법제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관리운영비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였고, 직업재활시설의 예산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십수년간 제기되어 오고 있어 새로운 기준마련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직업재활시설의 현재 재정수준(수입, 지출)을 확인하고, 운영상 관리운영비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와 질적조사를 병행함.
 - 직업재활시설에 지원되는 시·도의 지원금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실제로 민간자원, 자부담, 기타 국고사업을 통해 충당하고 있음.
 - 관리운영비의 항목도 제한적이고, 세부적으로 구분되어있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 마다의 인정 범위가 틀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이해가 부족한 것을 문제로 제시함.
- 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개선을 위해 첫째, 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항목을 다양화·구체화하고, 국고지원금으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항목을 별도 규정할 것, 둘째, 직업재활시설 운영 효율화 및 재정 효과성 제고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셋째, 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에 대한 기준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여 적절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예산지급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제1장 서론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사회의 등록장애인은 2015년 기준 약 24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장애인구 증가속도가 둔화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의 증가폭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장애인구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장애인구가 이에 따른 서비스의 다양화 및 제공 확대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였다. 이에 장애인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적절하게 제공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직업생활 등에 있어 비장애인에 비해 참여율이 낮아, 이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기회제공을 확대하여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은 낮고 실업률은 2배 이상 높아 상대적으로 고용에 있어 취약하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장애인들 가운데서도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평균 실업률 보다 2배 이상 높고, 월임금은 절반 이하 수준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장애인실태조사 등 선행연구와 관련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의 현황도 우리나라와 다르지는 않은데, 미국 노동부 통계에서도 장애인의 고용률은 17.5%, 비장애인 고용율은 65%로 3배 이상 낮으며, 중증장애인의 고용율은 경증장애인에 비해서도 더 낮은 수준(<http://www.bls.gov.news>)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증장애인들의 취업과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비장애인의 고용률은 79%인 반면, 장애인의 고용률은 49%이며, 중증(severe)장애인은 42%, 최중증(very severe)장애인은 26%(<http://www.statcan.gc.ca>)로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고용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취업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대표적 지원체계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하 ‘직업재활시설’이라 함)이라 할 수 있으며, 일



반노동시장에서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은 실제로도 전체 이용장애인의 90% 이상이 중증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상대적으로 취업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상생활훈련을 비롯하여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후적응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의 예산뿐 아니라 복지시설에 지급되는 정부재원은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시설의 기능과 유형,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해야 한다.

특히 직업재활시설은 주요기능에 따라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로 나뉘는데, 이용장애인의 수, 장애정도, 시설의 주기능 등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의 경우, 현재 지원되는 예산은 획일화된 예산항목과 지급근거가 불명확함에도 매년 동일한 체계 내에서 집행되고 있어 시설유형별 탄력적 운영에는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생산활동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근로사업장과 훈련프로그램과 생산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보호작업장에 지원되는 예산은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 유형에 따라 관리운영비와 이용장애인 수 1인당 지원금으로 구분되는데, 지원단가가 근로사업장의 경우, 보호작업장의 3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지원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근로사업장이 매우 많은 금액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지원단가가 낮은 편이어서 30명의 근로장애인이 근무하는 근로사업장의 경우, 연간 총 70,471천원을 지원받게 되고, 동일한 조건의 보호작업장의 경우, 24,438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금액은 어떻게 설정이 되었는지,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고, 시설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부족하게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 직업재활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기준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직업재활시설이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경제활동 참가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공적자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투입에 대한 적절성은 한번도 논의를 한 적이 없다.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

대되는 등 질적 성과는 여러 연구와 사업평가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나 투입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재원 투입의 적절성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재활시설의 예산지급 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불합리 또는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지급 기준을 마련하는데 주요한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분석

직업재활시설의 관리운영비는 현재 장애인복지사업안내서에 따라 제시되고 있으며, 각 시·도에서는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기준에 따라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증가되고 있으며, 직업재활시설 유형별로 지원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관련되어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인 예산 지원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제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 지원 기준 변화, 17개 시·도별 직업재활시설의 예산지원 현황 등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실제 관리운영비 지원정도와, 지원받은 예산의 지출항목(사용용도), 현재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예산에 대한 문제점과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최대한



직업재활시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수행체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예산지급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제2장 장애인복지 예산구조 분석



II. 장애인복지 예산구조 분석

1. 사회복지재정 개념 및 구조

1) 지방재정 개념 및 구조

공공재정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있는데, 국가재정은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재정을 의미한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처럼 단일 단체의 재정이 아니라 다양한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을 총망라 한 것을 의미한다(이정결, 2009).

(1)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

세입은 국가의 제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출의 재원이 될 현금의 수납을 의미한다(두산백과사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재원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지방채로 구분된다(이정결, 2009).

자주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과 지방세외 수입으로 구분되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 주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 및 징수되는 수입을 의미한다. 지방세의 종류로는 보통세, 목적세로 구분되어 총 16개의 세목이 있다. 지방세외 수입은 지방재정수입 중 자체수입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수입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총 34개의 세목이 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필요한 비용은 지방세나 지방세외수입과 같은 자체재원으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는 재정 격차가 발생함으로써 재정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간 불균등한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지역 간 형평성이 있는 행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지방재정 조정제도이다.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종류로는 국가로부터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가 있고,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이 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 등 재정상 필요한 경비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자금조달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이행기간이 1회계 연도를 초과하여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형식의 차입을 말한다.



[그림 2-1] 지방자치단체 세입체계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검색일: 2016.11.01.)

(2) 지방자치단체 세출부문

세출은 제반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금의 지급을 의미한다(두산백과사전). 지방자치단체의 세출부문으로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로 총 13개 분야이며, 총 52개의 부문이 이에 해당된다.

<표 2-1> 지방자치단체 세출부문 내역

분야	부문	명칭	분야	부문	명칭	분야	부문	명칭
010		일반공공행정(4)	070		환경보호(6)	110		산업·중소기업(6)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71	상하수도·수질		111	산업금융지원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72	폐기물		112	산업기술지원
	014	재정·금융		073	대기		113	무역 및 투자유치
	016	일반행정		074	자연		114	산업진흥·고도화

분야	부문	명칭	분야	부문	명칭	분야	부문	명칭
020		공공질서 및 안전(2)	075		해양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023		경찰	076		환경보호일반	116		산업·중소기업 일반
025		재난방재민방위	080		사회복지(8)	120		수송 및 교통(5)
026		소방	081		기초생활보장	121		도로
050		교육(3)	082		취약계층지원	123		도시철도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84		보육·가족 및 여성	124		해운·항만
052		고등교육	085		노인·청소년	125		항공·공항
053		평생·직업교육	086		노동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060		문화 및 관광(5)	087		보훈	140		국토 및 지역개발(3)
061		문화예술	088		주택	141		수자원
062		관광	089		사회복지 일반	142		지역 및 도시
063		체육	090		보건(2)	143		산업단지
064		문화재	091		보건의료	150		과학기술(3)
065		문화 및 관광일반	093		식품의약품안전	151		기술개발
			100		농림해양수산(3)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01		농업·농촌	153		과학기술일반
			102		임업·산촌	160		예비비(1)
900		기타	103		해양수산·어촌	161		예비비

출처: 행정자치부(2015)

2) 사회복지 재정의 개념 및 범위

위에서 언급하였듯, 공공재정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있는데, 국가재정은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재정이고,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세입과 세출의 운용과정을 의미하며, 지방재정에 사회복지재정이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재정은 공공부문 또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명칭이 불리어 지고 있는데, 사회보장재정, 사회복지예산, 사회복지지출, 사회보장비 등으로 불리어 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은 사회복지가 사회보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정이 수입과 지출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의 전반적인 운용과정을 사회복지재정으로 정의하였다. OECD의 경우,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로 정의하였으며, 공공 또는 민간 부문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보장 관련 현물 또는 현금급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매년 사회복지사업 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의

유출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그밖에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비용으로 정의하였으며, 치료나 예방적 의료보호를 위한 급여, 비자발적 수입의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 가족부양에 대한 보조급부가 법률적으로 승인되고 공공 혹은 준공공행정으로 전달되는 계획과 집행 및 서비스와 관련된 정부지출을 의미한다(고경환·계훈방, 1998).

사회복지 재정의 범위 역시 기관 및 기구에 따라 다른데, 먼저 OECD의 경우, 노령, 유족, 무능력 관련 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실업, 주거, 기타로 총 9개로 분류하였다. ILO는 강제적인 사회보험,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 임의적 사회보험, 의무각출 보험제도, 공공기관 예비적 기금,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채무, 국가법률로 정해진 국가 보건서비스, 가족수당, 공무원을 위한 특별제도,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출, 전쟁 희생자를 위한 지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협의로 결정된 사업 및 직업제도로 11가지로 분류하였으며, IMF는 질병 및 장애, 노인, 유족, 가족과 어린이, 실업, 주택, 기타 사회소외계층, 사회보호 연구개발, 기타 사회보호로 9가지로 범위를 보았다.

<표 2-2> 각 기관 및 기구에서 정의한 사회복지재정의 범위

기관 및 기구	범위	
OECD	① 노령 ② 유족 ③ 무능력 관련 급여 ④ 보건 ⑤ 가족	⑥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⑦ 실업 ⑧ 주거 ⑨ 기타
ILO	① 강제적인 사회보험 ②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 임의적 사회보험 ③ 의무각출 보험제도 ④ 공공기관의 예비적 기금 ⑤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채무 ⑥ 국가 법률로 정해진 국가 보건서비스	⑦ 가족수당 ⑧ 공무원을 위한 특별제도 ⑨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출 ⑩ 전쟁 희생자를 위한 지출 ⑪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협의로 결정된 사업 및 직업제도
IMF	① 질병 및 장애 ② 노인 ③ 유족 ④ 가족과 어린이 ⑤ 실업	⑥ 주택 ⑦ 기타 사회소외계층 ⑧ 사회보호 연구개발 ⑨ 기타 사회보호

출처: 함영진·김경준·박규범·이영글·이성휘(2012)
윤영진(2006)

지자체의 재정 구성은 2008년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로 개편되어,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총 5장 16관)으로 이루어진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하면서 사회복지비 부문이 신설되었고, 사회복지비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순으로 하는 범주가 생겨 전국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2016년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세출예산 부문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이 있으며, 각 부문에 해당하는 업무 및 정책사업은 다음의 표와 같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중 장애인복지재정과 관련된 예산 부문으로는 취약계층 지원과 노동이 있다.

<표 2-3> 사회복지 관련 세출예산 부문 및 업무

분야	부문	부문에 해당하는 업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81 기초생활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최저 생계 및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업무 ■ 기초생활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자활지원, 기초보장지원 등 (제외) 지방공공근로사업(086 노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082 취약계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 사회복지 종합지원 정책 ■ 장애인·불우아동등 사회복지(시설물설치 포함) ■ 복지회관운영 ■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회복지 지원정책 ■ 사회복지 사업평가 등 ■ 지역사회복지 ■ 노숙자보호, 부랑인시설보호, 의사상자 및 재해구호 (제외)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 (016 일반행정)	취약계층 아동 보호 장애인 복지 증진 부랑인 보호 및 지원
	084 보육·가족 및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윤락행위 방지,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개발, 아동·보육 관련 업무 ■ 여성복지(시설물설치 포함) ■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 여성단체 지원 등 ■ 남녀차별금지, 여성인력 양성 등 여성의 권익증진 ■ 보육인프라 구축, 보육시설 운용, 보육료 지원 	보육가족 지원 여성 복지 증진



분야	부문	부문에 해당하는 업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윤리교육, 가족계획, 가정의례 등 가족문화 ■ 모·부자 복지 등 	
	085 노인·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에 따른 제반 위험(소득상실, 사회생활 참여 저하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업무 ■ 청소년 육성·보호·활동지원을 위한 업무 ■ 노인 생활안정, 노인 의료보장, 노인 일자리 지원 ■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물설치 포함) ■ 노인복지관운영, 장묘사업(묘지공원 조성 포함) 등 ■ 청소년 육성,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보호 ■ 청소년 시설 용자, 기타 청소년 관련 지원 	노인 복지 증진 청소년 보호 및 육성
	086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조건 개선,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 보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고용정책 및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노동에 관한 업무 ■ 근로자지원등 노정관리 ■ 실업대책, 고용촉진, 공공근로사업등 ■ 노동행정, 지방노동관서 운영, 노동위원회 ■ 고용안정, 고용안정응용지원, 고용알선, 고용환경개선 ■ 능력개발, 능력개발응용지원, 직업능력개발 ■ 고용보험지원·반환, 고용보험 연구개발, 직업재활지원 ■ 장애인근로자 용자, 장애인시설 설치비용 용자 ■ 기능경기대회 지원, 고용정보 관리, 직업훈련 지원 ■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관련 업무, 생활안정대부사업 ■ 근로자복지지원, 근로자휴양시설지원, 실직자점포용자 ■ 기타 고용정책 수립 및 시행 업무 ■ 공무원노조관련 업무 	고용 촉진 및 안정 근로자 복지 증진
	087 보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및 예우 ■ 국가유공자 등 의료복지 지원 및 요양보호 ■ 제대군인 사회복지지원 ■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국민 호국정신 함양 ■ 호국영웅 선양사업 ■ 호국보훈안보단체 지원 ■ 국가유공자 숭모사업 및 묘소 단장사업 ■ 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 등 편찬사업 ■ 기타 보훈정책수립 및 시행 업무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088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건설, 수요자응용지원 ■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주택개량 ■ 서민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매입임대 ■ 재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주택관련 금융지원 	주거 환경 개선 서민 주거 안정
	089 사회복지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081)부터 주택(088)까지 속하지 않는 사항 	
	091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제반업무 ■ 의료원·보건소·진료소등 운영, 수도불소화사업 ■ 응급의료정보센터, 정신보건센터, 보건환경연구원등 운영 ■ 공중보건 및 공중위생관리, 전염병역학조사·관리 	방역·구호 건강 증진 의료원등

분야	부문	부문에 해당하는 업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테러감시, 한센병·희귀난치성환자 관리 ■ 보건관련 연구개발비, 기타 보건행정비 등 	병원운영지원 보건환경연구원운영
	093 식품의약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약안전에 관한 행정·관리·감독 및 규제 ■ 식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 의약외품, 마약등 	식품·위생 관리 의약품 관리

출처: 행정자치부(2015)

3) 장애인복지재정

2016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액은 1,876,213백만원으로 총 예산 대비 장애인 복지예산은 5.65%로 나타났다. 또한 총 지출액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은 3.44%로 2015년 3.45%에서 0.01%p 감소하였으며, 총 예산 대비 장애인 복지예산은 5.65%로 2015년 5.55%보다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 규모 대비 장애인복지 예산 비율

(단위: 억원, 백만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지출액(A)	310,195	335,694	366,928	410,673	468,995	534,725	545,436
총계(B)	194,736	206,922	221,815	254,056	294,705	332,300	331,784
예산							
일반회계	192,169	204,952	219,745	251,761	292,416	327,236	326,938
특별회계	2,567	1,970	2,070	2,295	2,289	5,064	4,846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규모	115,459	128,772	145,113	156,617	174,290	202,425	226,652
기금							
건강증진기금	17,630	17,960	18,718	19,007	20,030	27,357	31,834
국민연금기금	95,807	109,102	124,405	135,534	152,187	172,775	192,507
응급의료기금	2,022	1,710	1,990	2,076	2,073	2,293	2,311
총계(C)	656,216	806,974	903,957	1,057,306	1,244,820	1,845,876	1,876,213
장애인 복지 예산							
장애인 생활 안정지원	639,052	789,810	886,623	1,038,572	1,225,528	1,825,234	1,856,284
장애인 재활지원	17,164	17,164	17,334	18,734	19,292	20,642	19,929
비율							
총 지출액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C/A)	2.12	2.40	2.46	2.57	2.65	3.45	3.44
총 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C/B)	3.37	3.90	4.08	4.16	4.22	5.55	5.65

출처: 조윤화 외(2015)
보건복지부(2016a)

2015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의 예산액은 1,873,266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7.3% 증가하였으며, 장애인정책국의 예산은 연평균 18.0%씩 증가하고 있다.

〈표 2-5〉 연도별 장애인정책국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예산액	694,582	814,074	937,649	1,026,274	1,271,434	1,873,266	
증가액	-	119,492	123,575	88,625	245,160	601,832	18.0
증가율	-	17.2	15.2	9.5	23.9	47.3	

2015년 세부항목 중 장애인연금 예산액이 561,843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 467,892백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신규) 428,013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2-6〉 세부항목별 장애인정책국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4	2015	증감액	증감율
합계	1,271,434	1,873,266	601,832	47.3
(일반회계) 계	1269129	1,870,185	601,056	47.4
장애인정책국기본경비(총액)	103	103	-	-
장애인정책국기본경비(비총액)	118	118	-	-
장애인의료지원	24,088	24,088	-	-
장애수당(기초)	52,905	69,906	17,001	32.1
장애수당(차상위)	52,689	61,381	8,692	16.5
장애등급심사제도	23,477	26,405	2,928	12.5
장애인실태조사	1,171	-	△1,171	순감
장애인연금	466,005	561,843	95,838	20.6
장애인자녀교육지원	747	600	△147	△19.7
장애인보조기구지원	3,425	3,425	-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4,660	5,280	620	13.3
여성장애인지원사업	1,532	2,038	506	33.0
장애인지원관리	668	648	△20	△3.0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405	551	146	36.0

구분	2014	2015	증감액	증감율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544	544	-	-
발달장애인지원	1,158	3,999	2,841	245.3
장애인자립자금이자 및 손실보전금지원	1,068	800	△268	△25.1
장애인활동지원	428,454	467,892	39,438	9.2
장애아동가족지원	72,458	75,665	3,207	4.4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41,101	37,063	△4,038	△9.8
장애인거주시설 운용지원(신규)	-	428,013	428,013	순증
장애인단체지원	7,550	7,750	200	2.6
장애인개발원지원	5,085	5,228	143	2.8
장애인일자리지원	60,426	66,203	5,777	9.6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촉진	1,670	2,320	650	38.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17,622	18,322	700	4.0
(농특) 계	1,710	1,516	△194	△11.3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1,710	1,516	△194	△11.3
(증진기금) 계	595	1,565	970	163.0
재활병원건립(신규)	-	1,000	1,000	순증
권역재활병원	595	565	△30	△5.0
공공재활프로그램운용지원				

2014년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액은 국고 1,192,890백만원, 지방비 645,229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중 시각장애인안마사의 국고보조율이 80%로 가장 높았다. 지방은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발달장애인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중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국고보조율이 80%로 가장 높았다.

〈표 2-7〉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 현황

세부사업	국고보조율 (서울/지방)	2014년	
		국고	지방비
계		1,192,890	645,229
장애인의료비지원	50/80	24,088	7,620
장애수당(기초)	50/70	69,906	34,621
장애수당(차상위 등)	40/70	61,381	30,418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	30/50	503	554
장애인연금	50/70	561,443	287,453
장애인자녀학비지원	50/80	600	222
장애인보조기구지원	(보조기구교부사업) 80/80	2,355	1,444



세부사업	국고보조율 (서울/지방)	2014년	
		국고	지방비
	(사례관리사업)50/50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60	3,660	5,490
	(교육지원)80/80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출산지원)50/70	2,038	863
발달장애인 지원	50/80	2,801	1,265
장애인활동지원	50/70	452,727	233,583
	발달장애인의 발달		
장애아동가족지원	양육지원30/70	75,039	37,497
	(거주시설)50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의료재활시설)30	41,055	39,686
	(생산업재시설)30-40		
	(직업재활시설)50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50/70	427,763	205,762
	(행정도우미)30/50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30/50	65,474	63,955
	(시각장애인안바사)80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농특)	50	1,710	1,710
관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기금)	20	565	141
재활병원 건립(기금)	50	988	988

2. 선행연구 검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에 대한 근거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는 2004년부터 매년 3.6%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운영비를 증액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보호고용을 담당하는 직업재활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기본적인 시설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향지원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보건복지부, 2016b),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박철현 외(2013)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업재활시설 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직업재활시설 예산 결정 요인과 지방자치단체유형별로 예산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결과적으로, 직업재활시설 예산비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점증적 요인의 전년도 직업재활시설 예산 비율과 복지수요 요인의 직업재활시설 수로 나타나,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사업예산의 증감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이므로, 직업재활시설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증가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기존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효

울성과 가치의 재평가에 의한 예산반영이나 사회복지 예산과는 다른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엄홍식(2005)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하청생산에 관한 연구’에서 직업재활시설은 그동안 시설의 규모 또는 생산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 예산의 분배와 지원방식이 문제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혜경 외(2014)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및 운영개선 연구’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시설 유형별 평균총액은 보호작업장 584백만원, 근로사업장 3,293백만원으로 약 5배 이상 근로사업장의 예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예산지원의 평균 총액은 전국 평균은 911백만원이나, 제주지역은 1,430백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 321백만원, 세종 378백만원 등으로 지역별 예산규모도 약 4배가량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의 운영지원을 현실적으로 인상’시켜달라는 의견과 ‘시설의 예산지원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4.66점(5점 만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기준에 대한 검토와 재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애로사항으로 ‘시설운영재정’을 ‘전문인력부족’과 함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16)은 ‘2016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에서 2005년부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매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비교¹⁾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매년 지역간 격차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복지 분야의 지역 간 수준 격차는 전년보다 약간 감소하였으나 전국 평균은 2.1점 상승하여 전국 평균 점수는 48.7점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 분야 중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분야 전국 평균은 52.9점으로 전년 대비 2점 상승하였고, 경기, 제주, 대구, 광주, 대전, 부산 등의 순으로 나타남. 교육 분야는 평균점수가 전년 대비 1.88점 하락하였으며, 최근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1) 복지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지원 등 5개 영역 40개 지표를 활용함.



3. 소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에 따르면, 직업재활시설의 이용장애인은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이 있다. 근로장애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는 장애인을 말하며, 훈련장애인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근로장애인 제외)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장애인은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임금지급이 되어야 하며, 훈련장애인의 경우 소정의 훈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5).

직업재활시설에서 관리운영비 제공기준을 살펴보면, 시설의 종류에 따라(장애인근로사업장 혹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예산이 지원될 뿐, 훈련장애인 및 근로장애인에 따라 차등지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표 2-8> 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기준 변화

시설종류	지원구분	2001년도 지원단가	2002년도 지원단가	2003년도 지원단가	2004년도 지원단가	2016년도 지원단가
근로작업시설	시설당	3,000만원	30,00만원	32,00만원	3,315만원	5,067만원
	1인당	41만원	41만원	43만원	44만원	64만원
보호작업시설 등	시설당	6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1,036만원	1,588만원
	1인당	6만원	8만원	12만원	12만원	18만원

특히, 이 중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은 장애인고용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김태진 외, 2014). 관련 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및 제28조」)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분석 결과,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고용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훨씬 더 낮은 고용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9> 장애정도별 고용률

2011년	장애정도별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근로자수(명)	32,254	121,701
비율 (%)	21.0	79.0

출처: 고용노동부(2015)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는 2005년부터 지방이양되어 관리되고 있어(보건복지부 국가복지정보포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비의 예산지원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지역별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거나, 예산지원기준의 근거가 부족하거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훈련장애인과 근로장애인에 대한 동일한 예산지원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온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예산지급 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예산지급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제3장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예산 분석



Ⅲ.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예산 분석

1. 일반 현황 분석

직업재활시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예산은 지역별로 관리되고 있으며, 2011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 18세 이상 54세 이하 등록장애인 수,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수, 직업재활시설 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장애인 복지 예산 총액 및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총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5년 현재 18세 이상 54세 이하 등록장애인은 132,544명으로 전년대비 동일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은 3,942명으로 전년대비 1.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은 121개소로 전년대비 1.63% 감소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또한 532명으로 전년대비 14.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 예산 총액은 749,560,749천원으로 전년대비 8.06% 증가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총액 또한 27,160,566천원으로 전년대비 5.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직업재활시설 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는 감소한 반면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수,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의 2015년 현재 18세 이상 54세 이하 등록장애인은 54,643명으로 전년대비 동일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은 870명으로 전년대비 17.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은 30개소로 전년대비 15.38% 증가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또한 156명으로 전년대비 34.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 예산 총액은 253,638,537천원으로 전년대비 22.08% 증가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총액 또한 8,236,156천원으로 전년대비 42.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직업재활시설 수,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의 2015년 현재 18세 이상 54세 이하 등록장애인은 42,360명으로 전년대비 동일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은 990명으로 전년대비 10.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은 37개소로 전년대비 12.12% 증가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또한 162명으로 전년대비



10.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예산 총액은 239,117,480천원으로 전년대비 23.87% 증가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총액 또한 10,512,494천원으로 전년대비 26.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구광역시 경우 직업재활시설 수,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의 2015년 현재 18세 이상 54세 이하 등록장애인은 49,602명으로 전년과 동일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은 826명으로 전년 대비 7.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은 28개소로 전년 대비 3.45% 감소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또한 139명으로 전년대비 9.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예산 총액은 200,375,516천원으로 전년대비 8.94% 증가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총액 또한 5,981,866천원으로 전년대비 28.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천광역시의 경우 직업재활시설 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수,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 2015년 현재 18세 이상 54세 이하 등록장애인은 25,611명으로 전년과 동일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은 626명으로 전년 대비 3.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은 20개소로 전년과 동일하였으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는 118명으로 전년대비 4.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예산 총액은 167,945,613천원으로 전년대비 34.92% 증가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총액 또한 9,039,216천원으로 전년대비 47.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광주광역시의 경우 직업재활시설 수는 전년과 동일하였으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는 감소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수,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 2015년 현재 18세 이상 54세 이하 등록장애인은 26,014명으로 전년과 동일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역시 519명으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은 15개소로 전년과 동일하였으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는 126명으로 전년대비 0.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예산 총액은 171,217,348천원으로 전년대비 11.23% 증가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총액 또한 9,069,890천원으로 전년대비 9.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전광역시의 경우 직업재활시설 수와 직업재활시

설 이용자 수는 전년과 동일하였으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는 감소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의 2015년 현재 18세 이상 54세 이하 등록장애인은 18,560명으로 전년과 동일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은 273명으로 전년 대비 1.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은 14개소로 전년과 동일하였으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는 55명으로 전년 대비 3.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예산 총액은 91,133,459천원으로 전년대비 19.28% 증가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총액 또한 4,577,793천원으로 전년대비 58.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울산광역시의 경우 직업재활시설 수는 전년과 동일하였으나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는 감소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수,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13년도 처음으로 시설이 설치되었으며 2015년 현재 18세 이상 54세 이하 등록장애인은 297,457명으로 전년과 동일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은 93명으로 전년 대비 69.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은 3개소로 전년대비 200% 증가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역시 13명으로 전년대비 160.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 예산 총액은 18,515,4502원으로 전년대비 53.09% 증가하였으나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총액은 297,457원으로 전년과 동일하였다. 즉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수, 직업재활시설 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총액은 전년과 동일하였다.

경기도의 2015년 현재 18세 이상 54세 이하 등록장애인은 189,709명으로 전년과 동일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은 4,602명으로 전년대비 84.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은 117개소로 전년대비 32.95% 증가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역시 908명으로 44.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 예산 총액은 460,648,354천원으로 32.27% 증가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총액 또한 51,424,999천원으로 전년대비 182.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기도의 경우 직업재활시설 수,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2015년 현재 18세 이상 54세 이하 등록장애인은 30,126명으로 전년과 동일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은 733명으로 전년대비 1.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은 33개소로 전년대비 2.94% 감소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역시 154명으로 4.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 예산 총액은 88,365,729천원으로 전년대비 24.73% 감소하였으나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총액은 13,404,714명으로 94.91% 증가하였다. 즉 강원도의 경우 직업재활시설 수,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총액은 증가하였다.

충청북도의 2015년 현재 18세 이상 54세 이하 등록장애인은 31,556명으로 전년과 동일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은 720명으로 전년대비 9.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은 22개소로 전년대비 15.79% 증가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역시 146명으로 전년대비 11.45% 증가하였다. 장애인 복지 예산 총액은 143,773,251천원으로 전년대비 1.61% 감소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총액은 6,215,898천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청북도의 경우 직업재활시설 수,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총액은 전년과 동일하였다.

충청남도의 2015년 현재 18세 이상 54세 이하 등록장애인은 40,158명으로 전년과 동일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은 558명으로 전년대비 8.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은 16개소로 전년대비 5.88% 감소하였으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는 107명으로 전년대비 4.9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 예산 총액은 132,216,226천원으로 전년대비 13.18% 감소하였으나,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총액은 7,516,944천원으로 전년대비 11.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청남도의 경우 직업재활시설 수는 감소하였으나,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총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2015년 현재 18세 이상 54세 이하 등록장애인은 39,253명으로 전년과 동일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은 520명으로 전년대비 5.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은 19개소로 전년과 동일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역시 95명으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 예산 총액은 245,667,384천원으로 전년대비 57.59% 증가하였고, 직업 재활시설 지원 예산 총액은 6,274,132천원으로 전년대비 3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라북도의 경우 직업재활시설 수,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 2015년 현재 18세 이상 54세 이하 등록장애인은 39,428명으로 전년과 동일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은 372명으로 전년대비 1.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은 17개소로 전년과 동일하였으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는 70명으로 전년대비 6.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 예산 총액은 156,282,376천원으로 전년대비 5.12% 증가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총액 역시 2,919,960천원으로 전년대비 10.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라남도의 경우 직업재활시설 수는 전년과 동일하였으나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수는 감소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의 경우 2015년 현재 18세 이상 54세 이하 등록장애인은 51,885명으로 전년과 동일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은 1,059명으로 전년대비 6.65% 증가하였다. 직업재활시설은 37개소로 전년대비 15.63% 증가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역시 70명으로 전년대비 6.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 예산 총액은 185,704,712천원으로 전년대비 64.44% 증가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총액 역시 11,018,511천원으로 전년대비 18.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상북도의 경우 직업재활시설 수,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의 경우 2015년 현재 18세 이상 54세 이하 등록장애인은 60,765명으로 전년과 동일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은 1,030명으로 전년대비 0.96% 감소하였다. 직업재활시설은 46개소로 전년대비 24.32% 증가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역시 209명으로 전년대비 15.47% 증가하였다. 장애인 복지 예산 총액은 154,595,748천원으로 전년대비 11.97% 감소하였으나,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총액은 9,000,775천원으로 전년대비 5.83% 증가하였다. 즉 경상남도의 경우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수는 감소하였고, 직업재활



시설 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015년 현재 18세 이상 54세 이하 등록장애인은 11,645명으로 전년과 동일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은 334명으로 전년대비 2.45% 증가하였다. 직업재활시설은 9개소로 전년과 동일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는 88명으로 전년대비 10.00% 증가하였다. 장애인 복지 예산 총액은 75,840,042천원으로 전년대비 0.64% 증가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총액은 6,406,143천원으로 전년대비 2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직업재활시설 수는 전년과 동일하였으나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18세 이상 54세 이하 등록장애인 수는 2015년 기준 846,595명으로 전년과 동일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은 18,073명으로 전년대비 17.43% 증가하였다. 직업재활시설은 584개소로 전년대비 9.57% 증가하였으며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또한 3,277명으로 전년대비 10.26% 증가하였다. 장애인복지예산 총액의 경우 3,534,597,995천원으로 전년대비 14.84% 증가하였으며,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총액의 경우에도 189,057,517천원으로 전년대비 44.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장애인복지예산 및 직업재활시설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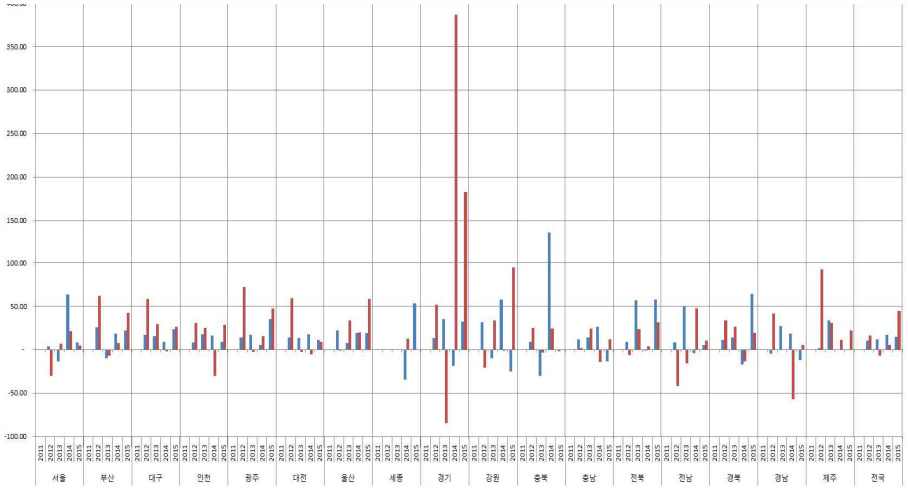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A. 18세~54세 등록장애인 (명)																		
11'	153,033	63,701	47,515	55,866	27,740	28,822	20,546		209,747	34,981	35,403	46,434	44,367	44,924	58,353	68,507	12,211	952,150
12'	145,905 (-4.66)	60,431 (-5.13)	45,613 (-4.00)	53,829 (-3.65)	27,030 (-2.56)	27,824 (-3.46)	19,854 (-3.37)		202,859 (-3.28)	33,300 (-4.81)	33,868 (-4.34)	42,904 (-7.60)	42,605 (-3.97)	43,189 (-3.86)	56,165 (-3.75)	65,817 (-3.93)	11,945 (-2.18)	913,138 (-4.10)
13'	139,199 (-4.60)	57,611 (-4.67)	44,346 (-2.78)	51,809 (-3.75)	26,336 (-2.57)	27,037 (-2.83)	19,260 (-2.99)	2,452	196,536 (-3.12)	31,725 (-4.73)	32,708 (-3.43)	41,710 (-2.78)	41,031 (-3.69)	41,492 (-3.93)	54,025 (-3.81)	63,333 (-3.77)	11,818 (-1.06)	882,428 (-3.36)
14'	132,544 (-4.78)	54,643 (-5.15)	42,360 (-4.48)	49,602 (-4.26)	25,611 (-2.75)	26,014 (-3.78)	18,560 (-3.63)	2,736 (11.58)	189,709 (-3.47)	30,126 (-5.04)	31,556 (-3.52)	40,158 (-3.72)	39,253 (-4.33)	39,428 (-4.97)	51,885 (-3.96)	60,765 (-4.05)	11,645 (-1.46)	846,595 (-4.06)
15'	132,544 (-)	54,643 (-)	42,360 (-)	49,602 (-)	25,611 (-)	26,014 (-)	18,560 (-)	2,736 (-)	189,709 (-)	30,126 (-)	31,556 (-)	40,158 (-)	39,253 (-)	39,428 (-)	51,885 (-)	60,765 (-)	11,645 (-)	846,595 (-)
B.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명)																		
11'	2,944	432	680	718	446	477	246		2,128	729	573	480	604	387	779	651	219	12,493
12'	3,615 (22.79)	668 (54.63)	787 (15.74)	747 (4.04)	538 (20.63)	476 (-0.21)	256 (4.07)		2,204 (3.57)	730 (0.14)	573 (-)	438 (-8.75)	654 (8.28)	318 (-17.83)	964 (23.75)	860 (32.10)	304 (38.81)	14,132 (13.12)
13'	3,374 (-6.67)	708 (5.99)	838 (6.48)	766 (2.54)	566 (5.20)	491 (3.15)	241 (-5.86)	55	2,046 (-7.17)	744 (1.92)	634 (10.65)	521 (18.95)	498 (-23.85)	338 (6.29)	970 (-0.62)	936 (8.84)	325 (6.91)	14,051 (-0.57)
14'	3,889 (15.26)	738 (4.24)	892 (6.44)	766 (-)	607 (7.24)	519 (5.70)	276 (14.52)	55 (-)	2,497 (22.04)	743 (-0.13)	664 (4.73)	514 (-1.34)	494 (-0.80)	377 (11.54)	993 (2.37)	1,040 (11.11)	326 (0.31)	15,390 (9.53)
15'	3,942 (1.36)	870 (17.89)	990 (10.99)	826 (7.83)	626 (3.13)	519 (-)	273 (-1.09)	93 (69.09)	4,602 (84.30)	733 (-1.35)	720 (9.34)	558 (8.56)	520 (5.26)	372 (-1.33)	1,059 (6.65)	1,030 (-0.96)	334 (2.45)	18,073 (17.4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예산지급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C. 직업재활시설 설치 수 (개소)																		
11'	106	23	30	26	14	14	12		67	33	16	14	18	16	30	32	8	459
12'	109 (2.83)	22 (-4.35)	31 (3.33)	29 (11.54)	19 (35.71)	14 (-)	12 (-)		68 (1.49)	33 (-)	16 (-)	15 (7.14)	18 (-)	15 (-6.25)	33 (10.00)	37 (15.63)	9 (12.50)	480 (4.58)
13'	115 (5.50)	26 (18.18)	33 (6.45)	28 (-3.45)	18 (-5.26)	15 (7.14)	12 (-)	1	83 (22.06)	35 (6.06)	18 (12.50)	17 (13.33)	19 (5.56)	15 (-)	33 (-)	37 (-)	9 (-)	514 (7.08)
14'	123 (6.96)	26 (-)	33 (-)	29 (3.57)	20 (11.11)	15 (-)	14 (16.67)	1	88 (6.02)	34 (-2.86)	19 (5.56)	17 (-)	19 (-)	17 (13.33)	32 (-3.03)	37 (-)	9 (-)	533 (3.70)
15'	121 (-1.63)	30 (15.38)	37 (12.12)	28 (-3.45)	20 (-)	15 (-)	14 (-)	3 (200.0)	117 (32.95)	33 (-2.94)	22 (15.79)	16 (-5.88)	19 (-)	17 (-)	37 (15.63)	46 (24.32)	9 (-)	584 (9.57)
D.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명)																		
11'	398	91	78	79	46	67	42		386	102	90	57	75	71	114	113	31	1,840
12'	531 (33.42)	112 (23.08)	122 (56.41)	130 (64.56)	105 (128.26)	115 (71.64)	50 (19.05)		504 (30.57)	128 (25.49)	104 (15.56)	76 (33.33)	88 (17.33)	56 (-21.13)	172 (50.88)	178 (57.52)	78 (151.61)	2,549 (38.53)
13'	403 (-24.11)	107 (-4.46)	138 (13.11)	137 (5.38)	106 (0.95)	116 (0.87)	53 (6.00)	5	504 (-)	153 (19.53)	117 (12.50)	102 (34.21)	96 (9.09)	57 (1.79)	170 (-1.16)	180 (1.12)	80 (2.56)	2,524 (-0.98)
14'	622 (54.34)	116 (8.41)	146 (5.80)	154 (12.41)	124 (16.98)	127 (9.48)	57 (7.55)	5 (-)	629 (24.80)	162 (5.88)	131 (11.97)	102 (-)	95 (-1.04)	66 (15.79)	175 (2.94)	181 (0.56)	80 (-)	2,972 (17.75)
15'	532 (-14.47)	156 (34.48)	162 (10.96)	139 (-9.74)	118 (-4.84)	126 (-0.79)	55 (-3.51)	13 (160.00)	908 (44.36)	154 (-4.94)	146 (11.45)	107 (4.901)	95 (-)	70 (6.06)	199 (13.71)	209 (15.47)	88 (10.00)	3,277 (10.2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E. 장애인 복지 예산 총액 (천원)																		
11'	468,669,776	154,822,927	130,923,211	123,333,554	88,026,038	101,122,724	48,757,444		278,862,503	62,688,750	81,351,435	93,839,955	91,652,268	94,805,265	106,421,116	122,501,208	55,238,525	2,103,016,699
12'	488,735,657 (4.28)	194,490,447 (25.6)	152,889,891 (16.78)	133,747,737 (8.44)	100,726,846 (14.43)	115,263,639 (13.98)	59,480,323 (21.99)		316,979,832 (13.6)	82,378,782 (31.41)	88,890,780 (9.27)	105,406,791 (12.33)	99,807,888 (8.90)	102,627,115 (8.25)	118,567,142 (11.41)	116,454,536 (-4.94)	56,387,311 (2.08)	2,332,831,717 (10.93)
13'	424,121,415 (-13.22)	174,976,560 (-10.03)	177,190,226 (15.89)	157,791,517 (17.98)	117,725,698 (16.88)	130,944,174 (13.60)	64,216,551 (7.96)	18,465,925	428,220,875 (35.09)	74,260,943 (-9.85)	61,892,955 (-30.37)	120,105,800 (13.95)	156,811,033 (57.11)	154,478,708 (50.52)	135,547,037 (14.32)	148,228,508 (27.28)	75,357,089 (33.6)	2,620,335,104 (12.32)
14'	693,674,78 0 (63.56)	207,759,14 6 (18.74)	193,034,81 7 (8.94)	183,935,00 6 (16.57)	124,476,16 5 (5.73)	153,934,69 7 (17.56)	76,402,366 (18.98)	12,094,164 (-34.51)	348,268,527 (-18.67)	117,404,19 0 (58.10)	146,125,84 2 (136.09)	152,279,83 4(26.79)	155,887,1 33 (-0.59)	148,668,539 (-3.76)	112,928,826 (-16.69)	175,617,304 (18.48)	75,357,089 (-)	3,077,848,425 (17.46)
15'	749,560 749 (8.06)	253,638,5 37 (22.08)	239,117, 480 (23.87)	200,375, 516 (8.94)	167,945, 613 (34.92)	171,217, 348 (11.23)	91,133,4 59 (19.28)	18,515,4 50 (53.09)	460,648,3 54 (32.27)	88,365,7 29 (-24.73)	143,773, 251 (-1.61)	132,216, 226 (-13.18)	245,667 ,384 (57.59)	156,282,3 76 (5.12)	185,704,7 12 (64.44)	154,595,7 48 (-11.97)	75,840,0 42 (0.64)	3,534,597, 995 (14.84)
F.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총액 (천원)																		
11'	28,522,370	3,552,392	4,103,520	4,068,000	3,174,601	5,682,720	1,812,000		15,864,150	6,532,000	4,157,110	6,174,117	3,924,747	3,636,811	6,298,610	13,924,943	1,870,584	113,296,675
12'	20,005,870 (-29.86)	5,757,600 (62.08)	6,514,695 (58.76)	5,328,000 (30.97)	5,471,764 (72.36)	9,038,771 (59.06)	1,793,900 (-1.00)		24,077,665 (51.77)	5,165,500 (-20.92)	5,192,865 (24.92)	6,306,633 (2.15)	3,689,379 (-6.00)	2,113,707 (-41.88)	8,448,761 (34.14)	19,723,798 (41.64)	3,605,543 (92.75)	132,234,451 (16.72)
13'	21,347,762 (6.71)	5,372,410 (-6.69)	8,450,346 (29.71)	6,672,491 (25.23)	5,318,824 (-2.80)	8,789,582 (-2.76)	2,404,232 (34.02)	263,443	3,743,481 (-84.45)	6,895,000 (33.48)	5,011,063 (-3.50)	7,827,888 (24.12)	4,568,483 (23.83)	1,785,196 (-15.54)	10,713,302 (26.80)	19,723,798 (-)	4,714,237 (30.75)	123,601,538 (-96.53)
14'	25,865,668 (21.16)	5,777,633 (7.54)	8,293,965 (-1.85)	4,655,059 (-30.24)	6,132,628 (15.30)	8,318,317 (-5.36)	2,883,810 (19.95)	297,457 (12.91)	18,210,276 (386.45)	6,877,487 (-0.25)	6,215,898 (24.04)	6,726,727 (-14.07)	4,768,639 (4.38)	2,635,261 (47.62)	9,262,324 (-13.54)	8,505,000 (-56.88)	5,244,838 (11.26)	130,669,987 (5.72)
15'	27,160,5 66 (5.01)	8,236,156 (42.55)	10,512,4 94 (26.75)	5,981,86 6 (28.50)	9,039,21 6 (47.40)	9,069,89 0 (9.04)	4,577,79 3 (58.74)	297,457 (-)	51,424,999 (182.40)	13,404,714 (94.91)	6,215,898 (-)	7,516,94 4 (11.75)	6,274,1 32 (31.57)	2,919,960 (10.80)	11,018,51 1 (18.96)	9,000,775 (5.83)	6,406,14 3 (22.14)	189,057,51 7 (44.68)

* (): 전년대비 증감율(%) * 출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11~2014). 16개 시도 장애인복지인권비교연구 편집.



[그림 3-1] 시도별 장애인복지예산 및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증감율 (단위: %)

2. 직업재활시설 예산 분석

1) 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수준

직업재활시설의 예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8세 이상 54세 이하 등록장애인 1인당 예산지원수준을 보면 상위 지자체로는 제주가 550천원(전년대비 22.14% 증가)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강원이 445천원(전년대비 94.91% 감소), 광주 353천원(전년대비 47.40% 증가), 대전 349천원(전년대비 9.04%증가) 순으로 나타났고, 하위 지자체는 전남이 74천원(전년대비 10.80%증가)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세종이 109천원(전년 동일)으로 낮았으며, 전국 평균은 223천원(전년대비 44.68%증가)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1인당 예산지원수준은 상위 지자체로는 제주가 19,180천원(전년대비 19.22% 증가)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강원이 18,287천원(전년대비 97.57% 증가), 대전 17,476천원(전년대비 9.04% 증가) 순으로 나타났고, 하위 지자체는 세종이 3,198천원(전년대비 40.86% 감

소)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서울이 6,890천원(전년대비 3.59% 증가)으로 낮았으며, 전국 평균은 10,461천원(전년대비 23.20% 증가)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 1개소당 예산지원수준은 상위 지자체로는 제주가 711,794천원(전년대비 22.14% 증가)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전이 604,659천원(전년대비 9.04% 증가), 충남 469,809천원(전년대비 18.73% 증가) 순으로 나타났고, 하위 지자체는 세종이 99,152천원(전년대비 66.67% 감소)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전남이 171,762천원(전년대비 10.80% 증가)으로 낮았으며, 전국 평균은 323,729천원(전년대비 32.05% 증가)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예산 대비 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수준을 살펴보면, 강원이 15.17%(전년대비 158.96% 증가)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기도 11.16%(전년대비 113.50% 증가), 제주가 8.45%(전년대비 21.36% 증가) 순으로 나타났고, 비율이 낮은 지자체로는 세종이 1.61%(전년대비 34.68% 감소)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전남이 1.87%(전년대비 5.41% 증가)로 낮았으며, 전국 평균은 5.35%(전년대비 25.99% 증가)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예산지급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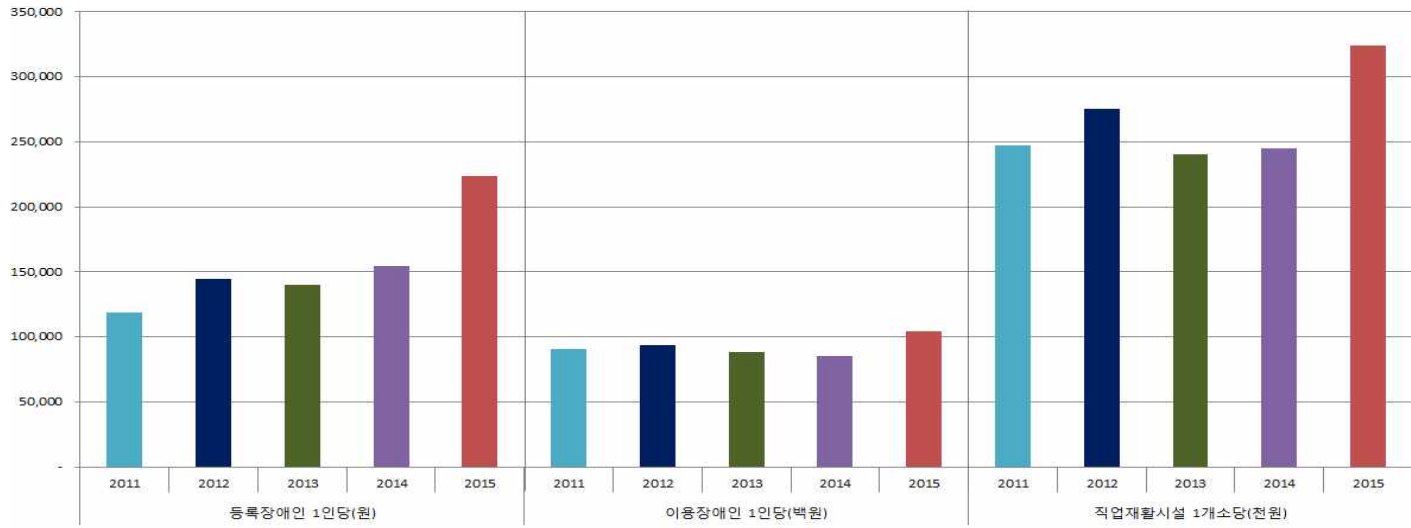
<표 3-2> 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수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등록장애인 1인당 예산지원수준 (천원) - F/A																		
11'	186,381	55,767	55,767	55,767	114,441	197,166	88,192		75,635	186,730	117,423	132,965	88,461	80,955	107,940	203,263	153,188	118,990
12'	137,116 (-26.43)	95,276 (70.85)	95,276 (70.85)	95,276 (70.85)	202,433 (76.89)	324,855 (64.76)	90,355 (2.45)		118,692 (56.93)	155,120 (-16.93)	153,327 (30.58)	146,994 (10.55)	86,595 (-2.11)	48,941 (-39.55)	150,428 (39.36)	299,676 (47.43)	301,845 (97.04)	144,813 (21.70)
13'	153,361 (11.85)	93,253 (-2.12)	93,253 (-2.12)	93,253 (-2.12)	201,960 (-0.23)	325,095 (0.07)	124,830 (38.16)	107,440	19,047 (-83.95)	217,336 (40.11)	153,206 (-0.08)	187,674 (27.67)	111,342 (28.58)	43,025 (-12.09)	198,303 (31.83)	311,430 (3.92)	398,903 (32.15)	140,070 (-3.28)
14'	195,148 (27.25)	105,734 (13.38)	105,734 (13.38)	105,734 (13.38)	239,453 (18.56)	319,763 (-1.64)	155,378 (24.47)	108,720	95,991 (403.96)	228,291 (5.04)	196,980 (28.57)	167,507 (-10.75)	121,485 (9.11)	66,837 (55.35)	178,516 (-9.98)	139,965 (-55.06)	450,394 (12.91)	154,348 (10.19)
15'	205 (5.01)	151 (42.55)	248 (26.75)	121 (28.50)	353 (47.40)	349 (9.04)	247 (58.74)	109 (-)	271 (182.40)	445 (94.91)	197 (-)	187 (11.75)	160 (31.57)	74 (10.80)	212 (18.96)	148 (5.83)	550 (22.14)	223 (44.68)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1인당 예산지원수준 (천원) - F/B																		
11'	9,688	8,223	6,034	5,665	7,117	11,913	7,365		7,454	8,960	7,254	12,862	6,497	9,397	8,085	21,390	8,541	9,068
12'	5,534 (-42.88)	8,619 (4.82)	8,277 (37.17)	7,132 (25.89)	10,170 (42.89)	18,989 (59.39)	7,007 (-4.87)		10,924 (46.54)	7,076 (-21.03)	9,062 (24.92)	14,398 (11.94)	5,641 (-13.18)	6,646 (-29.27)	8,764 (8.39)	22,934 (7.22)	11,860 (38.86)	9,357 (3.18)
13'	6,327 (14.33)	7,588 (-11.96)	10,083 (21.82)	8,710 (22.13)	9,397 (-7.60)	17,901 (-5.73)	9,976 (42.36)	4,789	1,829 (-83.25)	9,267 (30.97)	7,903 (-12.79)	15,024 (4.35)	9,173 (62.62)	5,281 (-20.54)	11,044 (26.02)	21,072 (-8.12)	14,505 (22.30)	8,796 (-5.99)
14'	6,650 (5.12)	7,828 (3.17)	9,298 (-7.79)	6,077 (-30.24)	10,103 (7.51)	16,027 (-10.47)	10,448 (4.74)	5,408 (12.91)	7,292 (298.59)	9,256 (-0.12)	9,361 (18.44)	13,087 (-12.90)	9,653 (5.23)	6,990 (32.35)	9,327 (-15.55)	8,177 (-61.19)	16,088 (10.91)	8,490 (-3.48)
15'	6,890 (3.59)	9,467 (20.92)	10,619 (14.20)	7,242 (19.17)	14,440 (42.92)	17,476 (9.04)	16,768 (60.49)	3,198 (-40.86)	11,174 (53.23)	18,287 (97.57)	8,562 (-8.54)	13,471 (2.94)	12,066 (24.99)	7,849 (12.29)	10,405 (11.55)	8,739 (6.86)	19,180 (19.22)	10,461 (2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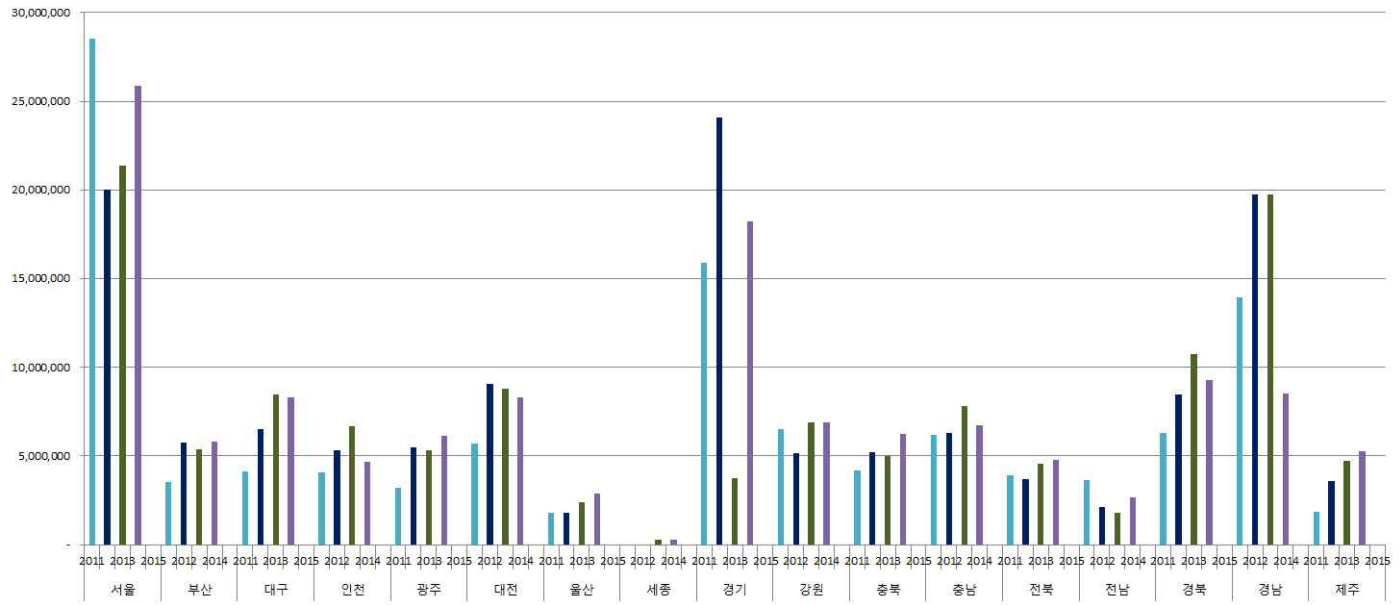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직업재활시설 1개소당 예산지원수준 (원) - F/C																		
11'	269,078	154,451	136,784	156,461	226,757	405,908	151,000		236,778	197,939	259,819	441,008	218,041	227,300	209,953	435,154	233,823	246,833
12'	183,540 (-31.79)	261,709 (69.44)	210,151 (53.64)	183,724 (17.42)	287,987 (27.00)	645,626 (59.06)	149,491 (-1.00)		354,083 (49.54)	156,530 (-20.92)	324,554 (24.92)	420,442 (-4.66)	204,965 (-6.00)	140,913 (-38.01)	256,023 (21.94)	533,075 (22.50)	400,615 (71.33)	275,488 (11.61)
13'	185,632 (1.14)	206,631 (-21.05)	256,071 (21.85)	238,303 (29.71)	295,490 (2.61)	585,972 (-9.24)	200,352 (34.02)	263,443	45,102 (-87.26)	197,000 (25.85)	278,392 (-14.22)	460,464 (9.52)	240,446 (17.31)	119,013 (-15.54)	324,645 (26.80)	533,075 (-)	523,804 (30.75)	240,469 (-12.71)
14'	210,289 (13.28)	222,216 (7.54)	251,332 (-1.85)	160,519 (-32.64)	306,631 (3.77)	554,554 (-5.36)	205,986 (2.81)	297,457 (12.91)	206,934 (358.81)	202,279 (2.68)	327,152 (17.51)	395,689 (-14.07)	250,981 (4.38)	155,015 (30.25)	289,447 (-10.84)	229,864 (-56.88)	582,759 (11.26)	245,159 (1.95)
15'	224,467 (6.74)	274,539 (23.55)	284,121 (13.05)	213,638 (33.09)	451,961 (47.40)	604,659 (9.04)	326,985 (58.74)	99,152 (-66.67)	439,530 (112.40)	406,203 (100.81)	282,541 (-13.64)	469,809 (18.73)	330,217 (31.57)	171,762 (10.80)	297,798 (2.88)	195,669 (-14.88)	711,794 (22.14)	323,729 (32.05)
장애인복지예산 대비 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수준 (%) - F/E*100																		
11'	6.09	2.29	3.13	3.30	3.61	5.62	3.72		5.69	10.42	5.11	6.58	4.28	3.84	5.92	11.37	3.39	5.39
12'	4.09 (-32.74)	2.96 (29.02)	4.26 (35.95)	3.98 (20.78)	5.43 (50.63)	7.84 (39.54)	3.02 (-18.85)		7.60 (33.52)	6.27 (-39.82)	5.84 (14.32)	5.98 (-9.06)	3.70 (-13.68)	2.06 (-46.31)	7.13 (20.40)	16.94 (49.00)	6.39 (88.82)	5.67 (5.22)
13'	5.03 (22.96)	3.07 (3.72)	4.77 (11.92)	4.23 (6.15)	4.52 (-16.83)	6.71 (-14.40)	3.74 (24.14)	1.43	0.87 (-88.49)	9.28 (48.07)	8.10 (38.59)	6.52 (8.93)	2.91 (-21.19)	1.16 (-43.89)	7.90 (10.92)	13.31 (-21.44)	6.26 (-2.16)	4.72 (-16.78)
14'	3.73 (-25.92)	2.78 (-9.43)	4.30 (-91.91)	2.53 (-40.15)	4.93 (9.05)	5.40 (-19.50)	3.77 (0.82)	2.46 (72.40)	5.23 (498.13)	5.86 (-36.91)	4.25 (-47.46)	4.42 (-32.22)	3.06 (5.00)	1.77 (53.39)	8.20 (3.77)	4.84 (-63.60)	6.96 (11.26)	4.25 (-10.0)
15'	3.62 (-2.82)	3.25 (16.77)	4.40 (2.32)	2.99 (17.96)	5.38 (9.25)	5.30 (-1.97)	5.02 (33.08)	1.61 (-34.68)	11.16 (113.50)	15.17 (158.96)	4.32 (1.64)	5.69 (28.70)	2.55 (-16.51)	1.87 (5.41)	5.93 (-27.66)	5.82 (20.22)	8.45 (21.36)	5.35 (25.99)

* 출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11~2014). 16개 시도 장애인복지인원비교연구 편집.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예산지급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그림 3-2]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



[그림 3-3] 시도별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단위: 천원)



2) 직업재활시설 이용충족률

먼저 등록장애인 대비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비율을 살펴보면 상위 지자체로는 세종이 3.40%(전년대비 69.09% 증가)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울이 2.97%(전년대비 1.36% 증가), 제주 2.87%(전년대비 2.45% 증가) 순으로 나타났고, 비율이 낮은 지자체로는 전남이 0.94%(전년대비 1.33% 감소)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전북이 1.32%(전년대비 5.26% 증가)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은 2.13%(전년대비 17.43% 증가)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 1개소 당 이용장애인 수는 경기도가 39.33명(전년대비 38.62%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제주가 37.11명(전년대비 2.45% 증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율이 낮은 하위 지자체의 경우 울산이 19.50명(전년대비 1.09% 감소)으로 가장 낮은 지역구였으며, 다음으로 전남이 21.88명(전년대비 1.33% 감소)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의 경우 30.95명(전년대비 7.18% 증가)이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1인당 이용장애인 수의 경우 서울시가 7.41명(전년대비 18.51%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세종이 7.15명(전년대비 34.97% 감소), 대구가 6.11명(전년대비 0.02%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 지자체로는 제주가 3.80명(전년대비 6.86% 감소)으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대전이 4.12명(전년대비 0.79% 증가)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의 경우 5.52명(전년대비 6.50% 증가)으로 나타났다.

<표 3> 직업재활시설 이용충족률

* (): 전년대비 증감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등록장애인 대비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비율 (%) - B/A*100																		
11'	1.92	0.68	1.43	1.29	1.61	1.65	1.20		1.01	2.08	1.62	1.03	1.36	0.86	1.33	0.95	1.79	1.31
12'	2.48 (28.79)	1.11 (63.00)	1.73 (20.56)	1.39 (7.98)	1.99 (23.80)	1.71 (3.37)	1.29 (7.69)		1.09 (7.09)	2.19 (5.19)	1.69 (4.53)	1.02 (-1.24)	1.54 (12.76)	0.74 (-14.53)	1.72 (28.57)	1.31 (37.50)	2.54 (41.90)	1.55 (17.95)
13'	2.42 (-2.17)	1.23 (11.18)	1.89 (9.52)	1.48 (6.54)	2.15 (7.98)	1.82 (6.15)	1.25 (-2.96)	2.24	1.04 (-4.18)	2.35 (6.98)	1.94 (14.57)	1.25 (22.35)	1.21 (-20.93)	0.81 (10.64)	1.80 (4.61)	1.48 (13.11)	2.75 (8.06)	1.59 (2.89)
14'	2.93 (21.05)	1.35 (9.90)	2.11 (11.43)	1.54 (4.45)	2.37 (10.28)	2.00 (9.86)	1.49 (18.84)	2.01 (-10.38)	1.32 (26.43)	2.47 (5.17)	2.10 (8.56)	1.28 (2.47)	1.26 (3.69)	0.96 (17.38)	1.91 (6.59)	1.71 (15.81)	2.80 (1.80)	1.82 (14.17)
15'	2.97 (1.36)	1.59 (17.89)	2.34 (10.99)	1.67 (7.83)	2.4 (3.13)	2.00 (-)	1.47 (-1.09)	3.40 (69.09)	2.43 (84.30)	2.43 (-1.35)	2.30 (9.34)	1.39 (8.56)	1.32 (5.26)	0.94 (-1.33)	2.04 (6.65)	1.70 (-0.96)	2.87 (2.45)	2.13 (17.43)
직업재활시설 1개소당 이용장애인 수 (명) - B/C																		
11'	27.77	18.78	22.67	27.62	31.86	34.07	20.50		31.76	22.09	35.81	34.29	33.56	24.19	25.97	20.34	27.38	27.22
12'	33.17 (19.41)	30.36 (61.66)	25.39 (12.00)	25.76 (-6.72)	28.32 (-11.12)	34.00 (-0.21)	21.33 (4.07)		32.41 (2.05)	22.12 (0.14)	35.81 (-)	29.20 (-14.83)	36.33 (8.28)	21.20 (-12.35)	29.21 (12.50)	23.24 (14.25)	33.78 (23.39)	29.44 (8.17)
13'	29.34 (-11.54)	27.23 (-10.32)	25.39 (0.03)	27.36 (6.21)	31.44 (11.05)	32.73 (-3.73)		55.00	24.65 (-23.95)	21.26 (-3.91)	35.22 (-1.65)	30.65 (4.96)	26.21 (-27.86)	22.53 (6.29)	29.39 (0.62)	25.30 (8.84)	36.11 (6.91)	27.34 (-7.15)
14'	31.62 (7.77)	28.38 (4.24)	27.03 (6.44)	26.41 (-3.45)	30.35 (-3.48)	34.60 (5.70)	20.08 (-5.86)	55.00 (-)	28.38 (15.11)	21.85 (2.80)	34.95 (-0.78)	30.24 (-1.34)	26.00 (-0.80)	22.18 (-1.58)	31.03 (5.57)	28.11 (11.11)	36.22 (0.31)	28.87 (5.63)
15'	32.58 (3.04)	29.00 (2.17)	26.76 (-1.01)	29.50 (11.68)	31.30 (3.13)	34.60 (-)	19.50 (-1.09)	31.00 (-43.64)	39.33 (38.62)	22.21 (1.64)	33.00 (-5.57)	34.88 (15.35)	27.37 (5.26)	21.88 (-1.33)	28.62 (-7.77)	22.39 (-20.34)	37.11 (2.45)	30.95 (7.1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예산지급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1인당 이용장애인 수 (명) - B/C																		
11'	7.40	4.75	8.72	9.09	9.70	7.12	5.86		5.51	7.15	6.37	8.42	8.05	5.45	6.83	5.76	7.06	6.79
12'	6.81 (-7.96)	5.96 (25.64)	6.45 (-26.01)	5.75 (-36.78)	5.12 (-47.15)	4.14 (-41.86)	5.12 (-12.59)		4.37 (-20.68)	5.70 (-20.20)	5.51 (-13.46)	5.76 (-31.56)	7.43 (-7.72)	5.68 (4.18)	5.60 (-17.98)	4.83 (-16.14)	3.90 (-4.83)	5.54 (-18.34)
13'	8.37 (22.98)	6.62 (10.94)	6.07 (-5.87)	5.59 (-2.70)	5.34 (4.21)	4.23 (2.26)	4.55 (-11.19)	11.00	4.06 (-7.17)	4.86 (-14.74)	5.42 (-1.65)	5.11 (-11.37)	5.19 (-30.20)	5.93 (4.42)	5.71 (1.81)	5.20 (7.63)	4.06 (4.24)	5.57 (0.41)
14'	6.25 (-25.32)	6.36 (-3.85)	6.11 (0.61)	4.97 (-11.04)	4.90 (-8.32)	4.09 (-3.45)	4.84 (6.49)	11.00 (-)	3.97 (-2.21)	4.59 (-5.68)	5.07 (-6.46)	5.04 (-1.34)	5.20 (0.24)	5.71 (-3.67)	5.67 (-0.55)	5.75 (10.50)	4.08 (0.31)	5.18 (-6.98)
15'	7.41 (18.51)	5.58 (-12.34)	6.11 (0.02)	5.94 (19.47)	5.31 (8.37)	4.12 (0.79)	4.96 (2.51)	7.15 (-34.97)	5.07 (27.67)	4.75 (3.78)	4.97 (-1.90)	5.21 (3.49)	5.47 (5.26)	5.31 (-6.96)	5.32 (-6.22)	4.93 (-14.23)	3.80 (-6.86)	5.52 (6.50)

* 출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11~2014). 16개 시도 장애인복지인권비교연구 편집.

3. 소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은 2005년부터 지방 이양되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동안 장애인 복지예산을 비교해보면 2015까지 매년 평균 10%이상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18세 이상 54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수는 2015년도 기준으로 846,595명으로 전년대비 4.06% 감소하였으나,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은 18,073명으로 전년대비 17.43% 증가하였다. 직업재활시설의 경우에도 584개소로 전년대비 9.57%증가하였으며,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도 2,972명으로 전년대비 17.75% 증가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예산 총액의 경우도 2015년 기준 3,534,597,995천원으로 전년대비 14.84% 증가하였다. 이런 장애인복지예산 증가 추세를 볼 때 직업재활시설의 예산 또한 증가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2015년 기준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총액은 189,057,517천원으로 전년대비 44.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18세 이상 64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수의 감소에도 직업재활시설 수와 이용장애인은 증가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예산 총액 증가에 따라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총액도 증가하였지만 장애인복지예산 증가율 보다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한해만 본다면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예산이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복지예산총액의 증가에도 2014년의 경우에는 5.72%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예산이 줄어들기도(-96.53%). 하였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및 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에 있어 장애인복지예산 총액의 증가율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4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 현황 조사 결과



IV.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 현황 조사 결과

1. 조사개요

1) 실태조사

(1)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직업재활시설의 예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직업재활시설 총 560개소(2015년 12월 기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목적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관리운영비 기준을 개선하고 추가항목 및 적정 지원기준액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크게 재정지원 금액 조사, 지원 금액 지출여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금 관련 의견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조사지를 온라인 상으로 제공하여, 온라인 상에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연구에 대한 설명, 한국 직업재활시설협회를 통한 조사협조 요청, 답례품 등을 제공하였고, 이메일 조사도 같이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았고, 조사시점이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맞물려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였다.

본 조사는 2016년 10월 24일(월)부터 11월 11일(금)까지 진행되었으며, 본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 기관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1> 조사표 응답 기관

(단위: n=48, 개소, 비율)

지역	시설유형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서울	1(25.0)	6(15.4)	2(66.7)
경기권	1(25.0)	8(20.5)	0(0.0)
경상권	1(25.0)	9(23.1)	1(33.3)
전라권	0(0.0)	6(15.4)	0(0.0)
충청권	0(0.0)	7(17.9)	0(0.0)
강원	0(0.0)	1(2.6)	0(0.0)



지역	시설유형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제주	1(25.0)	2(5.1)	0(0.0)
전체	4(100.0)	39(100.0)	3(100.0)

(2) 조사도구 및 내용

본 조사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 현황 파악 및 의견조사를 위해 구조화된 조사지를 활용하였다. 조사지는 현장 전문가와 본원 연구진 회의를 토대로 개발되었으며, 작성된 조사지 초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몇 개소를 선정하여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정·보완되었다.

본 조사지는 크게 일반사항(12문항), 지원금 조사(3문항), 지원금 사용내역(16문항), 지원금 관련 의견(12문항)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로 조사지에 포함된 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2> 설문조사 주요 내용

구 분	내용	문항수
I.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연령 • 현 직장 근무 년수 • 담당 직무 • 관련 전공 • 최종 학력 • 시설명 • 거주 지역 • 시설 종류 • 종사자 수 • 근로장애인 수 • 훈련장애인 수 • 생산품목 	12문항
II. 지원금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및 시·도로부터 받은 지원금 • 사업지침안내에 제시되어 있는 동일한 금액 지원 여부 • 민간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3문항
III. 지원금 사용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장애인 보호비 지출 여부 • 이용장애인 보호비 사용 출처 • 시설 관리비 지출 여부 • 시설 관리비 사용 출처 • 직업적응훈련비 지출 여부 	16문항

구 분	내 용	문항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적응훈련비 사용 출처 • 직업훈련비 지출 여부 • 직업훈련비 사용 출처 • 직원교육훈련 여비 지출 여부 • 직원교육훈련 여비 사용 출처 • 생산활동지원비 지출 여부 • 생산활동지원비 사용 출처 • 기타 항목 지출 여부 • 기타 항목 사용 출처 • 예산항목별 사용된 비율 • 지원항목별 사용된 비율 	
IV. 지원금 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지원금의 적절성 • 적절하지 않은 이유 •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으로 구분되어 지급되는 정책에 대한 의견 • 적절하지 않은 이유 • 인원가중 지원금 단가에 대한 의견 • 적절하지 않은 이유 • 적절한 가중지원 정책 선정 •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 지원금액 선정 • 적절한 지원단가 선정 • 훈련장애인의 적정 지원기준 • 근로장애인의 적정 지원기준 • 지원기준과 지원단가에 대한 의견 	12문항

2) 포커스그룹인터뷰

(1)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조사는 설문조사에서 질의한 부분에 심층적으로 질의하고자 추가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FGI 조사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예산지급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이와 관련이 있는 보호 및 근로시설 유형에 종사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현장 전문가의 경우, 예산 지급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견을 풍부하게 제시할 수 있는 선임직업훈련교사(팀장급) 이상을 섭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시기는 2016년 11월 30일에 진행되었으며,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인터뷰 내용을 녹취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4-3>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자

응답자	근무지역	시설유형	성별	직급	연령대
현장 전문가 1	인천	보호	남성	원장	40대
현장 전문가 2	서울		남성	원장	40대
현장 전문가 3	경기		여성	팀장	30대
현장 전문가 4	광주		여성	팀장	30대
현장 전문가 5	경기		여성	사무원	20대
현장 전문가 6	서울	근로	남성	국장	40대

(2) 조사 도구 및 내용

현장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는 조사영역을 크게 예산지급 기준과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예산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장애인 복지사업안내 기준에 따른 예산지원 현황, 관리운영비 기준 관련,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 구분에 대한 의견이며, 개선방안의 경우, 관리운영비 기준에 대한 개선의견,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대한 의견에 대해 질의하였다.

<표 4-4> 포커스그룹인터뷰 주요 내용

구분	개방형 질문	
1. 예산지급 기준 관련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기준에 따른 예산지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관리운영비 지원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지원부족에 따라 발생하는 운영상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관리운영비 지출상의 어려움 및 기준액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운영비의 지출상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예) 제한된 항목, 항목 변경의 어려움, 항목 수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사항 등 - 관리운영비 기준액에 대한 의견(기본지원금, 인원지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 기준액 변경 필요 여부, 개선필요시 그 이유와 새로운 기준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사업장의 지원이 더 많은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까?
2. 개선방안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으로의 구분 /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의 구분”의 적절성은 어떠합니까? - 적절한 기준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 분	개방형 질문	
	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지원에 대한 개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운영비의 개선 사항은 무엇입니까? - 관리운영비 이외 시설 운영상 개선사항은 무엇입니까?
	기타	

2. 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실태조사 결과

1) 일반현황

설문조사에 응답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무응답한 케이스를 제외하여 총 48명의 응답자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27명(58.7%), 남성이 19명(41.3%) 순으로 나타났고, 연령의 경우 30대 18명(39.1%), 40대 17명(37.0%), 20대 10명(21.7%), 50대 1명(2.2%)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 직장 근무년수는 평균 63.9개월로 나타났다. 담당직무의 경우 (다중응답), 회계 21명(42.0%)이 가장 많았고, 훈련 18명(36.0), 원장 5명(10.0%), 사무국장 4명(8.0%), 생산 2명(4.0%) 순으로 나타났으며 관련전공의 경우, 사회복지 25명(54.3%), 직업재활 15명(32.6%), 기타 5명(10.9%), 특수교육 1명(2.2%)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으로 대학교 졸업 33명(71.7%), 대학원 졸업 이상 12명(26.1%), 고등학교 졸업 1명(2.2%)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경상권 11명(23.9%), 서울, 경기·인천 각각 9명(19.6%), 호남권 6명(13.0%), 충청권 7명(15.2%), 제주 3명(6.5%)순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종류로는 보호작업장 39명(83.0%), 근로작업장 4명(8.5%), 직업적응훈련시설 4명(8.5%)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는 5~10인 25명(52.1%), 5인 미만 12명(25.0%), 21인 이상 6명(12.5%), 11~15인 4명(8.3%), 16~20인 1명(2.1%)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종사자수는 10.90명으로 나타났다. 다음 근로 장애인 수로는 15인 이하 15명(31.3%), 16~20인 14명(29.2%), 31인 이상 7명(14.6%), 21~25인 7명(14.6%), 26~30인 5명(10.4%)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근로 장애인 수는 20.71명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훈련 장애인



수의 경우 15인 이하 23명(60.5%), 16~20인 10명(26.3%), 21~25인, 31인 이상 각각 2명(5.3%), 26~30인 1명(2.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훈련 장애인 수는 14.68명으로 나타났다.

<표 4-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n=48, 개소, %)

구분	항목	빈도 (비율)	전체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19(41.3)	
	여성	27(58.7)	
	전체	46(100)	
연령	20대	10(21.7)	
	30대	18(39.1)	
	40대	17(37.0)	
	50대	1(2.2)	
	전체	46(100.0)	
현 직장 근무년수	전체	48(100.0)	5.3(4.9)
담당직무 ²⁾	생산	2(4.0)	
	훈련	18(36.0)	
	회계	21(42.0)	
	사무국장	4(8.0)	
	원장	5(10.0)	
	전체	50(100.0)	
관련전공 ³⁾	사회복지	25(54.3)	
	직업재활	15(32.6)	
	특수교육	1(2.2)	
	기타	5(10.9)	
	전체	46(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1(2.2)	
	대학교 졸업	33(71.7)	
	대학원 졸업 이상	12(26.1)	
	전체	46(100.0)	
거주지역	서울	9(19.6)	
	경기·인천	9(19.6)	
	경상권	11(23.9)	
	호남권	6(13.0)	
	충청권	7(15.2)	
	강원도	1(2.2)	
	제주	3(6.5)	
	전체	46(100.0)	
시설종류	근로사업장	4(8.5)	
	보호작업장	39(83.0)	
	직업적응훈련시설	4(8.5)	
	전체	47(100.0)	

구분	항목	빈도 (비율)	전체평균 (표준편차)
종사자수	5인 미만	12(25.0)	10.90 (12.37)
	5~10인	25(52.1)	
	11~15인	4(8.3)	
	16~20인	1(2.1)	
	21인 이상	6(12.5)	
	전체	48(100.0)	
근로장애인 수	15인 이하	15(31.3)	20.71 (10.68)
	16~20인	14(29.2)	
	21~25인	7(14.6)	
	26~30인	5(10.4)	
	31인 이상	7(14.6)	
	전체	48(100.0)	
훈련장애인 수	15인 이하	23(60.5)	14.68 (12.26)
	16~20인	10(26.3)	
	21~25인	2(5.3)	
	26~30인	1(2.6)	
	31인 이상	2(5.3)	
	전체	38(100.0)	

주 생산품목은 DM발송이나 세탁, 청소, 소독, 방역 등의 용역, 재활용, 임가공 등의 서비스 생산이 28건(29.2%)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산물, 김치, 차(茶)류, 제과류 등의 식료품이 24건(25.5%), 향초, 도자기류, 세제, 화장지 등의 생활용품이 13건(13.5%)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인쇄/판촉물이 8건(8.3%), 사무용품/용지, 의류가 각각 5건(5.2%), 잉크/토너가 4건(4.2%), 전자제품, 일회용 소모품이 각각 3건(3.1%), 화훼가 2건(2.1%), 가구가 1건(1.0%) 순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마다 2.3개의 물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생산품목 (다중응답)

(단위: n=48, 개수, %)

구분	내용	빈도(비율)
서비스	DM발송, 세탁, 청소/소독/방역 용역, 재활용, 임가공	28(29.2)
식료품	농산물(콩나물/새송이버섯), 김치, 가공육, 국수, 커피, 차, 제과제빵, 과자	24(25.0)

- 2) 다중응답
3) 다중응답



구분	내용	빈도(비율)
생활용품	향초, 도자기류(항아리, 생활도자기), 커튼/블라인드, 화장품, 비누, 세제, 섬유제품, 화장지, 공예품	13(13.5)
인쇄/판촉물	현수막, 인쇄물	8(8.3)
사무용품/용지	복사용지, 행정봉투, 신분증	5(5.2)
의류	모자, 장갑	5(5.2)
잉크/토너	카트리지	4(4.2)
전자제품	조립PC, PCB, 화재감지기	3(3.1)
일회용소모품	쓰레기봉투, 쇼핑백, 비닐봉투	3(3.1)
화훼	화훼	2(2.1)
가구	침구	1(1.0)
전체		96(100.0)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 중 재정관련 사항(수입)

(1) 2015년 중앙정부 및 시·도로부터 받은 지원금액

본 설문에서는 2015년 중앙정부 및 시·도로부터 받은 지원금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기타(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으로 평균 3,836,217.1만원, 인건비 평균 33,896.3만원, 기능보강사업 평균 227,832.2만원, 관리운영비 평균 5,133.7만원, 기타 평균 3,665.6만원, 사회적기업 평균 3,271.0만원 순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2015년 중앙정부 및 시·도 지원금 평균

(단위: n=48, 백만원)

구분	N	2015년 중앙정부 및 시·도로부터 받은 지원금					
		관리 운영비	인건비	기능보강	사회적 기업	기타(중 증장애 인직업 재활 지원사 업)	기타
전체	48	5.1	33.8	22.7	3.2	7.2	3.6
근로 장애인	15인 이하	15	4.3	5.5	24.3	—	9.8
	16~20인	14	3.2	21.8	53.1	2.7	3.4

구분		N	2015년 중앙정부 및 시·도로부터 받은 지원금					
			관리 운영비	인건비	기능보강	사회적 기업	기타(중 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기타
수	21~25인	7	6.2	22.0	2.6	3.8	3.3	19.0
	26~30인	5	9.7	29.7	22.8	1.5	2.7	3.3
	31인 이상	7	6.0	44.2	3.8	—	2.7	4.0
훈련 장애인 수	15인 이하	23	4.7	21.7	31.2	3.0	6.1	1.7
	16~20인	10	2.6	42.7	25.0	4.4	1.3	2.5
	21~25인	2	2.8	21.2	—	—	3.5	14.0
	26~30인	1	22.4	2.0	43.9	—	—	—
	31인 이상	2	21.8	45.2	1.9	—	—	—
근로 및 훈련 장애인 수	10인 이하	0	—	—	—	—	—	—
	11~20인	9	1.6	12.4	13.6	—	5.5	—
	21~30인	16	5.3	3.1	53.7	3.6	1.3	1.3
	31~40인	14	4.3	45.1	19.2	3.2	3.0	7.4
	41인 이상	9	8.5	39.2	3.8	2.9	1.3	2.0

(2) 지역별 2016년 관리운영비지원 여부

2016년 관리운영비지원 여부에 관하여 ‘귀 시설은 올해 ‘2016 장애인복지시설안내’에 제시되어 있는 수준과 동일한 금액의 관리운영비(기본 지원금+인원 가중지원)를 지원받으셨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 거주지역에 따라 ‘예’ 22명(47.8%), ‘아니오’ 24명(52.2%)으로 나타나 관리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X^2=6.413$, $p=.379$). 이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기준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리운영비를 기준대로 지원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호남권의 직업재활시설이 기준에 근거한 관리운영비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지역별 관리운영비 지원 여부

(단위: n=48, 개소, %)

구분		관리 운영비 지원 여부			X ²
		예	아니오	합계	
거주 지역	서울	4(44.4)	5(55.6)	9(100.0)	6.413
	경기·인천	6(66.7)	3(33.3)	9(100.0)	
	경상권	5(45.5)	6(54.5)	11(100.0)	
	호남권	1(16.7)	5(83.3)	6(100.0)	
	충청권	5(71.4)	2(28.6)	7(100.0)	
	강원도	—	1(100)	1(100.0)	
	제주	1(33.3)	2(66.7)	3(100.0)	
	합계	22(47.8)	24(52.2)	46(100.0)	

(3) 2015년 민간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2015년 민간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 지원 받은 금액 평균은 1,694.6만원으로 나타났다. 근로 장애인 수 31인 이상인 경우에서 평균 3,372.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훈련 장애인 수 31인 이상인 경우 평균 3,372.0만원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근로장애인수, 훈련장애인 수가 많을수록 민간으로부터 지원금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수가 많을수록 국고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직업재활시설 규모가 클수록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기회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4-9> 2015년 민간으로부터 지원받은 평균 금액

(단위: n=48, 개소, 백만원)

구분		지원받은 금액	
		N	평균
전체		23	17.0
시설유형	근로사업장	1	—
	보호작업장	19	17.9
	직업적응훈련시설	3	10.5
근로 장애인 수	15인 이하	7	15.0

구분		지원받은 금액	
		N	평균
	16~20인	7	17.4
	21~25인	3	89.9
	26~30인	2	25.0
	31인 이상	4	33.7
훈련 장애인 수	15인 이하	10	14.5
	16~20인	4	14.7
	21~25인	2	—
	26~30인	1	—
	31인 이상	2	33.7
근로 및 훈련 장애인수	10인 이하	—	—
	11~20인	3	—
	21~30인	6	15.3
	31~40인	10	14.0
	41인 이상	4	33.7

(4) 민간지원을 제공한 기관

2015년 민간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제공한 기관명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8건(27.6%)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복지관련 단체(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경기도직업재활시설협회,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와 기업(국민은행, 한화, ㈜대정실업, 부산지방공단 스포윈, 교회)이 각각 5건(17.2%)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타 사회복지법인(롯데재단, 아산복지재단, 홀트자원봉사사회)이 각각 3건(10.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건(6.9%)으로 조사되었다.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 중 재정관련 사항(지출)

(1) 이용장애인 보호비 지출 여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 중 재정관련 사항에 2015년에 수령한 지원금으로 시설 이용장애인 보호비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시설 유형에 따라 ‘예’ 28명(59.6%), ‘아니오’ 19명(40.4%)로 나타났다. 근로 장애인수에 따라 ‘예’ 28명(58.3%), ‘아니오’ 20명(41.7%)로 나타났다. 훈련 장애인 수에 따라 ‘예’ 20명(52.6%), ‘아니오’ 18명(47.4%)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근로와 훈련 장애인 수를 합한 수에 따라 ‘예’ 28명(58.3%), ‘아니오’ 20명(41.7%)로 나타나 모든 유형에서 이용장애인 보호비를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표 4-10> 시설유형, 근로/훈련장애인 수 별 이용장애인 보호비 지출여부
(단위: n=48 빈도(비율))

구분		이용장애인 보호비 지출여부			X ²
		예	아니오	합계	
시설 유형	근로사업장	4(100.0)	0(0.0)	4(100.0)	4.706
	보호작업장	23(59.0)	16(41.0)	39(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1(25.0)	3(75.0)	4(100.0)	
	합계	28(59.6)	19(40.4)	47(100.0)	
근로 장애인수	15인 이하	10(66.7)	5(33.3)	15(100.0)	2.018
	16~20인	7(50.0)	7(50.0)	14(100.0)	
	21~25인	3(42.9)	4(57.1)	7(100.0)	
	26~30인	3(60.0)	2(40.0)	5(100.0)	
	31인 이상	5(71.4)	2(28.6)	7(100.0)	
	합계	28(58.3)	20(41.7)	48(100.0)	
훈련 장애인수	15인 이하	10(43.5)	13(56.5)	23(100.0)	2.894
	16~20인	7(70.0)	3(30.0)	10(100.0)	
	21~25인	1(50.0)	1(50.0)	2(100.0)	
	26~30인	1(100.0)	—	1(100.0)	
	31인 이상	1(50.0)	1(50)	2(100.0)	
	합계	20(52.6)	18(47.4)	38(100.0)	
근로 및 훈련 장애인수	10인 이하	—	—	—	3.559
	11~20인	5(55.6)	4(44.4)	9(100.0)	
	21~30인	8(50.0)	8(50.0)	16(100.0)	
	31~40인	11(78.6)	3(21.4)	14(100.0)	
	41인 이상	4(44.4)	5(55.6)	9(100.0)	
	합계	28(58.3)	20(41.7)	48(100.0)	

(2) 이용장애인 보호비 사용출처 및 비중 (다중응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 중 재정관련 사항에 관하여 ‘이용장애인 보호비 사용출처 및 비중’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시설 이용장애인 영양으로 지출하였다는 응답이 7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기타 25.8%, 시설 이용장애인 건강 23.4%, 시설 이용장애인 위생 18.4%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복리후생비, 근로장애인 급여 및 훈련장애인 훈련비, 근로인 임금, 교육비, 훈련생 훈련비/당직비 등의 응답이 있었다.

<표 4-11> 이용장애인 보호비 사용출처 및 비중 평균

(단위: n=48, 개소, %)

이용장애인 보호비 사용출처		빈도	비중(비율)
전체		59	-
시설 이용장애인 영양		22	37.3
시설 이용장애인 건강		18	30.5
시설 이용장애인 위생		14	23.7
기타	교육비, 근로인 임금, 근로장애인급여 및 훈련 장애인 훈련비, 복리후생비, 당직비	5	8.5

(3) 시설유형, 근로/훈련장애인 수 별 시설 관리비 지출 여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 중 재정관련 사항에 관하여 ‘귀 기관은 2015년에 수령한 지원금으로 시설 관리비를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 시설유형에 따라 ‘예’ 40명(85.1%), ‘아니오’ 7명(14.9%)으로 나타났다. 근로 장애인 수에 따라 ‘예’ 40명(85.1%), ‘아니오’ 7명(14.9%)으로 나타났다. 훈련 장애인 수에 따라 ‘예’ 31명(81.6%), ‘아니오’ 7명(18.4%)로 나타났다. 근로와 훈련을 합한 장애인 수에 따라 ‘예’ 40명(85.1%), ‘아니오’ 7명(14.9%)으로 나타나 모든 유형에서 시설 관리비를 지출하였다고 응답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표 4-12> 시설유형, 근로/훈련장애인 수 별 시설관리비 지출여부
(단위: n=48, 개소, %)

구분		시설관리비 지출여부			
		예	아니오	합계	X^2
시설 유형	근로사업장	4(100.0)	—	4(100.0)	4.722
	보호작업장	34(87.2)	5(12.8)	39(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2(50.0)	2(50.0)	4(100.0)	
	합계	40(85.1)	7(14.9)	47(100.0)	
근로 장애인수	15인 이하	10(66.7)	5(33.3)	15(100.0)	7.937
	16~20인	14(100.0)	—	14(100.0)	
	21~25인	7(100.0)	—	7(100.0)	
	26~30인	4(80.0)	1(20.0)	5(100.0)	
	31인 이상	6(85.7)	1(14.3)	7(100.0)	
	합계	40(85.1)	7(14.9)	48(100.0)	
훈련 장애인수	15인 이하	19(82.6)	4(17.4)	23(100.0)	2.037
	16~20인	8(80.0)	2(20.0)	10(100.0)	
	21~25인	1(50.0)	1(50.0)	2(100.0)	
	26~30인	1(100.0)	—	1(100.0)	
	31인 이상	2(100.0)	—	2(100.0)	
	합계	31(81.6)	7(18.4)	38(100.0)	
근로 및 훈련 장애인수	10인 이하	—	—	—	3.520
	11~20인	6(66.7)	3(33.3)	9(100.0)	
	21~30인	15(93.8)	1(6.3)	16(100.0)	
	31~40인	12(85.7)	2(14.3)	14(100.0)	
	41인 이상	8(88.9)	1(11.1)	9(100.0)	
	합계	40(85.1)	7(14.9)	48(100.0)	

(4) 시설관리비 사용처 및 비중 (다중응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 중 재정관련 사항에 관하여 ‘시설 관리비 사용처 및 비중’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수용비 및 수수료 36.0%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공공요금 33.2%, 건물유지비 20.1%, 차량유지비 16.0%, 연료비 12.0%, 기타 9.0%, 화재보험 6.1%, 상해보험 5.9%, 오페수정화시설 운영비 2.7%, 환경개선 부담금 2.3%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공과금 외, 배상책임보험, 시군구보조금, 여비, 제세공과금, 직업

재활사업비, 프로그램, 협회비, 회의비(운영위원회/부모회), 직원교육여비, 자산취득비/특별급식비/의료비, 훈련재료비 등의 응답이 있었다.

<표 4-13> 시설관리비 사용출처 및 비중 평균

(단위: n=48, 개소, %)

시설관리비 사용출처		빈도	비중(비율)
전체		235	-
건물유지비		26	11.1
연료비		15	6.4
차량유지비		31	13.2
공공요금		38	16.2
오페수 정화시설 운영비		5	2.1
환경개선 부담금		22	9.4
화재보험		20	8.5
상해보험		23	9.8
수용비 및 수수료		33	14.0
기타	공과금 외, 배상책임보험, 시군구보조금, 여비, 제세공과금 등, 직업재활사업비, 프로그램, 협회비, 회의비(운영위원회/부모회), 차량보험, 직원교육여비, 자산취득비/ , 훈련재료비	22	9.4

(5) 시설유형, 근로/훈련 장애인 수 별 직업적응훈련비 지출 여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 중 재정관련 사항에 관하여 ‘귀 기관은 2015년에 수령한 지원금으로 직업 적응훈련비를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 시설유형에 따라 예 29명(61.7%), 아니오 18명(38.3%)으로 나타났다. 근로장애인 수에 따라 예 29명(60.4%), 아니오 19명(37.5%)으로 나타났다. 훈련 장애인수에 따라 예 24명(63.2%), 아니오 14명(36.8%)으로 나타났다. 근로와 훈련을 합한 장애인 수에 따라 예 29명(60.4%), 아니오 19명(37.5%)으로 나타나 모든 유형에서 직업적응훈련비를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표 4-14> 시설유형, 근로/훈련 장애인 수 별 직업적응훈련비 지출여부

(단위: n=48, 개소, %)

구분		직업적응훈련비 지출여부			
		예	아니오	합계	X 2
시설 유형	근로사업장	2(50.0)	2(50.0)	4(100.0)	.559
	보호작업장	25(64.1)	14(35.9)	39(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2(50.0)	2(50.0)	4(100.0)	
	합계	29(61.7)	18(38.3)	47(100.0)	
근로 장애인수	15인 이하	10(66.7)	5(33.3)	15(100.0)	1.566
	16~20인	8(57.1)	6(42.9)	14(100.0)	
	21~25인	5(71.4)	2(28.6)	7(100.0)	
	26~30인	2(40.0)	3(60.0)	5(100.0)	
	31인 이상	4(57.1)	3(42.9)	7(100.0)	
	합계	29(60.4)	19(37.5)	48(100.0)	
훈련 장애인 수	15인 이하	14(60.9)	9(39.1)	23(100.0)	1.134
	16~20인	7(70.0)	3(30.0)	10(100.0)	
	21~25인	1(50.0)	1(50.0)	2(100.0)	
	26~30인	1(100.0)	-	1(100.0)	
	31인 이상	1(50.0)	1(50.0)	2(100.0)	
	합계	24(63.2)	14(36.8)	38(100.0)	
근로 및 훈련 장애인수	10인 이하	-	-	-	3.493
	11~20인	5(55.6)	4(44.4)	9(100.0)	
	21~30인	11(68.8)	5(31.3)	16(100.0)	
	31~40인	6(42.9)	8(57.1)	14(100.0)	
	41인 이상	7(77.8)	2(22.2)	9(100.0)	
	합계	29(60.4)	19(37.5)	48(100.0)	

(6) 직업적응훈련비 사용출처 및 비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 중 재정관련 사항에 관하여 ‘직업적응훈련비 사용출처 및 비중’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직업적응훈련비’가 47.8%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일상생활 훈련비’ 34.8%, 기타 17.8%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교육재활사업비’, ‘도서/현수막 등, 전문인력 교육 및 제품납품’, ‘직업재활 프로그램비’, ‘평가도구 구입’, ‘인터넷 요금’,

‘문구구입’ 등의 응답이 있었다.

<표 4-15> 직업적응훈련비 사용출처 및 비중 평균

(단위:n=48, 개소, %)

직업적응훈련비 사용출처		빈도	비중(비율)
전체		46	—
일상생활훈련비		16	34.8
직업적응훈련비		22	47.8
기타	교육재활사업비, 도서/ 현수막 등, 전문인력 교육 및 제품 납품, 직업재활프로그램비, 평가도구 구입, 인터넷 요금, 문구 구입	8	17.4

(7) 시설유형, 근로/훈련 장애인 수 별 직업훈련비 지출 여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 중 재정관련 사항에 관하여 ‘귀 기관은 2015년에 수령한 지원금으로 직업훈련비를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 시설종류에 따라 ‘예’ 14명(29.8%), ‘아니오’ 33명(70.2%)으로 나타났다. 근로장애인 수에 따라 ‘예’ 15명(31.3%), ‘아니오’ 33명(68.8%)으로 나타났다. 훈련 장애인 수에 따라 ‘예’ 14명(36.8%), ‘아니오’ 24명(63.2%)으로 나타났다. 근로와 훈련을 합한 장애인 수에 따라 ‘예’ 15명(31.3%), ‘아니오’ 33명(68.8%)으로 나타나 모든 유형에서 직업훈련비를 지출한 적이 없다는 응답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표 4-16> 시설유형, 근로/훈련 장애인 수 별 직업훈련비 지출여부

(단위:n=48, 개소, %)

구분		직업훈련비 지출여부			
		예	아니오	합계	X^2
시설 종류	근로사업장	—	4(100.0)	4(100.0)	2.496
	보호작업장	12(30.8)	27(69.2)	39(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2(50.0)	2(50.0)	4(100.0)	
	합계	14(29.8)	33(70.2)	47(100.0)	

구분		직업훈련비 지출여부			
		예	아니오	합계	X^2
근로 장애인수	15인 이하	5(33.3)	10(66.7)	15(100.0)	1.632
	16~20인	4(28.6)	10(71.4)	14(100.0)	
	21~25인	3(42.9)	4(57.1)	7(100.0)	
	26~30인	2(40.0)	3(60.0)	5(100.0)	
	31인 이상	1(14.3)	6(85.7)	7(100.0)	
	합계	15(31.3)	33(68.8)	48(100.0)	
훈련 장애인수	15인 이하	9(39.1)	14(60.9)	23(100.0)	1.993
	16~20인	4(40.0)	6(60.0)	10(100.0)	
	21~25인	—	2(100.0)	2(100.0)	
	26~30인	—	1(100.0)	1(100.0)	
	31인 이상	1(50.0)	1(50.0)	2(100.0)	
	합계	14(36.8)	24(63.2)	38(100)	
근로 및 훈련 장애인수	10인 이하	—	—	—	.697
	11~20인	3(33.3)	6(66.7)	9(100.0)	
	21~30인	6(37.5)	10(62.5)	16(100.0)	
	31~40인	4(28.6)	10(71.4)	14(100.0)	
	41인 이상	2(22.2)	7(77.8)	9(100.0)	
	합계	15(31.3)	33(68.8)	48(100.0)	

(8) 직업훈련비 사용출처 및 비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 중 재정관련 사항에 관하여 ‘직업훈련비 사용출처 및 비중’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직업훈련비가 77.8%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취업알선비 16.7%, 기타 5.6%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작물재배, 재활용사업의 응답이 있었다.

<표 4-17> 직업적응훈련비 사용출처 및 비중 평균

(단위:n=48, 개소, %)

직업훈련비 사용출처		빈도	비중(비율)
전체		18	—
직업훈련비		14	77.8
취업알선비		3	16.7
기타	작물재배 및 재활용 사업	1	5.6

(9) 시설유형, 근로/훈련 장애인 수 별 직원교육훈련 여비 지출 여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 중 재정관련 사항에 관하여 ‘귀 기관은 2015년에 수령한 지원금으로 직원 교육훈련여비를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 시설종류에 따라 예 27명(54.7%), 아니오 20명(42.6%)으로 나타났다. 근로 장애인 수에 따라 예 28명(58.3%), 아니오 20명(41.7%)으로 나타났다. 훈련 장애인 수에 따라 예 22명(57.9%), 아니오 16명(42.1%)으로 나타났다. 근로와 훈련을 합한 장애인 수에 따라 예 28명(58.3%), 아니오 20명(41.7%)으로 나타나 모든 유형에서 직원 교육훈련여비를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표 4-18> 시설유형, 근로/훈련 장애인 수 별 직원교육훈련여비 지출여부

(단위: n=48, 개소, %)

구분		직원 교육훈련여비 지출여부			X^2
		예	아니오	합계	
시설 유형	근로사업장	2(50.0)	2(50.0)	4(100.0)	.612
	보호작업장	22(56.4)	17(43.6)	39(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3(75.0)	1(25.0)	4(100.0)	
	합계	27(57.4)	20(42.6)	47(100.0)	
근로 장애인수	15인 이하	9(60.0)	6(40.0)	15(100.0)	1.685
	16~20인	8(57.1)	6(42.9)	14(100.0)	
	21~25인	4(57.1)	3(42.9)	7(100.0)	
	26~30인	4(80.0)	1(20.0)	5(100.0)	
	31인 이상	3(42.9)	4(57.1)	7(100.0)	
	합계	28(58.3)	20(41.7)	48(100.0)	
훈련 장애인 수	15인 이하	12(52.2)	11(47.8)	23(100.0)	2.560
	16~20인	6(60.0)	4(40.0)	10(100.0)	
	21~25인	1(50.0)	1(50.0)	2(100.0)	
	26~30인	1(100.0)	—	1(100.0)	
	31인 이상	2(100.0)	—	2(100.0)	
	합계	22(57.9)	16(42.1)	38(100.0)	
근로 및	10인 이하	—	—	—	2.514



구분		직원 교육훈련여비 지출여부			
		예	아니오	합계	X^2
훈련 장애인수	11~20인	7(77.8)	2(22.2)	9(100.0)	
	21~30인	8(50.0)	8(50.0)	16(100.0)	
	31~40인	7(50.0)	7(50.0)	14(100.0)	
	41인 이상	6(66.7)	3(33.3)	9(100.0)	
	합계	28(58.3)	20(41.7)	48(100.0)	

(10) 직원교육훈련여비 사용출처 및 비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 중 재정관련 사항에 관하여 ‘직원교육훈련여비 사용출처 및 비중’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여비가 51.1%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교육훈련비 44.7%, 기타 4.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직원해외연수, 인건비 등의 응답이 있었다.

<표 4-19> 직원교육훈련여비 사용출처 및 비중 평균

(단위:n=48, 개소, %)

직원교육훈련여비 사용출처		빈도	비중(비율)
전체		47	-
교육훈련비		21	44.7
여비		24	51.1
기타	인건비, 직원해외연수	2	4.3

(11) 시설유형, 근로/훈련 장애인 수 별 생산활동지원비 지출 여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 중 재정관련 사항에 관하여 ‘귀 기관은 2015년에 수령한 지원금으로 생산활동지원비를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 시설종류에 따라 예 17명(36.2%) 아니오 30명(63.8%), 근로 장애인 수에 따라 예 17명(35.4%), 아니오 31명(64.6%), 훈련 장애인 수에 따라 예 14명(36.8%), 아니오 24명(63.2%), 장애인 수에 따라 예 17명(35.4%), 아니오 31명(64.6%)으로 나타났다. 모든 유형에서 생산활동지원비

를 지출한 적이 없다는 응답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표 4-20> 시설유형, 근로/훈련 장애인 수 별 생산활동지원비 지출여부
(단위:n=48, 개소, %)

구분		생산활동지원비 지출여부			
		예	아니오	합계	X 2
시설 유형	근로사업장	2(50.0)	2(50.0)	4(100.0)	.549
	보호작업장	14(35.9)	25(64.1)	39(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1(25.0)	3(75.0)	4(100.0)	
	합계	17(36.2)	30(63.8)	47(100.0)	
근로 장애인수	15인 이하	5(33.3)	10(66.7)	15(100.0)	5.384
	16~20인	3(21.4)	11(78.6)	14(100.0)	
	21~25인	5(71.4)	2(28.6)	7(100.0)	
	26~30인	2(40.0)	3(60.0)	5(100.0)	
	31인 이상	2(28.6)	5(71.4)	7(100.0)	
	합계	17(35.4)	31(64.6)	48(100.0)	
훈련 장애인수	15인 이하	8(34.8)	15(65.2)	23(100.0)	5.263
	16~20인	4(40.0)	6(60.0)	10(100.0)	
	21~25인	2(100.0)	—	2(100.0)	
	26~30인	—	1(100.0)	1(100.0)	
	31인 이상	—	2(100.0)	2(100.0)	
	합계	14(36.8)	24(63.2)	38(100.0)	
근로 및 훈련 장애인수	10인 이하	—	—	—	3.674
	11~20인	1(11.1)	8(88.9)	9(100.0)	
	21~30인	6(37.5)	10(62.5)	16(100.0)	
	31~40인	7(50.0)	7(50.0)	14(100.0)	
	41인 이상	3(33.3)	6(66.7)	9(100.0)	
	합계	17(35.4)	31(64.6)	48(100.0)	

(12) 생산활동지원비 사용처 및 비중 (다중응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 중 재정관련 사항에 관하여 ‘생산활동지원비 사용처 및 비중’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홍보·광고비·물류비가 48.0%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제품개발비 20.0%, 영업활동비, 기타



16.0%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원재료구입, Q마크인증, 협의체회비, 시·도 등의 응답이 있었다.

<표 4-21> 생산활동지원비 사용출처 및 비중 평균

(단위:n=48, 개소, %)

생산활동지원비 사용출처		빈도	비중(비율)
전체		25	-
제품개발비		5	20.0
홍보·광고비·물류비		12	48.0
영업활동비		4	16.0
기타	Q마크인증, 시·도, 원재료 구입, 협의체회비	4	16.0

(13) 시설유형, 근로/훈련 장애인 수 별 기타항목 지출 여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 중 재정관련 사항에 관하여 ‘귀 기관은 2015년에 수령한 지원금으로 기타 항목을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 시설종류에 따라 예 11명(23.4%) 아니오 36명(76.6%)으로 나타났다. 근로 장애인 수에 따라 예 11명(22.9%), 아니오 37명(77.1%)으로 나타났다. 훈련 장애인 수에 따라 예 9명(23.7%), 아니오 29명(76.3%)으로 나타났다. 근로와 훈련을 합한 장애인 수에 따라 예 11명(22.9%), 아니오 37명(77.1%)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유형에서 기타 항목을 지출한 적이 없다는 응답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표 4-22> 시설유형, 근로/훈련 장애인 수 별 기타항목 지출여부

(단위:n=48, 개소, %)

구분		생산활동지원비 지출여부			
		예	아니오	합계	X^2
시설 유형	근로사업장	1(25.0)	3(75.0)	4(100.0)	.014
	보호작업장	9(23.1)	30(76.9)	39(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1(25.0)	3(75.0)	4(100.0)	
	합계	11(23.4)	36(76.6)	47(100.0)	

구분		생산활동지원비 지출여부			
		예	아니오	합계	X^2
근로 장애인수	15인 이하	4(26.7)	11(73.3)	15(100.0)	.987
	16~20인	2(14.3)	12(85.7)	14(100.0)	
	21~25인	2(28.6)	5(71.4)	7(100.0)	
	26~30인	1(20.0)	4(80.0)	5(100.0)	
	31인 이상	2(28.6)	5(71.4)	7(100.0)	
	합계	11(22.9)	37(77.1)	48(100.0)	
훈련 장애인수	15인 이하	5(21.7)	18(78.3)	23(100)	1.966
	16~20인	2(20.0)	8(80.0)	10(100)	
	21~25인	1(50.0)	1(50.0)	2(100.0)	
	26~30인	0(0)	1(100.0)	1(100.0)	
	31인 이상	1(50.0)	1(50.0)	2(100.0)	
	합계	9(23.7)	29(76.3)	38(100.0)	
근로 및 훈련 장애인수	10인 이하	—	—	—	1.359
	11~20인	1(11.1)	8(88.9)	9(100.0)	
	21~30인	5(31.3)	11(68.8)	16(100.0)	
	31~40인	3(21.4)	11(78.6)	14(100.0)	
	41인 이상	2(22.2)	7(77.8)	9(100.0)	
	합계	11(22.9)	37(77.1)	48(100.0)	

(14) 기타항목 사용출처 및 비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 중 재정관련 사항에 관하여 ‘기타항목 사용출처 및 비중’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총 15 개소에서 응답을 해 주었으며, 사회교육행사비, 시군구보조금, 시설관리비, 원료구매비, 종사자급여, 컴퓨터 구입, 한화지원사업(오프라인 매장개설), 회의비, 기타사업비, 사회적응훈련, 생계비, 이용자급여, 훈련생훈련비, 자산취득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등으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 중 예산항목별로 사용된 비율

(1) 시설유형, 근로/훈련 장애인 수 별 이용장애인 보호비 사용비율



‘이용장애인 보호비 예산항목 사용’ 과 관련하여 지출된 예산의 재원별 비중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부담 비율이 41.2%였으며, ‘시·도 지원금’으로 지출한 비율이 37.4%, ‘민간지원’에서 지출된 비율도 16.9%를 차지하였다. 결과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기본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이용장애인 보호비’ 임에도 불구하고 시·도 예산만으로는 충당하는 것이 어려워 자부담, 민간지원 등의 재원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4-23>시설유형, 근로/훈련 장애인 수 별 이용장애인 보호비 사용비율 평균
(단위: n=48, 개소, %)

구분		이용장애인 보호비 예산항목 사용 비율 평균				
		N	시·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민간	자부담
전체		47	37.4	4.5	16.9	41.2
시설 유형	근로사업장	4	44.2	—	—	55.8
	보호작업장	39	38.5	2.6	15.0	43.9
	직업적응훈련시설	4	51.5	5.7	16.5	26.3
근로 장애인 수	15인 이하	15	42.0	3.9	1.6	52.6
	16~20인	14	37.0	0.6	24.6	37.8
	21~25인	7	45.1	8.9	16.8	29.2
	26~30인	5	55.2	3.9	—	40.8
	31인 이상	7	37.0	—	—	63.0
훈련 장애인 수	15인 이하	23	44.1	4.9	19.4	31.6
	16~20인	10	39.6	2.6	1.7	56.1
	21~25인	2	100.0	—	—	—
	26~30인	1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31인 이상	2	16.0	—	—	84.0
근로 및 훈련 장애인 수	10인 이하	0	—	—	—	—
	11~20인	9	47.1	3.6	—	49.3
	21~30인	16	31.4	6.8	15.3	46.5
	31~40인	14	51.4	2.8	—	45.8
	41인 이상	9	49.0	—	—	51.0

(2) 시설유형, 근로/훈련 장애인 수 별 시설 관리비 사용비율 평균

‘시설 관리비’ 항목과 관련하여 지출된 예산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시·도 지원금으로 40.1%를 지출, 자부담으로는 36.7%, 민간지원으로 15.0%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지원예산은 ‘이용장애인 보호비’에서 지출된 비율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24> 시설유형, 근로/훈련 장애인 수 별 시설 관리비 예산항목 사용 비율 평균
(단위:n=48, 개소, %)

구분		시설 관리비 예산항목 사용 비율 평균					합계
		N	시·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민간	자부담	
전체		47	40.1	8.2	15.0	36.7	100.0
시설 유형	근로사업장	4	34.2	—	—	65.8	100.0
	보호작업장	39	41.1	8.5	15.1	35.4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4	54.4	7.7	—	37.8	100.0
근로 장애인 수	15인 이하	15	49.1	5.2	5.3	40.4	100.0
	16~20인	14	41.8	15.6	10.3	32.3	100.0
	21~25인	7	29.4	—	34.0	36.6	100.0
	26~30인	5	61.0	—	—	39.0	100.0
	31인 이상	7	30.3	—	20.9	48.8	100.0
훈련 장애인 수	15인 이하	23	41.1	9.9	15.8	33.2	100.0
	16~20인	10	46.2	—	13.0	40.7	100.0
	21~25인	2	100.0	—	—	—	100.0
	26~30인	1	27.0	1.0	—	72.0	100.0
	31인 이상	2	79.0	—	—	21.0	—
근로 및 훈련 장애인 수	10인 이하	0	—	—	—	—	100.0
	11~20인	9	54.5	5.3	1.7	38.5	100.0
	21~30인	16	48.3	13.0	6.9	31.8	100.0
	31~40인	14	21.1	7.5	26.0	45.5	100.0
	41인 이상	9	46.0	—	20.7	33.3	



(3) 시설유형, 근로/훈련 장애인 수 별 직업적응훈련비 사용비율 평균

직업적응훈련비 항목으로 지출된 예산을 재원별로 구분해보면, 자부담이 35.1%로 가장 높았으며, 민간지원 25.3%, 시·도지원으로 19.9%,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으로 19.8% 정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은 직업적응훈련을 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비율이 당연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4-25> 시설유형, 근로/훈련 장애인 수 별 직업적응훈련비 사용비율 평균

(단위:n=48, 개소, %)

구분		직업적응훈련비 예산항목 사용 비율 평균					합계
		N	시·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민간	자부담	
전체		47	19.9	19.8	25.3	35.1	100.0
시설 유형	근로사업장	4	43.1	—	—	56.9	100.0
	보호작업장	39	18.6	18.6	25.9	36.9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4	58.8	41.2	—	—	100.0
근로 장애인 수	15인 이하	15	30.8	32.6	—	36.6	100.0
	16~20인	14	18.1	13.9	32.7	35.3	100.0
	21~25인	7	9.7	31.9	—	58.4	100.0
	26~30인	5	10.4	16.9	—	72.7	100.0
	31인 이상	7	32.1	13.6	12.8	41.5	100.0
훈련 장애인 수	15인 이하	23	19.5	19.4	24.8	36.3	100.0
	16~20인	10	29.3	15.8	—	54.9	100.0
	21~25인	2	100.0	—	—	—	100.0
	26~30인	1	7.0	80.0	—	13.0	100.0
	31인 이상	2	11.5	—	—	88.5	100.0
근로 및 훈련 장애인 수	10인 이하	0	—	—	—	—	—
	11~20인	9	37.6	30.8	—	31.6	100.0
	21~30인	16	20.6	14.7	31.8	32.9	100.0
	31~40인	14	10.0	33.1	—	56.9	100.0
	41인 이상	9	23.8	15.5	13.4	47.3	100.0

(4) 시설유형, 근로/훈련 장애인 수 별 직업훈련비 사용비율

직업훈련비로는 자부담의 지출비율이 가장 높아 49.7%로 나타났으며, 시·도 지원으로는 40.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으로 10.2% 정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항목에 비해 직업훈련비에 자부담의 지출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시설유형, 근로/훈련 장애인 수 별 직업훈련비 사용 비율 평균
(단위:n=48, 개소, %)

구분		직업훈련비 예산항목 사용 비율 평균					합계
		N	시·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민간	자부담	
전체		47	40.1	10.2	—	49.7	100.0
시설 유형	근로사업장	4	50.0	—	—	50.0	100.0
	보호작업장	39	37.3	12.0	—	50.8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4	91.7	8.3	—	—	100.0
근로 장애인 수	15인 이하	15	40.9	12.3	—	46.8	100.0
	16~20인	14	51.3	3.1	—	45.6	100.0
	21~25인	7	—	—	—	100.0	100.0
	26~30인	5	—	18.2	—	81.8	100.0
	31인 이상	7	50.0	—	—	50.0	100.0
훈련 장애인 수	15인 이하	23	51.1	6.2	—	42.7	100.0
	16~20인	10	30.0	18.0	—	52.0	100.0
	21~25인	2	100.0	—	—	—	100.0
	26~30인	1	—	3.0	—	97.0	100.0
	31인 이상	2	100.0	—	—	—	100.0
근로 및 훈련 장애인 수	10인 이하	0	—	—	—	—	—
	11~20인	9	52.7	5.8	—	41.5	100.0
	21~30인	16	39.0	15.4	—	45.6	100.0
	31~40인	14	9.0	8.8	—	82.2	100.0
	41인 이상	9	50.0	—	—	50.0	100.0

(5) 시설유형, 근로/훈련 장애인 수 별 생산활동지원비 사용비율 평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 중 재정관련 사항에 관하여 ‘생산활동지원비



예산항목 사용 비율’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자부담 평균 45.4%, 민간 평균 23.1%, 시·도 평균 19.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 평균 12.0%, 순으로 생산활동지원비 예산항목 사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 시설유형, 근로/훈련 장애인 수 별 생산활동지원비 사용비율 평균
(단위:n=48, 개소, %)

구분		직원교육훈련여비 예산항목 사용 비율 평균					합계
		N	시·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민간	자부담	
전체		47	19.5	12.0	23.1	45.4	100.0
시설 유형	근로사업장	4	24.6	—	—	75.4	100.0
	보호작업장	39	17.3	12.5	23.4	46.8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4	50.0	10.0	—	40.0	100.0
근로 장애인 수	15인 이하	15	22.0	15.6	15.6	46.9	100.0
	16~20인	14	28.9	—	0.8	70.3	100.0
	21~25인	7	8.7	16.6	—	74.6	100.0
	26~30인	5	—	—	50.0	50.0	100.0
	31인 이상	7	47.5	—	—	52.5	100.0
훈련 장애인 수	15인 이하	23	23.4	11.5	21.5	43.6	100.0
	16~20인	10	25.2	15.0	—	59.8	100.0
	21~25인	2	100.0	—	—	—	100.0
	26~30인	1	18.0	—	—	82.0	100.0
	31인 이상	2	—	—	—	—	100.0
근로 및 훈련 장애인 수	10인 이하	0	—	—	—	—	—
	11~20인	9	19.7	16.0	16.0	48.2	100.0
	21~30인	16	32.7	12.4	0.6	54.2	100.0
	31~40인	14	9.8	—	—	90.2	100.0
	41인 이상	9	27.5	9.0	45.0	18.5	100.0

(6) 시설유형, 근로/훈련 장애인 수 별 직원교육훈련여비 사용비율 평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 중 재정관련 사항에 관하여 ‘직원교육훈련여비 예산항목 사용 비율’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자부담 평균 32.4%, 민간 평균 31.3%, 시·도 평균 26.6%,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 평균 9.6%, 순으로

직원교육훈련여비 예산항목 사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8> 시설유형, 근로/훈련 장애인 수 별 직원교육훈련여비 사용비율 평균
(단위:n=48, 개소, %)

구분		기타 예산항목 사용 비율 평균					합계
		N	시·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민간	자부담	
전체		47	26.6	9.6	31.3	32.4	100.0
시설 유형	근로사업장	4	60.5	—	—	39.5	100.0
	보호작업장	39	24.7	11.3	30.8	33.2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4	54.5	4.7	—	40.8	100.0
근로 장애인 수	15인 이하	15	44.3	18.2	—	37.4	100.0
	16~20인	14	33.7	16.7	14.3	35.3	100.0
	21~25인	7	23.6	5.1	—	71.3	100.0
	26~30인	5	19.3	—	38.2	42.5	100.0
	31인 이상	7	24.8	—	40.3	34.9	100.0
훈련 장애인 수	15인 이하	23	22.3	12.6	28.4	36.7	100.0
	16~20인	10	45.6	0.8	—	53.5	100.0
	21~25인	2	100.0	—	—	—	100.0
	26~30인	1	48.0	16.0	—	36.0	100.0
	31인 이상	2	11.7	—	44.7	43.6	100.0
근로 및 훈련 장애인 수	10인 이하	0	—	—	—	—	—
	11~20인	9	41.5	22.3	—	36.2	100.0
	21~30인	16	37.5	12.1	13.9	36.5	100.0
	31~40인	14	34.0	11.1	—	54.9	100.0
	41인 이상	9	19.7	—	48.6	31.6	100.0

(7) 시설유형, 근로/훈련 장애인 수 별 기타 사용비율 평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 중 재정관련 사항에 관하여 ‘기타 예산항목 사용 비율’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자부담 평균 56.0%, 시·도 평균 38.1%,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 평균 5.9%, 민간 평균 0.0% 순으로 기타 예산항목 사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응답으로는 회의비, 직원복지, 종사자급여, 이용자급여, 훈련생 훈련비, 기타사업비, 잡지출, 운영위원회 회의비,

생산품 생산을 위한 부자재 구입비, 사회교육행사비, 기타운영비, 근로장애인 등 복리후생비, 각종프로그램 등이 있었다.

<표 4-29> 시설유형, 근로/훈련 장애인 수 별 기타 사용비율 평균

(단위:n=48, 개소, %)

구분		기타 예산항목 사용비율 평균					합계
		N	시·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민간	자부담	
전체		47	38.1	5.9	—	56.0	100.0
시설 유형	근로사업장	4	35.2	—	—	64.8	100.0
	보호작업장	39	38.4	9.0	—	52.7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4	—	2.9	—	97.1	100.0
근로 장애인 수	15인 이하	15	44.8	5.5	—	49.8	100.0
	16~20인	14	—	—	—	100.0	100.0
	21~25인	7	—	—	—	100.0	100.0
	26~30인	5	—	—	—	100.0	100.0
	31인 이상	7	26.4	—	—	73.6	100.0
훈련 장애인 수	15인 이하	23	49.3	1.5	—	49.3	100.0
	16~20인	10	49.6	8.5	—	41.8	100.0
	21~25인	2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26~30인	1	56.0	—	—	44.0	100.0
	31인 이상	2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근로 및 훈련 장애인 수	10인 이하	0	—	—	—	—	—
	11~20인	9	39.2	2.0	—	58.8	100.0
	21~30인	16	48.0	8.2	—	43.8	100.0
	31~40인	14	27.5	—	—	72.5	100.0
	41인 이상	9	50.7	—	—	49.3	100.0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 중 지원항목별로 사용된 비율

(1) 시설유형, 근로/훈련 장애인 수 별 시도 지원금 사용항목 비율 평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 중 재정관련 사항에 관하여 ‘시도 예산항목 사용 비율’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직업훈련비가 1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이용장애인보호비 16.0%, 시설관리비 15.3%, 직업교육훈련여비 15.0%, 기타 14.2%, 생산활동지원비 10.3%, 직업적응훈련비 9.9%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0> 시설유형, 근로/훈련 장애인 수 별 시도 예산항목 사용비율 평균
(단위:n=48, 개소, %)

구분		시도 예산항목 사용항목 비율								합계
		N	이용장애 인 보호비	시설관 리비	직업적 응훈련 비	직업훈 련비	생산활 동지원 비	직업교 육훈련 여비	기타	
전체		47	16.0	15.3	9.9	19.3	10.3	15.0	14.2	100.0
시설 유형	근로사업장	4	13.3	10.0	10.9	29.7	6.5	18.6	11.0	100.0
	보호작업장	39	16.4	16.4	9.5	17.8	9.5	14.8	15.6	100.0
	직업적응훈련 시설	4	18.5	13.1	18.5	18.5	18.5	12.9	—	100.0
근로 장애 인 수	15인 이하	15	14.5	14.9	11.9	14.4	9.5	18.0	16.6	100.0
	16~20인	14	17.9	16.2	9.4	29.8	10.4	16.2	—	100.0
	21~25인	7	47.6	25.8	5.5	—	5.8	15.2	—	100.0
	26~30인	5	36.4	36.2	6.4	—	—	21.1	—	100.0
	31인 이상	7	10.3	10.9	12.1	30.2	18.4	11.0	7.1	100.0
훈 련 장 애 인 수	15인 이하	23	17.8	12.6	7.4	21.2	10.0	9.2	21.8	100.0
	16~20인	10	13.5	15.2	12.1	12.7	9.9	16.0	20.6	100.0
	21~25인	2	17.5	12.6	4.4	5.8	5.8	53.8	—	100.0
	26~30인	1	—	17.3	4.5	—	11.5	30.8	35.9	100.0
	31인 이상	2	7.0	34.7	5.1	44.0	—	9.2	—	100.0
근로 및 훈 련 장 애 인 수	10인 이하	0	—	—	—	—	—	—	—	—
	11~20인	9	15.5	15.1	13.7	19.4	7.3	14.7	14.3	100.0
	21~30인	16	12.6	15.8	9.2	16.4	13.1	15.4	17.4	100.0
	31~40인	14	27.9	14.9	6.5	5.1	4.9	24.0	16.7	100.0
	41인 이상	9	13.8	15.4	7.9	27.7	16.9	8.2	10.2	100.0

(2) 시설유형, 근로/훈련 장애인 수 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항목 사용비율 평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 중 재정관련 사항에 관하여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사업 예산항목 사용 비율'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직업적응훈련비가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생산활동지원비 18.7%, 직업교육훈련여비 16.0%, 직업훈련비 14.5%, 시설관리비 9.3%, 기타 6.5%, 이용장애인보호비 5.7%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1> 시설유형, 근로/훈련 장애인 수 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예산항목 사용 비율 평균

(단위:n=48, 개소, %)

구분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사업 예산항목 사용항목 비율								합계
		N	이용장애인 보호비	시설관리비	직업적응훈련비	직업훈련비	생산활동지원비	직업교육훈련여비	기타	
전체		47	5.7	9.3	29.3	14.5	18.7	16.0	6.5	100.0
시설유형	근로사업장	4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보호작업장	39	3.0	9.2	25.6	15.5	18.6	18.3	9.9	100.0
	직업적응훈련시설	4	8.5	7.8	54.3	7.0	15.5	4.7	2.3	100.0
근로장애인수	15인 이하	15	3.8	4.4	35.0	12.0	18.8	20.5	5.6	100.0
	16~20인	14	1.3	25.8	30.9	7.6	—	34.3	—	100.0
	21~25인	7	22.4	—	43.2	—	26.4	7.9	—	100.0
	26~30인	5	11.1	—	44.4	44.4	—	—	—	100.0
	31인 이상	7	—	—	100.0	—	—	—	—	100.0
훈련장애인수	15인 이하	23	7.6	11.8	28.8	9.9	19.1	20.3	2.5	100.0
	16~20인	10	3.6	—	26.4	30.9	23.7	1.2	14.2	100.0
	21~25인	2	—	—	—	—	—	—	—	—
	26~30인	1	—	1.0	80.0	3.0	—	16.0	—	100.0
	31인 이상	2	—	—	—	—	—	—	—	100.0
근로 및 훈련 장애인수	10인 이하	0	—	—	—	—	—	—	—	—
	11~20인	9	3.9	4.8	36.7	7.0	19.5	25.7	2.3	100.0
	21~30인	16	8.3	12.8	19.9	19.6	15.1	15.1	9.1	100.0
	31~40인	14	3.7	13.0	52.2	12.0	—	19.2	—	100.0
	41인 이상	9	—	—	48.1	—	51.9	—	—	100.0

(3) 시설유형, 근로/훈련 장애인 수 별 민간 예산항목 사용비율 평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 중 재정관련 사항에 관하여 '직업적응훈련비

지원항목 사용 비율'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직업교육훈련여비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직업적응훈련비 22.8%, 생산활동지원비 22.1%, 이용장애인보호비 13.0%, 시설관리비 10.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2> 시설유형, 근로/훈련 장애인 수 별 민간 예산항목 사용비율 평균
(단위:n=48, 개소, %)

구분		민간 예산항목 사용항목 비율								합계
		N	이용장 애인 보호비	시설관 리비	직업적 응훈련 비	직업훈 련비	생산활 동지원 비	직업교 육훈련 여비	기타	
전체		47	13.0	10.3	22.8	—	22.1	31.8	—	100.0
시설 유형	근로사업장	4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보호작업장	39	11.3	10.5	23.2	—	22.5	32.4	—	100.0
	직업적응훈련 시설	4	100.0	—	—	—	—	—	—	100.0
근로 장 애 인 수	15인 이하	15	6.1	18.2	—	—	75.8	—	—	100.0
	16~20인	14	29.7	10.0	42.4	—	0.7	17.1	—	100.0
	21~25인	7	37.2	62.8	—	—	—	—	—	100.0
	26~30인	5	—	—	—	—	55.6	44.4	—	100.0
	31인 이상	7	—	25.0	16.0	—	—	59.0	—	100.0
훈 련 장 애 인 수	15인 이하	23	18.2	11.3	21.9	—	21.3	27.3	—	100.0
	16~20인	10	12.1	87.9	—	—	—	—	—	100.0
	21~25인	2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26~30인	1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31인 이상	2	—	—	—	—	—	100.0	—	100.0
근로 및 훈 련 장 애 인 수	10인 이하	0	—	—	—	—	—	—	—	—
	11~20인	9	—	7.4	—	—	92.6	—	—	100.0
	21~30인	16	21.5	7.8	49.7	—	0.9	20.1	—	100.0
	31~40인	14	—	100.0	—	—	—	—	—	100.0
	41인 이상	9	—	11.7	7.5	—	46.7	34.1	—	100.0

(4) 시설유형, 근로/훈련 장애인 수 별 자부담 예산항목 사용비율 평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 중 재정관련 사항에 관하여 '자부담 예산항목 사용 비율'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생산활동지원비가 17.6%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그 다음 직업훈련비 17.5%, 기타 15.4%, 직업교육훈련여비 13.4%, 직업적응훈련비 12.9%, 이용장애인보호비 12.9%, 시설관리비 10.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3> 시설유형, 근로/훈련 장애인 수 별 자부담 예산항목 사용비율 평균
(단위:n=48, 개소, %)

구분		자부담 예산항목 사용항목 비율							합계	
		N	이용장 애인 보호비	시설관 리비	직업적 응훈련 비	직업훈 련비	생산활 동지원 비	직업교 육훈련 여비		기타
전체		47	12.9	10.3	12.9	17.5	17.6	13.4	15.4	100.0
시설 유형	근로사업장	4	12.7	14.5	10.9	22.4	15.1	9.2	15.3	100.0
	보호작업장	39	13.1	9.9	13.2	17.0	18.0	13.9	15.0	100.0
	직업적응훈련 시설	4	15.4	14.8	-	-	24.1	15.7	30.1	100.0
근로 장애 인수	15인 이하	15	15.8	10.7	12.3	14.3	17.7	13.2	16.0	100.0
	16~20인	14	12.4	8.5	12.4	17.9	17.2	11.5	20.2	100.0
	21~25인	7	12.5	13.0	13.4	22.3	20.1	18.6	0.2	100.0
	26~30인	5	9.2	7.9	15.4	16.0	17.8	15.9	17.8	100.0
	31인 이상	7	12.8	12.9	11.5	22.1	14.9	11.3	14.5	100.0
훈련 장애 인수	15인 이하	23	11.6	9.3	12.6	16.1	16.9	13.8	19.8	100.0
	16~20인	10	13.9	9.8	16.6	16.1	17.2	13.7	12.7	100.0
	21~25인	2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26~30인	1	-	20.9	3.8	28.2	23.8	10.5	12.8	100.0
	31인 이상	2	30.9	7.7	32.6	-	-	28.7	-	100.0
근로 및 훈련 장애 인수	10인 이하	0	-	-	-	-	-	-	-	-
	11~20인	9	15.3	10.1	10.8	14.4	17.0	12.1	20.3	100.0
	21~30인	16	16.2	9.0	12.7	16.6	18.8	13.0	13.7	100.0
	31~40인	14	9.3	12.1	13.7	17.2	17.0	14.5	16.4	100.0
	41인 이상	9	13.9	10.8	15.1	26.8	11.0	12.7	9.6	100.0

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본지원금 관련 의견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본지원금 관련 의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금 관련의견 사항에 관하여 ‘귀하는 현재 직업재활 시설의 기본지원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평균 2.4점으로 나타나 현재 직업재활시설의 기본지원금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참여자들의 대부분은 담당직무, 관련전공, 거주지역, 근로/훈련 장애인 수에 상관없이 기본지원금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4> 기본지원금 관련 의견

(단위:n=48, 개소, 점)

구분		기본지원금 관련 의견						
		N	매우 적절하지 않음	조금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 지 않음	적절함	조금 적절함	매우 적절함
전체		50	43.5	13	19.6	17.4	6.5	—
담당직무	생산	2	50	—	—	—	50	—
	훈련	18	33.3	22.2	16.7	16.7	11.1	—
	회계	21	42.9	—	23.8	23.8	9.5	—
	사무국장	4	50	25	25	—	—	—
	원장	5	80	20	—	—	—	—
관련전공	사회복지	25	36	4	24	24	12	—
	직업재활	15	60	26.7	6.7	6.7	—	—
	특수교육	1	100	—	—	—	—	—
	기타	5	20	20	40	20	—	—
거주지역	서울	9	22.2	33.3	11.1	22.2	11.1	—
	경기·인천	9	33.3	22.2	22.2	—	22.2	—
	경상권	11	72.7	9.1	9.1	9.1	—	—
	호남권	6	33.3	—	50	16.7	—	—
	충청권	7	57.1	—	14.3	28.6	—	—
	강원도	1	—	—	—	100	—	—
	제주	3	33.3	—	33.3	33.3	—	—
근로장애인수	15인 이하	15	33.3	13.3	13.3	26.7	13.3	—
	16~20인	13	46.2	23.1	23.1	7.7	—	—
	21~25인	6	66.7	16.7	16.7	—	—	—
	26~30인	5	60	—	20	20	—	—
	31인 이상	7	28.6	—	28.6	28.6	14.3	—
훈련	15인 이하	21	42.9	14.3	23.8	9.5	9.5	—



구분		기본지원금 관련 의견							평균
		N	매우 적절하지 않음	조금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 지 않음	적절함	조금 적절함	매우 적절함	
려 장 애 인 수	16~20인	10	40	30	—	20	10	—	2.3
	21~25인	2	—	—	50	50	—	—	3.5
	26~30인	1	100	—	—	—	—	—	1
	31인 이상	2	50	—	—	50	—	—	2.5
근 로 맞 춤 장 애 인 수	10인 이하	0	—	—	—	—	—	—	—
	11~20인	9	33.3	11.1	22.2	22.2	11.1	—	2.7
	21~30인	15	53.3	20	6.7	13.3	6.7	—	2
	31~40인	13	46.2	7.7	38.5	7.7	—	—	2.1
	41인 이상	9	33.3	11.1	11.1	33.3	11.1	—	2.8

(2) 기본지원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기본지원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4가지로 정리되었다. 첫째, 과반수 이상(21개소, 67.7%)이 현재 지원금 수준으로 기본적인 시설 운영조차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둘째,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19.4%(6개소)로 나타났다. 셋째, 근로 장애인에 충분한 임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근로 기회 제공’이라는 시설의 목적을 이루기에 부족(2개소, 6.5%)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넷째,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 등 시설 유형별로 기본지원금 수준의 차이가 무의미하며, 둘 간의 간극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5%(2개소)로 나타났다.

<표 4-35> 기본지원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개소, %)

내용	빈도(비율)
기본적인 시설 운영에 제한	21(67.7)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에 제한	6(19.4)
시설의 목적을 이루기에 부족함	2(6.5)
시설 유형별 지원금 차이가 무의미함	2(6.5)
전체	31(100.0)

아래에는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한 이유들이다.

1인당 1만5천이므로 원활한 직업적응훈련을 진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2015년도에는 관리운영비를 지원 받지 못했을 뿐더러 자체적인 규정을 정하여 그 규정에 미달이 되면 지원금을 삭감하고 매년 전년도 기준으로 지원을 받다 연말이 되어 예산이 남으면 마지막 분기에만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운영비 충당액이 모자라서. 자부담으로 많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프로그램의 질적인 면을 높이기 위해 예산이 부족함. 이용자들의 질적인 측면을 높여주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함.

지원되는 운영비로는 공공요금만 납부해도 남는게 없습니다.

(3) 인원가중 지원금액이 유형별로 지급되는 정책에 대한 의견 (다중응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금 관련의견 사항에 관하여 ‘귀하는 현재 직업재활 시설의 인원가중 지원금액이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으로 따로 구분되어 지급되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 평균 2.7점으로 나타나 유형별로 지급되는 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문참여자들 대부분은 담당직무, 관련전공, 거주지역, 근로/훈련 장애인 수에 상관없이 기인원가중 지원금 단가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6> 인원가중 지원금액이 유형별로 지급되는 정책에 대한 의견

(단위: n=50, 비율, 점)

구분		인원가중 지원금액이 따로 구분되어 지급되는 정책에 대한 의견							
		N	매우 적절 하지 않음	조금 적절 하지 않음	적절 하지 않음	적절함	조금 적절함	매우 적절함	평균
전체		50	34.8	13.0	19.6	17.4	13.0	2.2	2.7
담당 직무	생산	2	50.0	—	—	—	50.0	—	3.0
	훈련	18	27.8	22.2	5.6	27.8	16.7	—	2.8
	회계	21	33.3	4.8	38.1	9.5	14.3	—	2.7
	사무국장	4	50.0	—	—	25.0	25.0	—	2.8
	원장	5	60.0	20.0	—	—	—	20.0	2.2
관련 전공	사회복지	25	24.0	4.0	24.0	24.0	24.0	—	3.2
	직업재활	15	53.3	26.7	6.7	6.7	—	6.7	1.9
	특수교육	1	100.0	—	—	—	—	—	1.0
	기타	5	20.0	20.0	40.0	20.0	—	—	2.6
거주지 역	서울	9	11.1	33.3	33.3	11.1	11.1	—	2.8
	경기·인천	9	33.3	11.1	11.1	22.2	22.2	—	2.9
	경상권	11	54.5	9.1	18.2	9.1	—	9.1	2.2
	호남권	6	16.7	16.7	50.0	—	16.7	—	2.8
	충청권	7	57.1	—	—	14.3	28.6	—	2.6
	강원도	1	—	—	—	100.0	—	—	4.0
	제주	3	33.3	—	—	66.7	—	—	3.0
근로 장애 인 수	15인 이하	15	33.3	13.3	6.7	13.3	33.3	—	3.0
	16~20인	13	30.8	23.1	46.2	—	—	—	2.2
	21~25인	6	66.7	—	—	33.3	—	—	2.0
	26~30인	5	20.0	20.0	—	40.0	—	20.0	3.4
	31인 이상	7	28.6	—	28.6	28.6	14.3	—	3.0
훈련 장애 인 수	15인 이하	21	38.1	14.3	19.0	9.5	19.0	—	2.6
	16~20인	10	20.0	20.0	10.0	40.0	10.0	—	3.0
	21~25인	2	—	50.0	—	—	50.0	—	3.5
	26~30인	1	100.0	—	—	—	—	—	1.0
	31인 이상	2	50.0	—	—	50.0	—	—	2.5
근로 및	10인 이하	0	—	—	—	—	—	—	—
	11~20인	9	33.3	11.1	22.2	—	33.3	—	2.9

구분		인원가중 지원금액이 따로 구분되어 지급되는 정책에 대한 의견							
		N	매우 적절 하지 않음	조금 적절 하지 않음	적절 하지 않음	적절함	조금 적절함	매우 적절함	평균
훈련 장애 인수	21~30인	15	40.0	13.3	20.0	13.3	6.7	6.7	2.5
	31~40인	13	38.5	15.4	23.1	15.4	7.7	—	2.4
	41인 이상	9	22.2	11.1	11.1	44.4	11.1	—	3.1

(4) 인원가중 지원금액이 구분되어 지급되는 정책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인원가중 지원금액이 구분되어 지급되는 정책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시설 유형에 따라 인원가중 지원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11건(47.8%)로 가장 많았다. 즉, 근로사업장이나 보호작업장 모두 근로시설로 인가를 받은 ‘직업재활시설’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둘째, 현재 보호작업장의 인원가중 지원금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10건(43.5%)으로 나타났다. 보호작업장은 근로사업장에 비해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교육과 지원에 더 많은 금액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낮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근로사업장의 경우 장애인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1건, 4.3%)이 나타났다. 넷째, 인원가중지원금 단가 설정의 근거가 모호하기 때문에 유형 구분이 부적절하다는 의견(1건, 4.3%)으로 나타났다.

<표 4-37> 인원가중 지원금액이 유형별로 지급되는 정책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단위: 개소, %)

내용	빈도(비율)
시설 유형 구분은 의미 없음	11(47.8)
보호작업장의 인원가중 지원금 단가가 너무 낮음	10(43.5)
근로사업장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	1(4.3)



내용	빈도(비율)
가중지원금 단가설정의 근거가 모호함	1(4.3)
전체	23(100.0)

아래에는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한 이유들이다.

근로 사업장에 비해 보호작업장의 인원가중치 비용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

근로시설과 보호작업장 차등을 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시설과 보호작업장의 구분 기준은 행정적으로 나뉘어 있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고 근로시설로 인가 받았지만 보호작업정보라 이익률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곳도 많기 때문에.

보호작업장의 경우 대부분 중증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소용되는 비용이 많은데 오히려 개인별 지원금이 너무 부족하여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어려운 상태임.

보호작업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분들은 근로보다 보호가 우선이 되어지는 분들이 대다수 이다 이런 분들에게 가중지원이 더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근로사업장 근로인 분들은 임금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보호작업장 이용자 분들은 그런 혜택이 낮으므로 같은 가중지원을 받는다면 장래로 인하여 받는 차별을 덜 느끼지 않을까 함.

프로그램 진행을 예로 들면 근로사업장은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진행이 많은데 비해 지원이 적어 형평성에 맞지 않음.

직업능력에 관계없이 똑같은 대우와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직업재활시설의 1인당 지원기준에 대한 의견 (다중응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금 관련의견 사항에 관하여 ‘귀하는 현재 직업재활 시설의 인원가중 지원금 단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 평균 2.5점으로 나타나 인원가중 지원금 단가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문참여자들 대부분은 담당직무, 관련전공, 거주지역, 근로/훈련 장애인 수에 상관없이 인원가중 지원금 단가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8> 직업재활시설의 1인당 지원기준에 대한 의견

(다중응답, 단위:n=50, 비율, 점)

구분		직업재활시설의 1인당 지원기준액에 대한 의견						
		N	매우 적절 하지 않음	조금 적절 하지 않음	적절 하지 않음	적절함	조금 적절함	평균
전체		50	37.0	19.6	15.2	19.6	8.7	2.5
담당 직 무	생산	2	50.0	—	—	—	50.0	3.0
	훈련	18	22.2	33.3	11.1	22.2	11.1	2.7
	회계	21	38.1	9.5	23.8	23.8	4.8	2.5
	사무국장	4	50.0	25.0	—	—	25.0	2.3
	원장	5	60.0	20.0	—	—	20.0	2.0
관련 전 공	사회복지	25	32.0	8.0	16.0	32.0	12.0	2.8
	직업재활	15	46.7	40.0	6.7	—	6.7	1.8
	특수교육	1	100.0	—	—	—	—	1.0
	기타	5	20.0	20.0	40.0	20.0	—	2.6
거 주 지 역	서울	9	11.1	55.6	22.2	—	11.1	2.4
	경기·인천	9	33.3	22.2	11.1	22.2	11.1	2.6
	경상권	11	63.6	9.1	9.1	9.1	9.1	1.9
	호남권	6	16.7	16.7	33.3	16.7	16.7	3.0
	충청권	7	57.1	—	—	42.9	—	2.3
	강원도	1	—	—	—	100.0	—	4.0
	제주	3	33.3	—	33.3	33.3	—	2.7



구분		직업재활시설의 1인당 지원기준액에 대한 의견						
		N	매우 적절 하지 않음	조금 적절 하지 않음	적절 하지 않음	적절함	조금 적절함	평균
종사 자 수	5인 미만	12	16.7	25.0	16.7	16.7	25.0	3.1
	5~10인	24	50.0	12.5	12.5	20.8	4.2	2.2
	11~15인	3	33.3	66.7	—	—	—	1.7
	16~20인	1	—	—	100.0	—	—	3.0
	21인 이상	6	33.3	16.7	16.7	33.3	—	2.5
근로 장 애 인 수	15인 이하	15	33.3	20.0	6.7	26.7	13.3	2.7
	16~20인	13	46.2	15.4	23.1	7.7	7.7	2.2
	21~25인	6	33.3	50.0	—	16.7	—	2.0
	26~30인	5	40.0	20.0	20.0	20.0	—	2.2
	31인 이상	7	28.6	—	28.6	28.6	14.3	3.0
훈련 장 애 인 수	15인 이하	21	33.3	19.0	19.0	9.5	19.0	2.6
	16~20인	10	30.0	40.0	—	30.0	—	2.3
	21~25인	2	—	50.0	—	50.0	—	3.0
	26~30인	1	100.0	—	—	—	—	1.0
	31인 이상	2	50.0	—	—	50.0	—	2.5
근로 및 훈련 장 애 인 수	10인 이하	0	—	—	—	—	—	—
	11~20인	9	33.3	11.1	11.1	22.2	22.2	0.0
	21~30인	15	46.7	20.0	13.3	13.3	6.7	2.9
	31~40인	13	38.5	23.1	23.1	15.4	—	2.1
	41인 이상	9	22.2	22.2	11.1	33.3	11.1	2.2

(6) 직업재활시설의 1인당 지원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직업재활시설의 인원가중 지원금 단가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는 의견이 19건(9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물가 인상을 대비 지원금 인상폭이 낮으며 현재 수준에서 최소한의 관리운영비를 부담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을 의미한다. 특히, 응답자들은 보호작업장 인원가중 지원금 단가 향상(6건/19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둘째, 인원수 이외의 기준을 사용하여 단가 책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2건(9.5%)으로 조사되었다. 즉, 시설의 지리적 환경과 시설 규모, 재정적 환경(매출) 등 제반

환경에 대한 고려를 통해 지원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39> 직업재활시설의 1인당 지원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단위: 개소, %)

내용	빈도(비율)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됨	19(90.5)
인원수 이외의 단가 책정 기준 필요	2(9.5)
전체	21(100.0)

아래에는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한 이유들이다.

근로사업장은 매출도 크고 이용장애인의 임금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호작업장에서도 관리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보호작업장의 경우 차등지원 정책(매출액, 장애인임금 등)을 마련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근로사업장의 장애인은 장애정도가 경증인 반면, 보호작업장은 중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보호작업장의 지원이 더 절실하다.

시설 규모 대비와 매출대비를 비교하여 매출이 높은 시설에 운영비 적용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물가 인상 대비 인상폭이 너무 작음.

보호작업장 이용인이 30명일 경우 근로사업장과 동일한 조건이 됨. 이로 인해 기본지원금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나, 인원가중치는 이용인원이 많을 경우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함으로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이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보호작업장의 기능과 근로사업장의 기능적 차이와 매출 및 수익구조에 대한 차등이 필요함. 단 일정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보호작업장의 경우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음. 생산적 활동을 하는 근로사업장 및 보호작업장의 경우 추가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함으로 그 부분에 대한 차등적 증액은 필요하리라 생각됨

(7) 1인당 지원기준 개선 방안 (다중응답)

직업재활시설 지원금 관련 의견 사항에 관하여 ‘직업재활시설의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중 인원에 따른 가중지원 정책이 개선된다면, 다음 중 어떠한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 시설 유형 구분없이 근로사업장과 동일한 단가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유형을 구분하고, 보호작업장 단가 상향’ 41.3%, ‘유형을 구분하고 근로사업장 하향, 보호작업장 상향’, ‘유형구분 없이 동일한 단가’ 6.5%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참여자들의 대부분은 담당직무, 관련전공, 거주지역, 근로/훈련 장애인 수에 상관없이 가중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결과적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는 현재의 지원금이 부족하여 지원단가가 상향되었으면 하는 욕구가 있었고, 특히 보호작업장의 지원금 수준에 대하여 향상되었으면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표 4-40> 1인당 지원기준 개선 시 적절한 방안

(단위: n=50, 개소, %)

구분		1인당 지원기준 개선시 적절한 방안				
		N	유형구분하고, 보호작업장 단가 상향	유형구분하고 근로사업장 하향, 보호작업장 상향	시설 유형 구분없이 근로사업장과 동일한 단가	유형구분 없이 동일한 단가
전체		50	41.3	6.5	45.7	6.5
담당직무	생산	2	50.0	—	50.0	—
	훈련	18	38.9	11.1	44.4	5.6
	회계	21	42.9	—	47.6	9.5
	사무국장	4	50.0	25.0	25.0	—
	원장	5	40.0	—	60.0	—

구분		1인당 지원기준 개선시 적절한 방안				
		N	유형구분하고, 보호작업장 단가 상황	유형구분하고 근로사업장 하향, 보호작업장 상황	시설 유형 구분없이 근로사업장과 동일한 단가	유형구분 없이 동일한 단가
관련 전공	사회복지	25	48.0	12.0	32.0	8.0
	직업재활	15	40.0	—	60.0	—
	특수교육	1	—	—	100.0	—
	기타	5	20.0	—	60.0	20.0
거주 지역	서울	9	33.3	11.1	44.4	11.1
	경기·인천	9	66.7	11.1	22.2	—
	경상권	11	27.3	—	72.7	—
	호남권	6	—	16.7	66.7	16.7
	충청권	7	57.1	—	28.6	14.3
	강원도	1	100.0	—	—	—
	제주	3	66.7	—	33.3	—
종사 자 수	5인 미만	12	41.7	8.3	50.0	—
	5~10인	24	37.5	8.3	45.8	8.3
	11~15인	3	33.3	—	66.7	—
	16~20인	1	—	—	—	100.0
	21인 이상	6	66.7	—	33.3	—
근로 장 애 인 수	15인 이하	15	60.0	6.7	33.3	—
	16~20인	13	23.1	—	76.9	—
	21~25인	6	16.7	16.7	50.0	16.7
	26~30인	5	40.0	—	40.0	20.0
	31인 이상	7	57.1	14.3	14.3	14.3
훈련 장애 인 수	15인 이하	21	19.0	14.3	66.7	—
	16~20인	10	50.0	—	50.0	—
	21~25인	2	100.0	—	—	—
	26~30인	1	—	—	100.0	—
	31인 이상	2	50.0	—	—	50.0
근로 및 훈련 장애 인 수	10인 이하	0	—	—	—	—
	11~20인	9	55.6	11.1	33.3	—
	21~30인	15	33.3	—	60.0	6.7
	31~40인	13	46.2	7.7	46.2	—
	41인 이상	9	33.3	11.1	33.3	22.2



(8) 시설유형, 근로/훈련 장애인 수 별 장애정도에 따른 필요지원 정도 (다중응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금 정도를 장애정도에 따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현재 직업재활시설의 인원가중 지원금 단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 경증장애인에 비해 중증장애인은 평균 4.98배, 약 5배 정도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1> 시설유형, 근로/훈련 장애인 수 별 장애정도에 따른 필요지원 정도
(단위: n=50, 개소, 배)

구분		지원이 필요한 정도		
		N	평균	표준편차
전체		47	4.98	7.59
시설 유형	근로사업장	4	5.88	4.77
	보호작업장	39	4.88	8.12
	직업적응훈련시설	4	5.00	4.36
담당 직무	생산	2	10.00	—
	훈련	18	6.56	11.75
	회계	21	3.58	2.91
	사무국장	4	4.25	3.86
	원장	5	5.20	4.40
관련 전공	사회복지	25	5.45	10.22
	직업재활	15	4.20	3.13
	특수교육	1	3.00	—
	기타	5	7.00	4.12
거주 지역	서울	9	4.56	3.44
	경기·인천	9	3.81	2.70
	경상권	11	3.77	3.11
	호남권	6	10.33	19.44
	충청권	7	4.17	3.06
	강원도	1	2.00	—
	제주	3	5.50	4.27
근로 장애인 수	15인 이하	15	3.46	2.82
	16~20인	14	4.19	2.77
	21~25인	7	2.42	.66

구분		지원이 필요한 정도		
		N	평균	표준편차
	26~30인	5	16.75	22.41
	31인 이상	7	4.92	3.98
훈련 장애인 수	15인 이하	23	4.05	2.80
	16~20인	10	7.95	15.00
	21~25인	2	2.00	—
	26~30인	1	3.00	—
	31인 이상	2	3.00	—
	10인 이하	0	—	—
근로 및 훈련 장애인 수	11~20인	9	4.38	3.50
	21~30인	16	3.77	2.69
	31~40인	14	3.38	2.26
	41인 이상	9	11.21	17.51

(9) 훈련장애인과 근로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 (다중응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금 관련의견 사항에 관하여 ‘지원단가를 조정할 경우, 훈련장애인과 근로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 평균은 6점 만점 중 3.7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사자 수, 근로장애인 수 및 훈련장애인 수가 많을수록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훈련장애인과 근로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2> 훈련/근로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
(단위: n=50, 개소, %, 점)

구분	N	매우 적절 하지 않음	조금 적절 하지 않음	적절 하지 않음	적절함	조금 적절함	매우 적절함	평균
전체	50	13.0	8.7	13.0	32.6	26.1	6.5	3.7
담당 직무	생산	2	—	50.0	—	—	50.0	3.5
	훈련	18	16.7	11.1	11.1	44.4	16.7	3.3
	회계	21	4.8	9.5	14.3	28.6	33.3	4.0
	사무국장	4	25.0	—	25.0	25.0	25.0	3.3



구분		N	매우 적절 않음	조금 적절 않음	적절 하지 않음	적절함	조금 적절함	매우 적절함	평균
관련 전공	원장	5	20.0	—	—	20.0	40.0	20.0	4.2
	사회복지	25	12.0	8.0	16.0	32.0	28.0	4.0	3.7
	직업재활	15	13.3	13.3	13.3	26.7	20.0	13.3	3.7
	특수교육	1	—	—	—	100.0	—	—	4.0
	기타	5	—	20.0	—	40.0	40.0	—	4.0
거주 지역	서울	9	11.1	11.1	22.2	22.2	22.2	11.1	3.7
	경기·인천	9	22.2	—	11.1	33.3	33.3	—	3.6
	경상권	11	—	9.1	—	45.5	36.4	9.1	4.4
	호남권	6	—	—	33.3	33.3	33.3	—	4.0
	충청권	7	42.9	14.3	14.3	14.3	14.3	—	2.4
	강원도	1	—	—	—	100.0	—	—	4.0
	제주	3	—	33.3	—	33.3	—	33.3	4.0
종사자 수	5인 미만	12	—	8.3	16.7	16.7	50.0	8.3	4.3
	5~10인	24	16.7	12.5	12.5	37.5	16.7	4.2	3.4
	11~15인	3	66.7	—	—	—	33.3	—	2.3
	16~20인	1	—	—	—	—	100.0	—	5.0
	21인 이상	6	—	—	16.7	66.7	—	16.7	4.2
근로 장애인 수	15인 이하	15	13.3	13.3	13.3	33.3	20.0	6.7	3.5
	16~20인	13	23.1	7.7	15.4	23.1	30.8	—	3.3
	21~25인	6	16.7	—	33.3	50.0	—	—	3.2
	26~30인	5	—	20.0	—	40.0	20.0	20.0	4.2
	31인 이상	7	—	—	—	28.6	57.1	14.3	4.9
훈련 장애인 수	15인 이하	21	9.5	9.5	14.3	42.9	23.8	—	3.6
	16~20인	10	20.0	10.0	10.0	50.0	10.0	—	3.2
	21~25인	2	—	50.0	—	—	—	50.0	4.0
	26~30인	1	100.0	—	—	—	—	—	1.0
	31인 이상	2	—	—	—	—	100.0	—	5.0
근로 및 훈련 장애인 수	10인 이하	0	—	—	—	—	—	—	—
	11~20인	9	11.1	—	11.1	33.3	44.4	—	4.0
	21~30인	15	20.0	13.3	26.7	20.0	13.3	6.7	3.1
	31~40인	13	15.4	7.7	—	53.8	15.4	7.7	3.7
	41인 이상	9	—	11.1	11.1	22.2	44.4	11.1	4.3

(10) 현재와 비교하여 훈련장애인의 적정 지원기준에 대한 의견 (다중응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금 관련의견에 관하여 ‘현재와 비교해 볼 때 훈련장애인의 적정 지원기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 현재 인원가중 지원 금액 대비 20~25% 인상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현재 인원가중 지원금액 대비 10~15% 인상 30.0%, 현재 인원가중 지원금액 대비 15~20% 인상 16.7%, 현재 인원가중 지원금액 대비 5~10% 인상 13.3% 순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서울, 경기·인천, 경상권은 20~25%정도 인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호남, 충청, 강원, 제주는 10~15%로 나타났다.

<표 4-43> 현재 지원기준 대비 훈련장애인 적정지원 기준

(단위: n=50, 개소, %)

구분		N	현재 인원가중 지원금액 대비			
			5~10% 인상	10~15% 인상	15~20% 인상	20~25% 인상
전체		33	13.3	30.0	16.7	40.0
담당 직무	생산	1	—	—	100.0	—
	훈련	11	—	54.5	18.2	27.3
	회계	15	20.0	20.0	20.0	40.0
	원장	4	—	—	25.0	75.0
	사무국장	2	50.0	—	—	50.0
관련 전공	사회복지	16	18.8	43.8	12.5	25.0
	직업재활	9	—	11.1	22.2	66.7
	특수교육	1	—	—	100.0	—
	기타	4	25.0	25.0	—	50.0
거주 지역	서울	5	—	20.0	40.0	40.0
	경기·인천	6	16.7	16.7	16.7	50.0
	경상권	10	—	20.0	20.0	60.0
	호남권	4	25.0	50.0	—	25.0
	충청권	2	50.0	50.0	—	—
	강원도	1	—	100.0	—	—
	제주	2	50.0	50.0	—	—
종사자 수	5인 미만	9	11.1	22.2	33.3	33.3
	5~10인	14	14.3	35.7	14.3	35.7



구분		N	현재 인원가중 지원금액 대비			
			5~10% 인상	10~15% 인상	15~20% 인상	20~25% 인상
	11~15인	1	—	—	—	100.0
	16~20인	1	—	—	—	100.0
	21인 이상	5	20.0	40.0	—	40.0
근로 장애인 수	15인 이하	9	11.1	22.2	33.3	33.3
	16~20인	7	—	28.6	28.6	42.9
	21~25인	3	—	33.3	—	66.7
	26~30인	4	25.0	50.0	—	25.0
	31인 이상	7	28.6	28.6	—	42.9
훈련 장애인 수	15인 이하	14	7.1	35.7	21.4	35.7
	16~20인	6	—	50.0	16.7	33.3
	21~25인	1	—	—	100.0	—
	26~30인	0	—	—	—	—
	31인 이상	2	50.0	—	—	50.0
근로 및 훈련 장애인 수	10인 이하	0	—	—	—	—
	11~20인	7	14.3	28.6	14.3	42.9
	21~30인	6	—	16.7	50.0	33.3
	31~40인	10	10.0	30.0	10.0	50.0
	41인 이상	7	28.6	42.9	—	28.6

(11) 현재와 비교하여 근로장애인의 적정 지원기준에 대한 의견 (다중 응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금 관련의견 사항에 관하여 ‘현재와 비교해 볼 때 근로장애인의 적정 지원기준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 현재 인원가중 지원 금액 대비 20~25% 인상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현재 인원가중 지원 금액 대비 15~20% 인상이 26.7%, 현재 인원가중 지원 금액 대비 5~10% 인상 20.0%, 현재 인원가중 지원 금액 대비 10~15% 인상 16.7%, 기타 3.3% 순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지역 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서울, 경기·인천, 경상권은 20~25%정도 인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호남, 충청, 강원, 제주는 10~15%로 나타났다.

<표 4-44> 현재 지원기준 대비 근로장애인 적정지원 기준 유형

(단위: n=50, 개소, %)

구분		N	현재 인원가중 지원금액 대비				기타
			5~10% 인상	10~15% 인상	15~20% 인상	20~25% 인상	
전체		33	20.0	16.7	26.7	33.3	3.3
담당 직무	생산	1	—	100.0	—	—	—
	훈련	11	—	36.4	36.4	27.3	—
	회계	15	33.3	13.3	20.0	33.3	—
	원장	4	—	—	25.0	50.0	25.0
	사무국장	2	50.0	—	—	50.0	—
관련 전공	사회복지	16	25.0	31.3	31.3	12.5	—
	직업재활	9	22.2	—	11.1	55.6	11.1
	특수교육	1	—	—	100.0	—	—
	기타	4	—	—	25.0	75.0	—
거주 지역	서울	5	20.0	20.0	20.0	40.0	—
	경기·인천	6	—	33.3	—	66.7	—
	경상권	10	10.0	—	50.0	30.0	10.0
	호남권	4	50.0	—	25.0	25.0	—
	충청권	2	50.0	50.0	—	—	—
	강원도	1	—	—	100.0	—	—
	제주	2	50.0	50.0	—	—	—
종사자 수	5인 미만	9	44.4	11.1	22.2	22.2	—
	5~10인	14	7.1	21.4	35.7	28.6	7.1
	11~15인	1	—	—	—	100.0	—
	16~20인	1	—	—	—	100.0	—
	21인 이상	5	20.0	20.0	20.0	40.0	—
근로 장애인 수	15인 이하	9	33.3	11.1	33.3	22.2	—
	16~20인	7	28.6	—	42.9	28.6	—
	21~25인	3	—	33.3	—	66.7	—
	26~30인	4	—	50.0	25.0	—	25.0
	31인 이상	7	14.3	14.3	14.3	57.1	—
훈련 장애인 수	15인 이하	14	21.4	28.6	14.3	35.7	—
	16~20인	6	—	—	100.0	—	—
	21~25인	1	100.0	—	—	—	—
	26~30인	0	—	—	—	—	—
	31인 이상	2	—	50.0	—	50.0	—



구분	N	현재 인원가중 지원금액 대비				기타
		5~10% 인상	10~15% 인상	15~20% 인상	20~25% 인상	
근로 및 훈련 장애인 수	10인 이하	0	-	-	-	-
	11~20인	7	42.9	14.3	-	42.9
	21~30인	6	-	-	66.7	16.7
	31~40인	10	20.0	20.0	20.0	40.0
	41인 이상	7	14.3	28.6	28.6	28.6

(12) 적절한 지원기준과 지원금 단가

지원단가를 조정할 경우 훈련장애인과 근로장애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n=10)만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지원을 위한 기준 및 단가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지원 기준의 측면에서는 훈련과 근로 상태의 구분 없이 모든 대상에 동등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6건(10명중 6명)로 가장 많았다. 반면 대상의 조건에 따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는데, 훈련/근로 상태(10명중 2명)나 장애 정도(10명중 1명), 훈련/근로 상태 및 장애 정도(10명중 1명)로 조사되었다. 지원금 단가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단가 향상(11명중 10명)을 요구하였다.

<표 4-45> 적절한 지원기준과 지원단가

(단위: 개소, %)

구분	내용	빈도(비율)
지원 기준	훈련/근로 상태 구분 없이 지급	6(60.0)
	훈련/근로 상태로 구분	2(20.0)
	장애 정도로 구분	1(10.0)
	훈련/근로 상태 및 장애 정도로 구분	1(10.0)
	전체	10(100.0)
지원금 단가	단가 향상 필요	10(90.9)
	현재 수준이 적절함	1(9.1)
	전체	11(100.0)

3.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결과

1)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기준에 따른 예산지원 현황에 대한 의견

전반적으로 현장 전문가들은 지원예산이 적어 자부담비가 많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및 일부 관리비로만 충당이 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100%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낮은 지원 금액은 장애인의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매출이 많은 기관의 경우, 운영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지원받는 관리운영비는 가장 최소한의 경비로 쓰이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밖에 이 사업은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지침이 내려져 오고 있으나,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해 지자체별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리운영비의 단가가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타 지역에 비해 적게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전문가 1: 관리운영비 운영 현황은 시하고 중앙정부에서 받은 돈이 일 년에 사용한 게 2,700만원 정도 되요. 현재 민간은 없고, 자부담이 7,000 얼마예요. 따지고 보니까 27% 대 73%,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관리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관리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수입금에서 추가로 제가 제시하는데..

현장 전문가 2: 너무 작는데 줄어도 느낌도 안 오고요. 너무 작는데 조금 올랐다고 해서 퍼센트가 막 올랐다고 해서 놀라지도 않고요.

현장 전문가 3: 보건복지부 지침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주면, 저희는 그걸 바탕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거기(지자체 지침)에는 아예 관리 운영비가 올해는 얼마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저희는 그 상위가 복지부이기 때문에, 복지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들어오면, 공공요금 이외에는 거의 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세, 수도세 내고 나면은 운영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 작업장의 목적을 수행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 전문가 5: 관리운영비 지원은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요금 및 일부 관리비로만 충당이 되고 있으며, 전기요금도 실질적으로는 100% 충당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렇다보니 사업 수익금(자부담)으로 제세공과금 및 공공요금을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장 전문가 6: 매출이 많은 곳은 자부담이 많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출이 많기 때문에 시설 요금이 자부담이 85%, 보조금이 15%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관리운영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관리운영비라는게 솔직히 인건비 빼고 남은게 다 운영비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익금 남은 것 십 몇억에서 인건비 빼고 나면 거의 6~7억을 운영비로 넣는 거예요. 이걸 당연히 줘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더 많고 잘 되는 곳은 운영비가 더 많이 부족할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 관리운영비는 기본 시설이 설치되고 운영되는데 가장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설의 특성상 더 많이 관리운영비가 들면 더 많은 수입금을 내야 되는거고.. 우리가 거주시설은 아니잖아요.

2) 관리운영비 지출상의 어려움 및 기준액 개선방안

관리운영비 지출상의 어려움으로는 지출항목에 대한 공무원의 인지 부족, 지출항목의 제한 등을 언급하였다.

(1) 지출항목에 대한 공무원의 인지 부족

지자체의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로 인해 지자체 지침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담당자 극히 드물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관리운영비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실수를 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였다.

현장 전문가 3: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납품나가서 식사할 때, 관리운영비 상에서는 못 쓰게 되어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자체에서는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 몰라요.

근데 7~8천 만원 받아 전기세로 내고 나면 (납는 지원금) 없거든요. 휴여 남게 되면, 수용비로 나갔어요. 처음에는 수용비로 쓸 수가 없다고 되어 있었다가 작년인가부터 관리운영비에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썩으면 쓰면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예 쓰지도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항목에 넣는거예요.

근데 지금 보호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10명을 데리고 있는 곳이나, 30명을 데리고 있는 곳이나 관리 운영비를 똑같이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보면, 관리운영비 지출 상에 근로 사업장 30명이기 때문에 기준 단가가 높은 거잖아요. 보호 작업장이 10명부터 시작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걸 그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정원 기준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면 보호 작업장의 정원이 30명이 있는 곳이 있고, 40명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각 시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저희는 정원이 30명이고, 원래 기준이 30명인데, 똑같은 30명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관리운영비 상에 너무나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는 처음에 뭐 근로 작업장과 보호 작업장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장 시설에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도..

(2) 관리운영비 지출항목의 제한

또한 관리운영비에 따른 지원항목들이 제시되어 있는 것 외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관리운영비 중 이용장애인 보호비의 경우, 시설 이용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만약 이용장애인들의 건강검진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사용될 경우,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일부지역은 가능함).

현장 전문가 1: 솔직히 말하면 훈련장애인같은 경우 건강에 더욱더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용장애인 보호비에 모든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비용도 얼마안해요. 한 2만원? 대부분 고지혈증에 식단조절이 안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운영비와 사업비를 구분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따지고 보면 여기는 시설 관리비고 여기는 관리 운영비예요. 항목을 연구해가지고 운영비와 사업비를 좀 구분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현장 전문가 5: 관리운영비의 항목이 단순한 세금 및 공공요금의 납부 등으로만 제한된 것이 아닌 직원의 복리후생 등으로 다양하게 전용이 가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3) 관리운영비 기준 개선 의견

관리운영비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의견으로는 먼저, 근로작업장의 경우, 30인 기준, 보호작업장의 경우, 10인 기준이 아닌 정원으로 두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10명이 이용장애인을 고용하거나 30명의 이용장애인을 고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관리운영비가 동일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용장애인의 정원보다는 현원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정원은, 직업재활시설이 처음 설치되고 운영을 시작할 때,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수를 의미한다.



때문에 현재 인원보다는 정원이 대부분 높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은 동일하게 급여를 받되,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시설 유형을 구분하는 이유는 보호장애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미이며, 근로장애인이 피해가 보지 않는 금액으로 유지하거나 상승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리운영비 개선방안으로 관리운영비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관리운영비가 단순히 세금 및 공공요금 납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직원의 복리 후생 등 좀 더 포괄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관리운영비와 사업비를 구분하여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016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지원항목을 보면 이용장애인 보호비, 직업훈련비, 직업적응훈련비, 생산활동지원비는 사업비이며, 직원교육훈련 여비는 관리운영비에 속하는 것으로 모호함이 있어 적절한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장 전문가 6: 정원으로 가면 안 되고 현원으로 가야 되요. 시설 신고할 때 정원은 누가 정하는가? 대부분 시설이 정해요. 지금 대전의 모 시설은 정원이 120명이고, 정원이 90명인데, 실제로 시설에 다녀보면 스물 몇 분 밖에 안 계세요. 왜 그러냐니깐 언젠가는 들어올 것이라는 가정하게 측정했다고 답하더라고요.

중증하고 경증을 왜 구분하냐면 (중증장애인이) 90% 이상이에요. 직업적으로 중증 장애인 위주라는 걸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돼버려요. 또 단가가 다르다는 것은 중증환자에게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의미예요.

3) 근로사업장 지원에 대한 의견

근로사업장의 지원이 더 많은 것에 대한 의견으로는 근로와 보호는 동일하게 급여를 받되, 구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분을 해야 하는 이유는 보호장애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미에서이며, 단, 근로장애인이 피해가 보지 않는 금액으로 유지하거나 상승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

다.

현장 전문가 2 : 근로사업장의 책임과 역할에 비하면 보호사업장이 못 따라가죠. 단, 하는 일이 머리가 좀 아프고 근로사업장이 더 받는게 인정합니다. 지금보다 보호작업장 더 많이 주면 됩니다. 지금 보호작업장을 더 주고 있죠. 근로사업장 따로 인센티브를 많이 주셨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굳이 묻는다면 근로작업장 지원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란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면 보호작업장에 더 많이 주면 됩니다.

현장 전문가 6 : 보호작업장을 위해서라도 물론 다 똑같습시다만, 대부분 중증이지만 근로장애인이라든 훈련장애인을 구분하는 건 의미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 단가가 다른거 저는 반대해요. 같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 지원 단가는 시설이 그렇게 안 써서 그렇지 시설관리 운용비고 인원 가중비용은 장애인을 위해서 쓰라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게 훈련생이든 근로장애인이든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단,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을 구분할 지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을 저는 더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4)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 구분에 따른 예산지급 기준에 대한 의견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의 구분에 대한 의견으로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현장전문가들은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의 구분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은 입장이 많았다. 그 이유로는 서비스를 똑같이 받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근로와 훈련의 임금 차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차이는 인정하되, 보호작업장의 인건비가 상승되어야 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구분에 대한 의견으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즉, 지원금에 대한 차별을 두자는 의미이며, 직업재활시설의 대상은 주로 중증이며,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단, 같은 시설에서 같은 서비스를 받는 경증과 중증이 있는 경우, 경증과 중증장애인이 동일하게 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현장 전문가 1 : 훈련생과 근로장애인을 구분하는 것은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구분하는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로장애인이 일을 다 해버리면 그 임금 어떻게 다 할거예요? 다 훈련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관리운영비 기준에서 근로인하고 훈련인인 구별은 좀 안했으면 해요. 종사자 그 증원해주는 것도 근로인, 보호작업장 그게 있어요. 20여명의 생산판매관리 기준에 맞으면, 근로인 20명을 채울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설은 근로인 2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상황에서) 직원이 한명 나가면 그만큼 또 힘들어 지기 때문에 20명을 어떻게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서 별로 그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로장애랑 훈련장애인 구분을 해서 관리운영비 주는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 전문가 2 : 그니까 서비스는 똑같이 주되 지원금을 받을 때는 중증이 아무래도 경증보다는 훈련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좀 차등을 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원짜리 줄거 여긴 오백원짜리 주자 이런게 아니고 똑같이 서비스를 주자는 의미예요.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라도 부담은 또 줄여야 되니까.

현장 전문가 6 : 중증하고 경증을 왜 구분하냐면, (중증장애인이) 90% 이상이에요. 또 단가가 다르다는 것은 중증환자에게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의미예요.

5) 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지원에 대한 개선 사항

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지원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먼저, 현재 제시된 관리운영비 항목 내에서만 사용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닌 관리운영비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내역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를 들어, 현장전문가 1은 이용장애인 건강검진이 일부 지역에서만 지원되는 것을 언급하고, 이를 개선하여 전국적으로 이용장애인 이용비로 장애인 건강검진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밖에 근로장애인 퇴직금이나 4대 보험은 국가측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 혼재되어 있는 항목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현장 전문가 1 : 저는 모든 이용장애인에게 반드시 정기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관에는 이제 근로장애인 20명과 훈련장애인 20명이 있어요. 근로장애인은 직장 때문에 정기검진을 일년에 한번 받습니다. 그런데 훈련장애인은 못받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그냥 다 같이 자부담을 합니다. 솔직히 훈련장애인같은 경우 더욱더 건강에 취약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용장애인 보호비에 모든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도록하는 비용을 추가했으면 해요. 비용도 얼마 안해요. 한 2만원? 대부분 식단 조절이 안되서 고지혈증에 걸리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장애인 분들의 건강을 사전에 체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 퇴직금이나 사회보험정도는 국가에서 대 줘야되죠. 왜 수익금에서 그분 월급을 뺏어서 내는건데...

현장 전문가 4: 항목 예시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설마다 회계에 쓰는 몫을 생산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다 다른 거 같아요 생산활동지원비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있지만 그 하는 건 다 다르잖아요 쓰기 나름 이잖아요 이거 보면서 항상 느꼈던게 이걸 좀 어느정도 정리를 해주면 회계하는 사람들은 편하겠단. 왜냐면은 그때그때 맞춰서 또 새로운 몫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건지 틀린건지...

현장 전문가 5: 항목의 제한 폐지, 인건비 전용 가능,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현장 전문가 6: 이것도 바뀌야 할게 항목이잖아요. 항목이 섞여 있는데, 이걸 관항목으로 구분을 해줘야해요. 지금 예를 들면 생산활동지원비는 이거는 시설관리비는 사무비예요. 나머지는 다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비예요.

6) 기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인원배치 기준을 충족하여 종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여 충원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토대로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수준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자체 공무원들의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장 전문가 3: 장애복지사업안에 대해 미처 다 알기도 전에 지자체 공무원의 담당자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현장 전문가 4: 저희가 애쓰고 만드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 지침도 애써서 만든건데, 그거를 지자체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냥 권유가 아닌 꼭 이대로 해주길 바라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다는 못 지키더라도 80프로는 해줄 수 있게끔 뭔가가 조항이 생긴다면, 지자체에서도 그 정도는 최소한 맞춰주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중앙환원이 안된다면 그런거라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4. 소결

본 연구에서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예산지급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전국 직업재활시설 총 560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설문에 충실히 응답한 48개소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설문내용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수입 및 지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금 관련 의견이었다.



예산 수입의 경우, 주로 민간보다는 중앙 및 시도로부터 받은 기관이 많았으며, 특히 인건비에서 중앙 및 시도로부터 예산을 받아 사용한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지출의 경우, 이용장애인 보호비에서 시설 이용장애인 영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관리비로는 공공요금이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직업훈련비의 경우, 직업적응훈련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직업훈련비의 경우, 직업훈련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직원교육훈련비로는 여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생산활동지원비의 경우 제품개발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외의 항목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으로는 회의비, 사회교육행사비, 회의참석비 등 회의와 관련된 항목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설문응답 대상자들은 직업재활시설의 기본지원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였으며,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원가중 지원금 단가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직업재활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예산지급이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으로 구분하여 제공되되, 보호작업장 지원단가 상향조정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고, 훈련장애인과 근로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언급하였다.

FGI는 설문조사에서 다루지 못한 지원금 관련 의견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 결과, 전반적으로 관리운영비에 대하여 금액적으로나 체계적인 면에서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었다. 먼저, 금액적인 면에서는 관리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체계적인 면에서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해 각 지자체별 기준이 달라 지원 기준의 편차가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훈련 및 근로장애인의 구분 혹은 경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의 구분은 차별을 나타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임금에 있어서 차등 지급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론과 FGI 조사에서 나타난 결론은 전반적으로 동일하였으나,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 지원단가와 훈련장애인과 근로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예산지급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제5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급 기준 제시



V.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급 기준 제시

1. 예산지급 항목 개선

1) 현안 분석

직업재활시설의 예산지급 항목은 매년 발간되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각 시설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토대로 각 지역별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급기준’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양적조사 및 질적조사의 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현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용장애인 보호비, 시설관리비, 직업적응훈련비, 직업훈련비, 생산활동지원비, 직원교육훈련 여비, 기타로 구분되어 있는 관리운영비 항목이 적절하지 않다. 지원항목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지원항목명에 따른 세부항목이 구체적이지 않아 직업재활시설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장애인 보호비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주는 “시설 이용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간식 또는 주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장애인의 영양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이용장애인의 건강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르면, 관-항-목-내역이 구분되어 있으며, 직업재활시설의 항목과 달리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시설을 예로 들면 ‘관’과목에서는 사무비-재산조성비-사업비-전출금 등으로 나누어지며, ‘항’과목에서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교육비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이 관-항-목-내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세부내역을 설명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사무비 중심으로 내용을 축약하여 제시함).



<표 5-1>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4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구분)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비
				136	기타운영비	시설직원 상용피복비·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02	재산조성비	21
2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	생계비	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과목					내역	
관	항		목			
		32	교육비	312	수용기관경비	장유비, 월동용 김장비 입소자를 위한 수용비(치약·칫솔·수건구입비 등)
				313	피복비	입소자의 피복비
				314	의료비	입소자의 보건위생 및 시약대
				315	장의비	입소자중 사망자의 장의비
				316	직업재활비	입소자의 직업훈련재료비
				317	자활사업비	입소자의 자활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318	특별급식비	입소자의 간식, 우유등 생계외의 급식제공을 위한 비용
				319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321	수업료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수업료
				322	학용품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용품비
				323	도서구입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도서구입비, 부교재비
				324	교통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대중교통비
				325	급식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326	학습지원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사교육비(피아노교습, 사설학원 수강 등)
				327	수학여행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수학여행비
				328	교복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교복비
		329	이미용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이, 미용비		
		33	○○사업비	330	기타교육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그 밖의 교육경비(학습재료 등)
				331	의료재활 사업비	입소자(재활·물리·작업·언어·청 능)치료비, 수술비용, 의수족 등 보장구 제작수리비 또는 입소자를 위한 의료재활 프로그램비용



과목					내역	
관		항		목		
				332	사회심리 재활사업비	입소자를 위한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333	교육재활 사업비	입소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운영비
				334	직업재활 사업비	입소자를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비
				335	○○사업비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
				.	.	등 전문프로그램이 아닌
				.	.	입소자를 위한
				.	.	프로그램운영비(하계캠프, 방과
				.	.	후 공부방 운영 등)

원칙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은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상위 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외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재활시설 운영자 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은 사실상 복지시설의 세입과 세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준이 되는 법률로서

직업재활시설의 관리운영비 항목과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이용장애인 보호비는 수용기관경비, 의료비 등으로 구분되어 제시되어 있어 차이가 있음을 있다.

2) 대안 제시

양적조사 및 질적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직업재활시설의 관리운영비는 제한적이며, 상위 법과 차이가 있어 직업재활시설 운영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기준을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준하여 새롭게 제시하거나, 별도의 관리운영비 기준을 폐기하고,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준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제3항제1호를 개정하고 아래와 같이 [별표 10]을 신설하여, 직업재활시설의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 인건비와 시설비, 과년도지출 등은 다른 유형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비 과목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표 5-2>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10 개정(안)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사례회의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비
				136	기타운영비	시설직원 상용피복비·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 및 생산활동, 직업훈련, 직업적응훈련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	보호비	주식비, 부식비, 위생, 안전을 위한 비용
				312	피복비	이용장애인의 피복비
				313	의료비	이용장애인의 보건위생 및 건강검진비
				314	직업적응 훈련비	이용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성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
				315	직업훈련비	취업알선비용, 취업과 직접관련된 훈련비용
				316	생산활동 지원비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생산 및 판매비, 홍보비
		32	사업비	321	○○사업비	이용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훈련직종별, 유형별, 개인별로 구분하여 목으로 설정

2. 유형별 예산지원 기준

1) 현안 분석

현재 직업재활시설의 예산지원기준은 크게 시설 유형에 따라 구분되며, 시설당 기본지원금과 이용장애인 1인당 지원되는 금액으로 나누어져 있다. 근로사업장은 시설당 기본지원금은 연간 50,671천원이며, 이용장애인 1인당 660천원이 지원되고 있다. 보호작업장의 경우, 시설당 기본지원금은 연간 15,888천원이며, 이용장애인 1인당 185천원이 지원되고 있다.

근로사업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에 근거하여 최소인원을 근로장애인 30명으로 하고 있으며, 보호작업장은 최소인원을 근로장애인 10명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당 기본지원금은 규모가 크고 인원이 많은 근로사업장에게 더 많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장애인 지원금을 살펴보면, 1인당 지원금액의 기준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근로사업장의 이용장애인에게 보호작업

장 이용장애인에 비해 왜 3배에 가까운 금액을 더 지원해야 하는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2015년 직업재활시설 운영현황을 보더라도 근로사업장이나 보호작업장 모두 중증장애인 비율이 97%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장애인 지원금에 차이를 두어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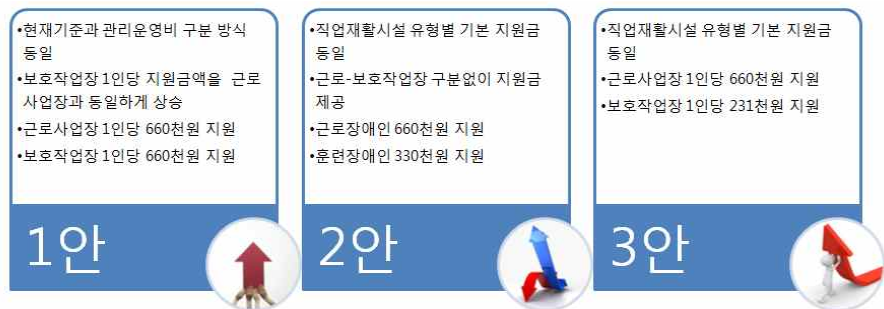
근로사업장 이용장애인들의 월평균 임금수준과 생산력이 더 높다고 가정한다면, 상대적으로 직업적 능력이 낮은 보호작업장의 이용장애인들에게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비용을 더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다. 실제 유럽연합(EU)의 사례를 보더라도,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제한으로 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이 2배 이상 높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고용촉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는 물론 장기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받고 있는 사회적, 직업적 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연구 결과(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0)와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직업훈련, 직업적응, 직업유지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Revell, et al., 1994)는 중증장애인에게 더 많은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과 본 연구의 질적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에 대한 지원금 기준이 낮으며, 중증장애인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2) 대안 제시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통해 개진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현재 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중 시설당 기본지원금은 현재와 같이 유지하고, 1인당 지원금액은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 구분없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은 자칫 차별을 야기할 수도 있고, 훈련장애인과 근로장애인으로 구분하는 것은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만약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금액을 제공하게 된다면, 보다 많은 관리운영비를 받기 위해 직업재활시설 내의 근로장애인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각각의 안을 제시하고, 현재의 기준과 비교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5-1] 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개선안

먼저 1안은 현재 기준과 관리운영비 구분방식은 동일하게 하되, 근로사업장 1인당 지원금액 수준으로 보호작업장의 1인당 지원금액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근로사업장은 관리운영비에 변화가 없으나, 이용장애인이 20인인 보호작업장의 경우, 연간 9,500천원이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표 5-3> 유형별 예산지원 기준 1안

(단위: 명, 천원)

구분		현기준			1안(유형별 동일한 1인당 지원금)			
		기준액	인원	총액(A)	기준액	인원	총액(B)	차이(B-A)
근로사업장	기본	50,671	1	50,671	50,671	1	50,671	0
	1인당	660	30	19,800	660	30	19,800	0
	계			70,471			70,471	0
보호작업장	기본	15,888	1	15,888	15,888	1	15,888	0
	1인당	185	20	3,700	660	20	13,200	9,500
	계			19,588			29,088	9,500

2안은 직업재활시설 유형별 기본 지원금은 동일하되,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을 구분하여 지원단가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다. 즉, 근로장애인은 660천원을, 훈련장애인은 330천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2015년도 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근로사업장의 경우, 전체 이용장애인의 약 90%가 근로

장애인이며, 10%가 훈련장애인이었다. 보호작업장의 경우, 전체 이용장애인의 약 55%가 근로장애인, 45%가 훈련장애인으로 나타나 근로사업장의 경우, 정원이 30명인 시설에서는 1인당 지원액을 훈련장애인과 근로장애인으로 구분하고, 훈련장애인의 지원금을 2배로 높인다고 가정했을 경우, 약 8,910천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용장애인이 20명인 보호작업장에서는 약 5,870천원이 증가하게 되었다.

<표 5-4> 유형별 예산지원 기준 2안

(단위: 명, 천원)

구분		현기준			2안(훈련장애인과 근로장애인)			
		기준액	인원	총액(A)	기준액	인원	총액(C)	차이(C-A)
근로 사업 장	기본	50,671	1	50,671	50,671	1	50,671	0
	근로장애인 1인	660	30	19,800	660	3	1,980	
	훈련장애인 1인				330	27	8,910	
	계			70,471			61,561	△8,910
보호 작업 장	기본	15,888	1	15,888	15,888	1	15,888	0
	근로장애인 1인	185	20	3,700	660	9	5,940	
	훈련장애인 1인				330	11	3,630	
	계			19,588			25,458	5,870

위에서 제시한 1안과 2안은 모두 직업재활시설 유형별 기본지원금은 변화없이 이용장애인 1인당 지원기준을 달리 적용한 것이다.

비록 본 연구는 직업재활시설 운영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1안과 2안에 대해 제시하였지만,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관리운영비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1안과 2안을 바로 적용하기 보다는 운영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운영비 기준점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정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증액 욕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원기준을 준거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중 직업재활시설은 훈련장애인 1인



당 매월 7만원의 훈련수당을 최대 15명 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보험료 포함)는 월 332천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용장애인 15인이 있는 직업재활시설과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인 직업재활시설이 있는 경우,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하면, 직업재활시설은 2,775천원이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인 직업재활시설은 3,984천원으로 거의 1백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달에 10만원 정도 적게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시한다면, 20명이 있는 보호작업장의 경우, 1인당 지원금액을 현재 기준에서 최소 25%이상 상향조정하였을 때, 지원금 총액은 연간 92만원 정도가 증가하게 된다.

<표 5-5> 유형별 예산지원 기준 3안

(단위: 명, 천원)

구분		현기준			3안(보호작업장 1인당 기준액 조정)			
		기준액	인원	총액(A)	기준액	인원	총액(B)	차이(B-A)
근로 사업 장	기본	50,671	1	50,671	50,671	1	50,671	0
	1인당	660	30	19,800	660	30	19,800	0
	계			70,471			70,471	0
보호 작업 장	기본	15,888	1	15,888	15,888	1	15,888	0
	1인당	185	20	3,700	231	20	4,620	920
	계			19,588			20,508	920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예산지급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VI.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실업률은 2배 이상 높은, 상대적으로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예산지원에 있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외국에 비해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많은 편이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은 매년 실시되는 직업재활시설 관련 연구에서 예산확보, 인력증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중증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이거나 경증장애인에 비해 훈련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된다는 연구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재활시설의 유형에 따라 예산을 차등지급할 뿐 다른 기준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업재활시설의 재정을 국고, 민간, 자부담 등으로 구분하여 실제 어느 정도 지원받고 지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며 겪는 예산과 관련된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질적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결과, 직업재활시설에 지원되는 시·도의 지원금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결과 민간자원, 자부담, 기타 국고사업 등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지원금은 매우 부족하며, 보호작업장에 대한 지원금을 근로사업장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관리운영비의 지출항목도 제한적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출인정 범위가 다른 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2. 정책제언

1) 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항목 개선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인터뷰(FGI)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직업재활시설의 관리운영비 항목이 제한적이고 불명확함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관리운영비 항목을 다양화·구체화하여 직업재활시설 운영상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항목을 구분하여 반드시 국고보조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항목을 별도로 지정하고,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자부담 혹은 민간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관리운영비 항목 중 ‘이용장애인 보호비’, ‘직업적응훈련비’, ‘직업훈련비’에 한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이외의 재원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직업재활시설 운영효율화 및 재정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직업재활시설은 현재 전국에 569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통계를 축적하는 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각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제출되는 운영현황 역시 수기로 작업하여 엑셀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직업재활시설은 이용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하여 예산이 집행되고 관리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스템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아 기본적인 데이터 뿐만 아니라 재정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예산에 대한 관리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직업재활시설의 회계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추후 상담 및 훈련일지 등 일반 행정업무에서도 편의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점차 확대·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당장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회보장원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장 우선적이며 기본적으로 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항목을 선정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직업재활시설의 예산지급 적정 기준 마련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유형 중의 하나이나 다른 유형의 시설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다른 복지시설은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로부터 비용을 받거나, 대부분 국고 및 지방비의 지원으로부터 운영된다. 그러나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장애인이 단순히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며, 자체 수익금이 지원예산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른 장애인복지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데에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앞서 제시하였듯이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10을 신설하여 직업재활시설의 운영특성에 합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격이 유사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직업재활시설 지원기준을 근거로 직업재활시설의 관리운영비 기준안을 제시하였으나,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여 적정기준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이정길(2009).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증대방안. 자치발전
- 함영진·김경준·박규범·이영글·이성휘(2012).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재정 및
현황분석 -서울, 대전, 경기를 중심으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행정자치부(2015).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고경환·계훈방(1998).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보장비 산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건연구원
- 윤영진(2006). 지방정부 예산구조 하에서의 사회복지 재정범위에 관한 논고.
한국지방재정논집
- 조윤화 외(2015). 장애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 보건복지부(2016a). 「2016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보건복지부(2016b).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엄홍식(200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하청생산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
개발대학원
- 고용노동부(2015).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 보건복지부 국가복지정보포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공통.
- 서울시 홈페이지(검색일: 2016.11.01.)
- 두산백과(검색일: 2016.10.2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예산지급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부 록



[부록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실태조사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관리운영비 기준을 개선하고 추가항목 및 적정 지원기준액을 제시하고자 실무자들의 의견과 현재 관리운영비 수준과 현황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5장 제33조에 의해 응답자의 신상정보나 의견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해당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다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 : 2016년 10월 24일(월) ~ 11월 4일(금)

□ 연 구 진 : 책임연구원 : 이혜경(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1팀장)
공동연구원 : 김 민(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기획팀 부연구위원)
이수연(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1팀 연구원)

□ 문 의 처 : 이수연(02-0000-0000)

2016년 10월



답례품 수령

■ 수령자 성명(작성 필수) (인) ■ 연락처(작성 필수)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명: 중증장애인지업재활사업 예산지급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연구를 수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연구의 목적은 중증장애인지업재활사업을 수행하는 대표기관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현재 관리운영비 수급여부, 수급수준, 사용실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이며,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구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구에 참여하시기를 동의하시면, 귀하는 성별, 연령, 학력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인 정보작성이 완료되면 귀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과 관련된 귀 기관의 수입과 지출사항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게 됩니다. 재정관련 질문 중 수입은 귀하의 시설에서 시, 도, 중앙정부, 민간으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는지, 경험이 있다면 지원받은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련 질문 중 지출은 귀하의 시설에서 지원금을 지출한 항목에 대한 것으로 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관련 질문은 현재 귀하의 사업장에서 수령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지원금액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물어보고, 보다 효과적인 예산지급 기준마련을 위한 귀하의 의견과 생각을 물어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귀하의 응답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연구는 설문참여자의 이름이나 거주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수익과 지출에 대한 질문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문에 참여함으로써 이해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본 연구에 포함되어 있는 설문들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의 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질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설문을 작성하는 도중 귀하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신체적 혹은 정신적 피로감을 느껴 설문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언제든지 응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설문에 무조건 참여해야 하는 건가요?

귀하의 설문참여는 전적으로 귀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귀하가 설문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결정하였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문에 참여함으로써 인한 혜택이 있나요?

비록 설문에 참여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개인적인 혜택이나 이익은 없지만, 귀하의 설문참여는 현재 많은 중증장애인지업재활시설들이 경험하고 있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실제로 어떠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며, 향후 제도 개선이나 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본인은 위에 언급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언급된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며,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합니다.

참여자 사인 _____



II.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 중 재정관련 사항(수입)

※ 2015년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과 관련하여 2015년 중앙정부 및 시·도로부터 받은 지원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표에서 해당되는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합계는 중앙정부 + 시·도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의미함.

질문 \ 사업	(1) 관리운영비	(2) 인건비	(3) 기능보장
중앙정부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시·도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합계			
질문 \ 사업	(4) 사회적 기업	(5) 기타(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6) 기타 ()
중앙정부	_____만원		_____만원
시·도	_____만원	_____만원	
합계			

- 1-1. 귀 시설은 올해 ‘2016 장애인복지시설안내’에 제시되어 있는 수준과 동일한 금액의 관리운영비(기본 지원금+인원 가중지원)를 지원받으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과 관련하여 2015년 민간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표에 해당되는 질문에 적절히 응답해 주십시오.

(1) 지원받은 금액	_____만원 (총액기준)
(2) 지원 기관명	1. () 2. () 3. () ※ 3곳 이상일 경우, 3개까지만 작성

III.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 중 재정관련 사항(지출)

※ 다음은 귀 시설에서 2015년 회계년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과 관련하여 지출한 지원금 항목에 관한 질문입니다.

※ 시·도, 자부담, 민간, 중증장애인지원직업재활시설사업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자부담은 후원금, 고용장려금, 자체이익금, 법인전입금을 의미합니다.

3. 귀 기관은 2015년에 수령한 지원금으로 귀 시설 이용장애인 보호비를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 보호비는 시설 이용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① 예 (3-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4번으로 이동)

3-1. 해당되는 사용출처와 비중에 대하여 모두 기입하시고, 기타 사용출처가 있으면 직접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이용장애인 영양	시설 이용장애인 건강	시설 이용장애인 위생	기타1	기타2	기타3	
사용출처							
비중(%)							합계 100 %

4. 귀 기관은 2015년에 수령한 지원금으로 시설 관리비를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비는 건물유지비, 냉·난방 연료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오페수 정화시설 운영비, 환경개선 부담금, 화재보험료(대인대물), 상해보험료, 수유비 및 수수료(사무용품비, 인쇄비, 수수료, 퇴직연금수수료 등)를 포함합니다.

① 예 (4-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5번으로 이동)

4-1. 해당되는 사용출처와 비중에 대하여 모두 기입하시고, 기타 사용출처가 있으면 직접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유지비	연료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오페수 정화시설 운영비	환경개선 부담금	
사용출처							
비중(%)							합계 100 %
	화재보험	상해보험	수유비 및 수수료	기타1	기타2	기타3	
사용출처							
비중(%)							합계 100 %



5. 귀 기관은 2015년에 수령한 지원금으로 **직업적응훈련비**를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 직업적응훈련비는 직업생활 이외 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기술, 직장예절 등 직업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성 훈련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① 예 (5-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6번으로 이동)

5-1. 해당되는 **사용출처와 비중**에 대하여 모두 기입하시고, 기타 사용출처가 있으면 직접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훈련비	직업적응훈련비	기타1	기타2	기타3	
사용출처						
비중(%)						합계 100 %

6. 귀 기관은 2015년에 수령한 지원금으로 **직업훈련비**를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 직업훈련비는 근로장애인의 일반사업장으로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취업알선과 직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비용, 취업알선비 등을 포함합니다.

① 예 (6-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7번으로 이동)

6-1. 해당되는 **사용출처와 비중**에 대하여 모두 기입하시고, 기타 사용출처가 있으면 직접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비	취업알선비	기타1	기타2	기타3	
사용출처						
비중(%)						합계 100 %

7. 귀 기관은 2015년에 수령한 지원금으로 **직원교육훈련** 여비를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 직원교육훈련 여비는 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 등을 포함합니다.

① 예 (7-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8번으로 이동)

7-1. 해당되는 **사용출처와 비중**에 대하여 모두 기입하시고, 기타 사용출처가 있으면 직접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비	여비	기타1	기타2	기타3	
사용출처						

비중(%)						합계 100 %
-------	--	--	--	--	--	----------------

8. 귀 기관은 2015년에 지원금으로 **생산활동지원비**를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 생산활동지원비는 제품개발비, 홍보·광고비·물류비, 영업활동비(직업적응훈련시설 제외), 직업재활시설 품목별 협의체 활동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① 예 (9-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10번으로 이동)

8-1. 해당되는 **사용출처**와 **비중**에 대하여 모두 기입하시고, 기타 사용출처가 있으면 직접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개발비	홍보·광고비·물류비	영업활동비	기타1	기타2	기타3	
사용출처							
비중(%)							합계 100 %

9. 귀 기관은 2015년에 지원금을 그 외 기타 항목에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 기타는 위에 언급한 이용장에인 보호비, 시설 관리비, 직업적응훈련비, 직업훈련비, 생산활동지원비, 직업교육훈련 여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의미합니다.

① 예 (9-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10번으로 이동)

9-1. 해당되는 기타 **사용출처**와 **비중**에 대하여 모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1	기타2	기타3	기타4	
사용출처					
비중(%)					합계 100 %



10. 다음은 2015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위해 지원된 예산 중 다음에 제시된 예산항목별로 사용된 비율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항목이 있을 경우 직접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항목명	지원내용	예산항목 구분				합계 (%)
		사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	민간	자부 담	
이용장애인 보호비	시설 이용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100
시설 관리비	건물유지비, 냉·난방 연료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오페수 정화시설 운영비, 환경개선 부담금, 화재보험료(대인대물), 상해보험료, 수용비 및 수수료(사무용품비, 인쇄비, 수수료, 퇴직연금수수료 등)					100
직업적응훈련 비	일상생활훈련비(직업생활 이외 일상생활훈련), 직업적응훈련비(대인관계기술, 직장예절 등 직업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성 훈련 비용)					100
직업훈련비 등	직업훈련비, 취업알선비(근로장애인의 일반사업장에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100
생산활동지원 비	제품개발비, 홍보·광고비·물류비, 영업활동비(직업적응훈련시설 제외), 기타(직업재활시설 품목별 협의체 활동비 포함)					100
직원교육훈련 여비	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 등					100
기타	(직접 기입)					100

※ 각각 지원항목에 따른 합이 100이 되어야 하며, 예산이 사용되지 않은 항목은 '0'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다음은 2015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위해 지원된 예산 중 다음에 제시된 지원항목별로 사용된 비율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항목이 있을 경우 직접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항목명	지원내용	예산항목 구분			
		사·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	민간	자부담
이용장애인 보호비	시설 이용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시설 관리비	건물유지비, 냉·난방 연료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오페수 정화시설 운영비, 환경개선 부담금, 화재보험료(대인대물), 상해보험료, 수용비 및 수수료(사무용품비, 인쇄비, 수수료, 퇴직연금수수료 등)				
직업적응훈 련비	일상생활훈련비(직업생활 이외 일상생활훈련), 직업적응훈련비(대인관계기술, 직장예절 등 직업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성 훈련 비용)				
직업훈련비	직업훈련비, 취업알선비(근로장애인의 일반사업장에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생산활동지 원비	제품개발비, 홍보·광고비·물류비, 영업활동비(직업적응훈련시설 제외), 기타(직업재활시설 품목별 협의체 활동비 포함)				
직원교육훈 련 여비	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 등				
기타	(직접 기입)				
합계(%)		100	100	100	100

※ 각각 지원항목에 따른 합이 100이 되어야 하며, 예산이 사용되지 않은 항목은 '0'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IV.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금 관련 의견

※ 다음은 귀 시설의 기본지원금 및 인원 가중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12. 귀하는 현재 직업재활시설의 기본지원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016년 현재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시설당 기본지원금은 50,671천원이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시설당 기본지원금이 15,888천원입니다.

- ① 매우 적절함 (13번으로 이동)
- ② 적절함 (13번으로 이동)
- ③ 조금 적절함 (13번으로 이동)
- ④ 적절하지 않음 (13-1번으로 이동)
- ⑤ 조금 적절하지 않음 (12-1번으로 이동)
- ⑥ 매우 적절하지 않음 (12-1번으로 이동)

12-1. 기본 지원금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



랍니다.

13. 귀하는 현재 직업재활시설의 인원가중 지원금액이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으로 따로 구분되어 지급되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16년 현재 장애인근로사업장 인원가중 지원금액은 660천원이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185천원입니다.

- ① 매우 적절함 (14번으로 이동)
- ② 적절함 (14번으로 이동)
- ③ 조금 적절함 (14번으로 이동)
- ④ 적절하지 않음 (13-1번으로 이동)
- ⑤ 조금 적절하지 않음 (13-1번으로 이동)
- ⑥ 매우 적절하지 않음 (13-1번으로 이동)

13-1.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귀하는 현재 직업재활시설의 인원가중 지원금 단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16년 현재 장애인근로사업장 인원가중 지원금액은 660천원이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185천원입니다.

- ① 매우 적절함 (15번으로 이동)
- ② 적절함 (15번으로 이동)
- ③ 조금 적절함 (15번으로 이동)
- ④ 적절하지 않음 (14-1번으로 이동)
- ⑤ 조금 적절하지 않음 (14-1번으로 이동)
- ⑥ 매우 적절하지 않음 (14-1번으로 이동)

14-1.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직업재활시설의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중 인원에 따른 가중지원 정책이 개선된다면, 다음 중 어떠한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으로 구분하되, 근로사업장 지원단가 변경없이 보호작업장 지원단가 상향 조정
- ②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으로 구분하되, 근로사업장 지원단가 하향조정 및 보호작업장 지원단가 상향조정
- ③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 구분없이 근로사업장과 동일한 지원단가 적용
- ④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 구분없이 보호작업장과 동일한 지원단가 적용

16. 귀하의 경험으로 판단해볼 때,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직업생활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정도 인지 숫자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경증장애인에 비해 중증장애인은 _____배 정도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

17. 지원단가를 조정할 경우, 훈련장애인과 근로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시설당 기본지원금 외 인원 가중지원은 (훈련중증장애인 수 × 지원단가A) + (근로장애인 수 × 지원단가B)로 산출하여 지원

- ① 매우 적절함 (17-1번으로 이동)
- ② 적절함 (17-1번으로 이동)
- ③ 조금 적절함 (17-1번으로 이동)
- ④ 적절하지 않음 (17-3번으로 이동)
- ⑤ 조금 적절하지 않음 (17-3번으로 이동)
- ⑥ 매우 적절하지 않음 (17-3번으로 이동)

17-1. 현재와 비교해 볼 때 훈련장애인의 적정 지원기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 인원가중 지원금액 대비 5~10% 인상
- ② 현재 인원가중 지원금액 대비 10~15% 인상
- ③ 현재 인원가중 지원금액 대비 15~20% 인상
- ④ 현재 인원가중 지원금액 대비 20~25% 인상
- ⑤ 기타 ()

17-2. 현재와 비교해 볼 때 근로장애인의 적정 지원기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훈련장애인 대비 30% 수준
- ② 훈련장애인 대비 40% 수준
- ③ 훈련장애인 대비 50% 수준
- ④ 훈련장애인 대비 60% 수준
- ⑤ 기타 ()

17-3. 귀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원기준과 지원단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록 2] FGI 질문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예산지급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FGI 질문지

☐ 일반적 사항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연 령	만 ()세
근무기관		직위(직급)	
근무부서		근무기간	()년 ()개월

※ 인터뷰 전 설문지 및 보이스리코더의 상태를 점검 · 확인한다.

I. 도입

○ 라포 형성

- 인터뷰에 대한 소개
- 날씨나 주변 환경 등 자유로운 이야기로 분위기 조성

○ 인터뷰 목적 소개

- 연구(조사) 목적에 대한 설명
- 인터뷰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

○ 연구 참여 동의서 및 심층인터뷰 참여자 인적사항

- 인터뷰 내용 녹음에 대해 허락 요청
- 비밀보장 및 인터뷰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에 대한 설명
- <수당지급조사>와 <인터뷰의 일반적 사항> 작성 후 질문내용으로 들어감

II. 질문내용

연구 및 조사 목적, 조사 내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직업재활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각 시·도를 통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각 시·도별 지원액의 차이가 존재하고, 시설 운영에 있어 예산부족을 어려움으로 제기하고 있는 바, 중앙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연구를 수행함.
- 본 연구의 조사 목적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적 기관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관리운영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관리운영비 수준을 확인하여 추가 항목 개발 및 적정 지원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임.
- 따라서 본 FGI에서는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기준에 따른 예산지원 현황, 관리운영비 기준,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의 구분, 관리운영비 기준 개선,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구분	개방형 질문	
예산지급 기준 관련	1.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기준에 따른 예산지원 현황	- 종사자 관리운영비 지원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지원부족에 따라 발생하는 운영상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2. 관리운영비 지출상의 어려움 및 기준액 개선방안	- 관리운영비의 지출상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예 제한된 항목, 항목 변경의 어려움, 항목 수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사항 등 - 관리운영비 기준액에 대한 의견(기본지원금, 인원지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 기준액 변경 필요 여부, 개선필요시 그 이유와 새로운 기준
	3.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 구분	- 근로사업장의 지원이 더 많은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까?
개선 방안	4. 근로장애인/훈련장애인/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 구분	-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으로의 구분 /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의 구분”의 적절성은 어떠합니까? - 적절한 기준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지원에 대한 개선 사항	- 관리운영비의 개선 사항은 무엇입니까? - 관리운영비 이외 시설 운영상 개선사항은 무엇입니까?
	6. 기타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예산지급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발 행 일 : 2016년 12월

발 행 인 : 황 화 성

발 행 처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Tel. 02-3433-0600

Fax. 02-412-0463

<http://www.koddi.or.kr>

편집·인쇄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ISBN 978-89-6921-229-0 93330

※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무단 복사하는 것을 금합니다.